

제12호
2017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자(題字)

1790년(정조 14) 간행한 <무예도보통지> 언해본의 글자체를 활용하였음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목차

제 12호

2017년

수원지역 전설에 나타난 역사, 윤리, 그리고 현실 인식 1 최원오	1
수원농악의 두레굿과 걸립굿의 상관성 37 김헌선	37
수원 지역 제조업체의 공간자료 분석을 통한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 진단 63 조성철	63
수원시 주택가격 변동과 인구이동의 인과관계 분석 99 권성문 · 김리영	99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 수원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 123 현대용 · 정도효	123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경관협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147 진정은 · 정수진	147
수원시 공원 · 녹지 서비스 분석 및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 169 송원경	169
수원시민의 친환경교통 정책 수용에 대한 질적 연구 189 김규환 · 이석진	189

수원지역 전설에 나타난 역사, 윤리, 그리고 현실 인식

최원오*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미투리 장수로 떼돈> |
| 2.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 양상과 개별 작품의 내용 분석 | (3) <이름난 의원(간촌 이생원 이야기)> |
| 1) 명칭에 관련된 전설 | (4)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된다> |
| (1) <꽃메(되) 전설> | (5) <벼락과거> |
| (2) <교귀정(交龜亭) 전설> | (6)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
| (3) <배다리(古索) 전설> | (7) <송충이를 깨물다>, <소나무마다 콩 볶음이> |
| (4) <통수바위> | (8) <볼기 한 대로 사형 집행> |
| (5) <팔 부자집 거리> | 3. 수원지역 전설에 나타난 역사와 윤리, 그리고 현실 인식 |
| (6)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 | 4. 맺음말 |
| 2) 인물에 관련된 전설 | |
| (1)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 | |

요 약

본 논문은 수원지역의 전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역사, 윤리, 현실 인식은 전설 속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설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kols415@hanmail.net, Tel: 062-520-4122

1-5권에 수록된 15편이다. 편수는 적지만, 수원지역의 역사나 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15편 중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의 명칭에 관한 전설은 6편이고, 역사적 인물이나 수원지역에 거주한 실존 인물 등에 관한 전설은 9편인데, 전반적으로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다룬 것들이 많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효행, 품행 등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부와 지위 등을 욕망하는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 정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은 대부분 배경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효성, 품행 등에 대한 윤리 인식 또한 배경화되고 있다. 이는 수원지역의 전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현실 인식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나 윤리가 수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주제어 : 수원, 전설, 역사 인식, 윤리 인식, 현실 인식, 정조, 효행, 한국구비문학대계

1. 머리말

민간에 구비 전승되는 설화를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신화나 민담에 비해 지역 전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 중에는 아예 주목 받지 못한 지역의 전설도 많다. 수원지역의 전설이 그렇다. 수원은 지리학적으로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는 곳이자, 역사적으로 정조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던 곳이다. 따라서 여느 지역에서나 전승되는 전설도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전설도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론(試論) 삼아 수원지역에는 어떤 전설들이 전승되어 왔고, 그 작품들의 개별적 특징은 무엇이며, 역사, 윤리, 현실 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원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구비설화에 대한 전문적 조사는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사업 때에 이뤄졌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5』가 그것인데,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¹⁾ 그런데 이외에는 학문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자료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집에 수록된 전설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자료집에는 총 44편의 구비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설로 간주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이 자료집에 수록된 제보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소개하고, 좀 더 체계적 분류는 이어서 진행한다.²⁾

번호	제목	자료 성격	제보자	조사일시
1	꽃매(매) 전설	자연 지명 관련	정일환(남, 72)	1980.10.4
2	교귀정(交龜亭) 전설 ³⁾	자연 지명 관련	상동	상동
3	배다리(古索) 전설	마을 지명 관련	상동	상동
4	미투리 장수로 떼돈	실존 인물 관련	이병원(남, 70)	상동
5	통수바위	자연 지명 관련	상동	상동
6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	인물 관련	상동	상동

1) 成耆說,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1-5: 경기도 수원시, 화성군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37-144쪽

2) 심사자 중의 한 분께서 “자료의 단순 열거와 제시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부족하고 해석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역사와 윤리,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수원지역의 전설이 지니는 명칭과 인물의 전설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수원지역 전설(엄정한 학술적 조사와 채록 결과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각각의 전설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그것을 귀납화하여 역사와 윤리의 관점에서 집약한 후, 다시 이런 관점이 현실 인식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 심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을 폐기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아직은 수원지역 전설에 대한 초기 연구의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자의 의견은 기초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수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번호	제목	자료 성격	제보자	조사일시
7	이름난 의원	실존 인물 관련	상동	상동
8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인물 관련(정조)	상동	상동
9	벼락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	인물 관련(정조)	안익승(남, 62)	상동
10	송충이를 깨물다	인물 관련(정조)	상동	상동
11	소나무마다 공복음이	인물 관련(정조)	상동	상동
12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댕다	실존 인물 관련	상동	상동
13	팔 부자집 거리	지명 관련(정조)	상동	상동
14	볼기 한 대로 사형 집행	인물 관련(정조)	상동	상동
15	대항교(大皇橋)라는 이름	건물 지명 관련	상동	상동

이상에 제시한 총 15편의 전설 자료를 ‘대상(對象)’에 따라 분류하면, 자연물이나 인공물 명칭에 관련한 전설이 6편, 인물과 관련한 전설이 9편이다.⁴⁾ 전승 편수로는 인물 관련 전설이 다소 많고, 명칭에 관련한 전설은 그에 비하면 다소 적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 편수의 양이나 순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한국구비문학대계 1-5』가 수원 지역의 구비설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자료집에 수록된 구비설화의 경우, 총 4명의 제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15편의 전설 자료만으로도 수원지역 전설의 양상을 어느 정도는 간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수원지역에서만 포착될 수 있는, 즉 수원의 지리·역사적 특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상들이 이들 전설 자료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 3) 『한국구비문학대계 1-5』에는 ‘교구정(交龜亭) 전설’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교귀(交龜)’는 “조선 시대에, 감사(監司)·수군통제사·병마절도사가 바뀔 때에 부신(符信)을 서로 주고받던 일. 부신의 꾸밈새가 거북처럼 생겼다.”로 풀이되어 있고, 수원지역 전설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교귀정(交龜亭) 전설’로 수정하여 제시한다.
- 4) 한 심사자가 “수준 이하의 구술자가 구술한 자료도 ‘민속학’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구비설화는 적극적 화자(유능한 화자)가 구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소극적 화자(유능하지 못한 화자)가 구술한 것도 모두 중요하다. 모든 구비설화는 화소(話素)의 차원에서, 또는 변이 과정을 살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전설은 ‘역사의 이야기화’라는 관점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갈래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 자료를 보조 자료로 검토하는 게 요청된다. 그런데 한 심사자가 실록 외에 여러 고전에서 전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문학의 관점에서 전설을 분석하는 연구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기왕에 나와 있는 수원의 전설 관련 글이나 책”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현재 수원지역 전설 조사 자료로써 가장 신뢰할 만한 학술자료집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이다. 아울러 “수원지역에서의 전설의 기능과 역할, 지역 전설의 보편성과 특수성, 습합 양상이나 지역적 독자성” 등도 고찰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기보다는 후속 연구주제라고 판단된다.

2.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 양상과 개별 작품의 내용 분석

1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구비문학대계 1-5』에 수록된 수원지역 전설은 크게 명칭 관련, 인물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분류에 근거하여 각각의 자료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명칭에 관련된 전설

명칭에 관련된 전설은 땅 이름, 바위와 같은 자연물의 이름, 다리와 같은 인공물 등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꽃메(뫼) 전설>, <교귀정(交龜亭) 전설>, <배다리(古索) 전설>, <통수바위>, <팔 부자집 거리>, <대황교라는 이름> 등이 이에 속한다. 각 전설의 개요를 먼저 소개한 뒤에, 내용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1) <꽃메(뫼) 전설>

수원시 화서동에서 2키로 떨어진 곳에 꽃뫼 또는 꽃미라고 불리는 데가 있다. 그곳에 한 훌륭한 처녀를 둔 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 집의 머슴 총각한테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녀는 부모한테 면목도 없고 인근에 소문도 나고 하여 산에 가서 자살을 했다. 부모가 딸이 죽은 곳에 묘를 써 주었는데, 그 몇 해 후에 딸의 묘에서 꽃나무가 자랐다. 그래서 처녀의 효성과 덕망이 그 꽃으로 대신해서 나와 부모들에게 공을 갚은 것이 아닌가 하여, 그 후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꽃뫼라고 부르게 되었다.⁶⁾

상전의 딸을 그 집의 남자 하인(때로는 동네 총각, 하급 관리)이 욕정을 품고 겁탈하려는 얘기는 신화나 전설 등에 흔하게 나오는 소재다. 예컨대, 제주도의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하인 정수남이 주인집 딸 자청비를 겁탈하려다가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에 소설이나 한시, 민요 등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한 <아랑전설>에서는 밀양부사의 딸 아랑이 통인(通人)의 겁탈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보인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혼자 힘으로 극복하지만, <아랑전설>에서는 아랑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신화와 전설이라는 갈래의 특성에 기인한다. 신화는 주인공의 주체성을 드러내어 그 행위의 숭고성을, 전설은 그 주체성의 좌절을 드러내어 그 행

6) 成耆說, 1981, 위의 책, 37-38쪽

위의 비극성을 말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갈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화는 주인공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전설은 주인공이 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꽃메(뫼) 전설> 역시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처녀가 머슴 총각한테 모욕을 당한 후 자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의 겁탈에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는 전설에서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은 때론 사회적 보상을 받기도 한다. 앞에서 든 <아랑전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죽임을 당한 아랑은 신임 부사가 도입할 때마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기 위해 부사의 면전에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신임 부사는 혼절하여 죽고 만다. 마침내 담대한 신임 부사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아랑이 원혼이 되어 신임 부사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보자.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해소하기 위해 원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젊은 나이에 죽어서? 자신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전자에 비해 후자는 그럴 듯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만족할 만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랑이 정절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중세의 서사문학에서 여성이 겁탈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서 원혼으로 출현하는 과정은, 이런 이야기의 사건을 구성하는 공식문법과도 같으며, 그 문법의 기본 전략은 여성의 순결을 증명하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꽃메(뫼) 전설>의 기본 전략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아랑전설>에서 주인공은 원혼이 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대신, <꽃메(뫼) 전설>에서는 주인공이 자결한 곳에 묘를 썼는데, 그 묘에서 꽃나무가 자랐다고 하여, 주인공의 정절을 보다 신비화하고 있다. 아랑이 관(官)의 힘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 순결을 인정받았다면, 이 전설의 주인공은 초자연적 힘에 의해 그 순결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중세의 여성들에게 가해진 정절은 남성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한 사회적 제재 및 보상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 점에서 <꽃메(뫼) 전설>은 중세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소용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정절 이데올로기는 수용하되, 그 보상은 초자연적 수단에 근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천리(天理)의 지점에서 정절 이데올로기가 인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꽃메(뫼) 전설>의 여주인공이 보여준 정절 의식에 더하여 부모에 대한 효성을 강조한 것은, 이 전설이

7) “무덤에서, 그래가지구 그 자기에, 그 효성과 덕망을 에 그 꽃으루 대신해서 [조사자 : 네.] 그 부모네들에 공을 갚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인저 꽃뫼 꽃뫼 인제 이레구.” 成普說, 1981, 위의 책, 38쪽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성을 간접적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꽃 무덤과 화산(花山)이 엄연하게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음성적 유사성을 매개로 하여 볼 때, 화산에 덧입혀져 있는 정조의 효성이 이 전설의 역사적 배경 지식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2) <교귀정(交龜亭) 전설>

북지(北池) 위에 조구정 또는 교구정이라고 불린 방죽이 있었다. 방죽 뒤에는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용두암(龍頭岩)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용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 북지를 막아 방죽을 만들었다. 그 후에 용씨가 용두암에 와서 터를 정하고 살았다. 그런데 용씨가 방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살림이 어려웠는데, 방죽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진사도 하고 발전도 많이 했다. 지리(地理)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⁸⁾

위의 전설은 내용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방죽을 누가 만들었는지, 용씨가 그 방죽을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설의 제목이나 내용에 교귀정(交龜亭)이 등장하는데, 왜 교귀정인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전설의 본래 특징이 대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 전설은 용두암과 교귀정 방죽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용두암이 있는 곳에 터를 정하고 살았던 용씨가 풍수지리상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즉 이 전설은 용두암 터가 풍수지리상의 이점이 있는 곳임을 먼저 설명한 뒤에, 실제로 용씨의 사례를 들어 그곳이 발복지(發福之地)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풍수설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풍수설화와는 달리 이 전설은 역사적 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물론 그 역사적 지식이 전설의 문면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않은 채 파편적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만 말이다. 교귀정 방죽과 교귀정(현재의 영화정이 위치한 곳에 있었던 정자)이 그에 해당한다. 교귀정 방죽은 현재 ‘교귀정 방죽, 또는 일왕저수지’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방죽은 1795년에 수원 화성(華城)을 축조하고, 그 주변에 입주해온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방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방죽이 만들어지고부터 쌀을 1천 곡(斛)이나 더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해서 만석거(萬石渠)라고 개명해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⁹⁾ 한편,

8) 成耆說, 1981, 위의 책, 39-40쪽

9) 현재 만석거 표지판에는 1만석을 더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석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장차 현릉원(顯隆園)에 배알하려고 어가가 화성(華城)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관개(灌漑)하는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못을 파면서부터 1

교귀정¹⁰⁾은 이 방죽의 남쪽에 있는 정자인데, 이 정자에서 조선시대에 신구(新舊) 관리들이 인수인계를 하며 부신(符信: 모양새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함)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방죽의 본래 이름보다는 교귀정이 방죽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대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교귀정이 정조에 의해 영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음에도, 현재 교귀정이 방죽과 연동되어 불리고 있다는 것은 ‘교귀정’이 여전히 역사적 배경의 요소로써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귀정(交龜亭) 전설>에는 다양한 역사적 지식이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직접 평가의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교귀정 방죽보다는 용두암에 더 초점을 두었으므로 그 역사적 지식의 배경화가 한층 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풍수설화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개입됨으로써 발복이 된다는 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교귀정(交龜亭) 전설>에서의 이런 특이한 전개방식은 역사적 지식과 풍수지리 지식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다리(古索) 전설>

배다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의 수원시 고색이다. 배다리 일대를 옛날에는 장지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에 없는 지명이다. 옛날에 장지리라는 곳의 흙이 질었다. 얼마나 질었는가 하면, 그곳에서 시집을 오는 사람은 3년이 되어야 그 흙이 신발에서 떨어진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배다리를 배를 타고 건너서 왕래하는 것보다는 다른

년이 지나지 않아 앞 들판에서 수확한 것이 이미 1천 곡(斛)이 되었다.” 하고는, 인하여 정자[亭]를 ‘영화(迎華)’로, 야(野)를 ‘관길(觀吉)’로, 평(坪)을 ‘대유(大有)’로, 도랑[渠]을 ‘만석(萬石)’으로 각각 명명하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행궁(行宮)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년) 1월 20일(정묘)

「만년제(萬年堤)를 완성하였다. 만년제는 현릉원(顯隆園)의 동구(洞口)에 있다. 상이 연신에게 이르기를, “이번 화성(華城)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몇 일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 방죽물을 저장해두면 현릉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이것으로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長安門) 밖에 만석거(萬石渠)를 만들고 여의동(如意洞)을 쌓고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한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을 쌓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 신칙하고 내탕전(內帑錢) 수만 금을 내려서 결심하고 시행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으나 일의 시작을 함께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리하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 것이다.” 하였다.」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년) 4월 27일(신유)

현재의 구전되고 있는 전설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조해보면, 애초에는 ‘방죽’(또는 복지)으로 불리다가 ‘만석거’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석거의 남쪽에 교귀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석거’와 함께 ‘교귀정 방죽’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10) 교귀정은 경북 문경시 문경을 상초리 문경새재도립공원 내도 있다.

곳으로 돌아서 가라고 말하였다. 그 전에 배다리로 가는 곳에 냇물이 있었는데, 그 냇물을 황구지천(黃口池川)이라고 했다. 그곳의 흙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리로 가지 말고 좋은 길로 가라.”, “배다리로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곤 했다. 세상에 근거 없는 얘기는 없다.¹¹⁾

위의 전설은 ‘배다리’라는 곳의 지형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지형과 관련된 전설은 대개가 그 형세에 주목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특이하게도 이 전설은 흙의 질긴 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얼마나 질긴가 하면, 그곳에서 시집을 온 여자가 있는데 3년이 되어서야 신발에 묻은 흙이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찰진 흙이라도 신발에 묻어 있는 흙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배다리 일대의 흙이 얼마나 질렸는가를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도 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배다리’는 한자로 표현하면 주교(舟橋)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총 25건의 배다리 기사가 검색되는데, 특히 정조와 관련된 대목이 주목을 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고, 1년에 한 번씩 묘를 찾았다. 그때마다 주교를 설치하느라 민폐(民弊)를 상당히 끼쳤던 듯하다. 그래서 그 민폐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주교지남(舟橋指南)』이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즉 주교지남을 만들어서 민폐를 덜어주는 배다리 제도를 법제화하였던 것이다.¹²⁾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교 설치와 관련한 민폐이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배다리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조의 현릉원 행차를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주교 설치를 위해 동원

11) 成者說, 1981, 앞의 책, 41-42쪽

12)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봄가을로 능원(陵園)을 배알할 적에 나루를 건너야 할 때를 만나면 선창에서 물을 건너는 데에 쓰이는 크고 작은 선박의 숫자가 4, 5백 척에 달하므로, 서울과 지방에서 배를 찾아 구하다 보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뺏사람들이 받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으로 옮긴 뒤로는 해마다 한 번씩의 행행에 나루를 통해 건너야 했으므로, 이에 성상께서 뺏사람의 폐단을 깊이 진념하시어 특별히 배다리[舟橋]의 제도를 만듦으로써 배를 찾다니는 일은 영원히 혁파하고 단지 경강(京江)의 큰 배들만을 가져다가 연결시켜 교량을 만들어 놓으니, 폐단은 사라지고 일은 간단해졌으며, 공력이 줄고 비용도 적어져서, 실로 이것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도구인지라 이에 영구한 법으로 삼는 바이다.」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년) 1월 11일(을사)
「배다리[舟橋]의 제도를 정하였다. 상이 현릉원(顯隆園)을 수원(水原)에 봉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할 차비를 하였는데, 한강을 건너는 데 있어 옛 규례에는 용배[龍舟]를 사용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여 배다리의 제도로 개정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그 세목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상의 뜻에 맞지 않았다. 이에 상이 직접 생각해내어 주교지남(舟橋指南)을 만들었다.」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년) 7월 1일(기묘)

되어야 했고, 그로 인한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는 그런 역사적 지식은 배경화되어 버린 채, 오직 땅이 질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좋은 길로 가라’고 하거나, 아예 그 의미를 확장하여 ‘배다리로 가지 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4) 〈통수바위〉

수원시 연무동(練武洞)과 조원동(棗園洞)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여 있다. 연무동과 조원동에 각각 큼직한 바위가 솟아 있고, 두 바위 간의 거리는 1키로 정도이다. 연무동에 있는 바위는 할애비통수바위라고 하고, 조원동에 있는 바위는 할미통수바위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이렇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 여자는 조원동 바위에 남자는 연무동 바위에 백일치성을 드리기로 했다. 부부는 백일치성을 드리는 동안 서로 만나지 말기로 약조했다. 다만 통소를 불어 서로가 무사한지는 알리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어 통소를 불 기운조차 없었다. 남편이 통소를 처량하게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남편은 백일을 채워 치성은 드려야겠다고 하여, 곧바로 아내에게 가보질 못하고 날마다 대답 없는 통소만 불 뿐이었다. 드디어 남편이 백일치성을 드리고 아내에게 가보니, 아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연무동의 바위를 할애비통수바위, 조원동의 바위를 할미통수바위라고 하였다.¹³⁾

〈통수바위〉는 앞에서 살펴본 ‘용두암’ 명칭의 유래에 대한 전설과 동종에 속한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두암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듯이, 부부의 기자와 관련하여 연무동과 조원동에 솟아 있는 바위들에 특정한 명칭이 부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 마을에는 기자석(祈子石) 신앙과 관련한 증거물이나 그와 관련한 전설이 다수 전승되어 왔다. 그리고 왜 기자와 관련하여 돌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돌에 내재된 생생력(生生力)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통수바위〉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통수바위〉에는 동종 전설들이 보여주는 보편성도 내재되어 있지만, 이 전설만이 갖고 있는 특이점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첫째, 자식이 없던 부부가 연무동과 조원동에 솟아 있는 바위들에 기자치성을 드렸다고 했는데, 본래부터 이 바위들이 기자치성의 대상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지 기자치성과 같은 민간의 신앙적 지식과 연동되어 연무동과 조원동에 솟아 있는 바위들이 선택되었을 뿐이라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이것은 〈통수바위〉 전설의 지향점이 기자치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자치성과 바위의 연관성은 보편성에 기댄 설

13) 成耆說, 1981, 앞의 책, 50-52쪽

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얘기를 의도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그 ‘의도’는 둘째로 지적될, 기자차성의 대상이 복수(複數)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종의 전설에서 기자차성의 대상이 되는 기자석은 단수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한 대상에 부부가 합심하여 기자차성을 하는 게 이치에 맞지, 각각 다른 대상에, 그것도 각각 다른 마을에 위치하여 있는 기자석에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기자차성의 서사치고는 어딘가 유기성이 결여된 느낌을 준다. 오히려 서로 떨어져 위치해 있는 바위들에 남녀의 명칭이 붙여졌다면, 그것은 애뜻하게 그리워하되 서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남녀 애정과 이별의 서사에 더 부합한다.¹⁴⁾ 따라서 <통소바위>는 ‘기자차성의 서사’ 및 ‘부부(또는 남녀) 애정과 이별의 서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설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그 바위들이 기자차성의 바위로 불리지 않고, 부부의 명칭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은 그 점을 반증해준다.

한편, 이러한 해석에다가 극적 비극성을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남편이 연무동의 바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결부시켜 보면, 이 전설에서도 역시 역사적 지식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자리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무동 부근에 등장대(東將臺), 즉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전쟁을 대비한 군사 훈련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평민 남성들의 경우, 아내와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감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 사건도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런 이별과 그로 인한 그리움이 이 전설의 정조를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기자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애뜻한 부부의 이별과 그리움으로 끝맺고 있는, 이 전설의 뒤틀린 서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5) <팔 부자집 거리>

나라에서 수원성을 쌓았는데, 황량하여 겨우 900호 정도만 성 안에 살았고, 삼괴와 평택 등 성 밖에는 만 몇 천 호가 살았다.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살지 않으니까, 도시가 발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시를 번성시키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팔 부자(八富翁: 여덟

14)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충남 금산의 <통소바위>라는 전설이다. <디지털논산문화대전>에 의하면, 이 전설은 봉사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http://no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nonsan&dataType=01&contents_id=GC02002161

15)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본래는 지소동(紙所洞)이었다. 그런데 1949년에 행정구역 명칭을 개편하면서, 일본식 이름이었던 지소정(紙所町)을 연무동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 부근에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등장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명의 부자)를 선출해서 수원성에 와서 살게 했다. 이 사람들은 수원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금의 소화초등학교 위가 팔 부잣집이 있었던 거리다. 현재 팔 부잣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하나 남아 있다. 그곳을 지금은 북수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보시동이라고 했다. 팔 부자가 살던 동네라서 보시동이란 이름이 생기지 않았는가 한다.¹⁶⁾

수원 화성은 정조가 처음부터 계획하여 설립한 증세도시다. 우리나라의 증세 역사에서 도시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설계하여 만든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수원 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옛날이나 요즘이나 계획도시를 만들었을 때, 인구 유입의 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팔 부잣집 거리>는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형성된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만들었는데,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도시가 발전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에서 여덟 명의 부자를 뽑아 화성에 살게 하였다는 내용은, 그런 필요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정조는 수원 화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였던 듯하다. 화성 유수에게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을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을 보면 말이다.¹⁷⁾ 그러나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위의 전설에서와 같은 구체적 일들이 시행되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 전설 역시 정조와 관련한 역사적 지식은 배경화한 채, 전국에서 뽑은 여덟 명의 부자가 살았던 곳이라서 ‘팔부자거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든지, 그 후의 행정구역상 명칭인 보시동(布施洞)이란 이름 역시 그에 근거하여 작명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가려면 육로로든지 수로로든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황교(大皇橋)라는 다리가 있었다. 당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 비슷하게 여겨 하대를 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대황교라는 이름을 함부로

16) 成耆說, 1981, 앞의 책, 75-77쪽

17)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특별히 전지와 백성을 떼어준다. 성첩이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戶戶富實 人人和樂]’의 여덟 글자이다. 잘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하는 중이다.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방법이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군항곡(軍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耗穀)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년) 1월 29일(경오)

쓸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번에 사신이 오면 그것을 책망하려고 베풀고 있었다. 그리고 있는 판인데, 우리나라의 사신이 중국에 도착하여 보니, 마침 중국 임금의 어머니가 죽어 상(喪)이 났다. 우리나라 사신은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해 간 상옷을 입고 곧바로 조문을 하니, 중국에서는 ‘이미 일 개월 전에 우리 임금의 어머니가 죽을 걸 알고 상옷을 지어 가지고 왔구나. 성의도 성의이거니와, 이 얼마나 미래사를 잘 아는 것인가? 저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여, 우리나라 사신을 오히려 잘 대접하였다. 우리나라 사신은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왔다.¹⁸⁾

위 전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리 명칭의 유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왜 특정의 다리에 ‘대황교’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전설은 대황교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하나는 이인담(異人譚)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원의 지역적 자부심이라는 관점이다. 이 중 어느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

전설에서 ‘이인’은 보통 사람과 신의 중간적 지점에 위치하는 자격으로써 등장하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대체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서 빛을 발한다. 과거사를 알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미래를 알아내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이다. 과거사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에, 어떤 식으로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이인담에서 ‘이인과 미래사 예언’은 사건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 이 전설에서도 조선의 사신은 중국 임금의 어머니가 한 달 후에 죽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상복을 준비해 간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속국으로 여겼던 조선이 ‘대황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그것을 빌미로 조선 사신을 책망을 할 작정이었는데, 한 달 후를 예견한 조선 사신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대접을 잘 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만 보면 이 전설은 ‘대황교’를 사건의 배경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오히려 ‘상복 준비’와 관련한 조선 사신의 이인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전설에는 두 번째 관점 역시 만만찮게 드러나 있다. 대황교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역인 현릉원의 부속 건물 중의 하나이다. 대황교는 사사로이 붙여진 명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붙여진 명칭인 것이다.¹⁹⁾ 그러니 중국에서 그 명칭을 문제

18) 成善說, 1981, 앞의 책, 87-88쪽

19) 「수원 유수 조윤대(曹允大)가 능원(陵園)의 북쪽 산기슭 밖에 대황교(大皇橋)를 세웠다고 아뢰니, 【경비(經費)는 전(錢) 1만 9천 냥 영이고, 다리의 길이는 1백 척이고, 너비는 20척이며, 높이는

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왕을 칭하는 나라인 조선에서, 황제를 칭하는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문제 삼았다든지, 또한 그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였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史實)인지, 사실(事實)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전설에서는 무명의 조선 사신이 보여준 이인적 면모로 무마가 되었고, 그 이름의 다리,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황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결과적으로는 수원지역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 간 사신의 이인적 면모와 황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황교’라는 이름의 병존을 통해, 한편으로는 이인담의 면모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원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인물에 관련된 전설

수원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명칭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전설에서 역사적 지식이 배경화되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물에 관련된 전설에서는 어떤 양상이 드러나고 있을까? 앞서와 같이 한 작품씩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

수원 북문 밖에 영화동(迎華洞) 또는 역말이라고 하는 마을 뒤에 조그마한 능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데, 거문고 모양이다. 그 능선을 넘어 가면 조원동 쪽에 갓모 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 밑에 우성하[또는 우성위]라는, 백제 부마(駙馬)가 살았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들판 이름을 ‘우성하 들’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 터에 기와 장이 있다. 우성하는 나라의 부마였으니까,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에 흉년이 몹시 들었는데,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했다. 우성하가 동냥을 줄 양식이 없다고 하자, 중은 목이 마르니 물이나 한 접시 달라고 했다. 우성하가 ‘물이 쌀보다 더 귀하다.’고 했다. 그러자 중이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아주 물을 풍족하게 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물이 적습니까?’라고 물었다. 우성하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을 가져오느냐?’고 하자, 중은 거문고 같이 생긴 산의 중간을 끊어서 도랑을 치면 관교[광교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얼마든지 이곳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하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중의 말대로 거문고 같이 생긴 산의 중간을

11척이었다.]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시상하였다.’ 『순조실록』 5권, 순조 3년(1803년) 5월 21일(갑인)

끊었다. 지금도 그 끊은 자리가 보인다. 그러나 물은 우성하가 있는 곳까지 오지 않았다. 우성하의 들판이 있는 곳이 관교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풍수학상으로 거문고 혈(穴)을 끊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성하는 거문고 혈을 끊었기 때문에 그만 멸망하고 말았다(청중의 반응: 아무리 흥년이 들었다고 해도 동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니까, 중이 거문고 혈을 끊도록 나쁘게 일러주고 간 것이다).²⁰⁾

〈장자못전설〉의 변형에 해당하는 전설이다. 〈장자못전설〉은 인색한 장자가 중의 시주를 거절하였다가 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었는데, 위의 전설 역시 우성하라는 사람이 중의 시주를 거절하였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전설은 여기에 단혈전설(斷穴傳說)의 내용이 겹쳐져 있다. 단혈전설은 자연 지형이 사람이나 국가 운수를 결정한다는, 말하자면 풍수지리 신앙과 관련되어 형성된 이야기인데, 이에 속하는 어느 전설이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혈을 끊어 중국엔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 전설에서도 우성하가 중의 말을 곧이듣고 거문고 혈을 끊었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에 등장하는 우성하(또는 우성위)는 백제의 부마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광교산 및 조원동 마을과 관련하여 우성위라는 인물이 또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성위는 구전에 의해서만 인식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에 살펴보게 될 〈미투리 장수로 떼돈〉이나 〈이름난 의원〉, 〈벼락과거〉 등의 전설에서, 역사적으로 저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수원지역 내에서는 부자, 이인, 행운아로 유명하게 된, 어떻게 보면 구전에 의해서 기억되어야만 할 인물들을 다수 언급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런 전설의 방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기억되었는가? 그 점에서 우성위는, 수원지역 전설 전승담당층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상기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구전의 자장 안에서 계속해 기억되었어야 할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 필요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역 유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배려일 것이다. 청중의 반응에서 확인되듯이, 우성하는 가문의 상황이기 에 곡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 한 접시 정도의 구걸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는 장자못전설이나 풍수전설 등의 구조를 통해 부가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부합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담아낸 전설이라고 하겠다.

20) 成耆說, 1981, 앞의 책, 52-54쪽

(2) <미투리 장수로 떼돈>

울전동(栗田洞)에 사는 ○석훈(錫勳) 씨의 조부(祖父)에 대한 이야기다. 석훈이 할아버지가 여름에 산에 가서 이슬이 많이 내린 풀을 한 짐 베어다가 마당에 뿌리고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모(庶母)가 아침을 가져다주는데, 자기한테는 보리죽을 주고, 자기가 데려온 아들(18살)한테는 보리밥을 주었다. 석훈이 할아버지는 서모가 데려온 아들이 자기랑 동갑인데다가, 아침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았음에도 보리밥을 주고 자기한테는 보리죽을 주자 화가 나서는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느냐’며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서모가 ‘너는 이것만 먹어도 좋은 일이지 무슨 투정을 하느냐’며, 석훈이 할아버지의 머리고챙이를 움켜쥐고서 빨래방망이로 등을 때렸다. 화가 난 석훈이 할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수원 시내에 있는, 예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알게 된, 소 장수 집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고 돈 삼백 냥을 빌려달라고 했다. 석훈이 할아버지는 남대문시장(신창안)으로 가서 삼백 냥으로 미투리를 모조리 매입하였다. 그리고는 원산으로 가서 미투리를 팔아 천 냥을 벌었다. 이어서 천 냥 어치 속곡 배를 매입하여 수원에 와서 팔아 삼천 냥을 벌었다. 그 당시에 전라도 해안지방으로 호열자(虎烈刺)가 창궐하여 수의로 쓰기 위한 삼베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석훈이 할아버지는 소 장수에게 삼백 냥과 이자를 갚고, 아버지에게 드릴 술과 고기를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꾸짖지도 않았다. 또한 어린 아들(석훈이 할아버지)이 나가서 장사하는 것에도 일체 관계를 안 했다. 그 후 석훈이 할아버지는 보은에 가서 대추를 있는 대로 모두 매입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기미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만주에서 좁쌀 무역을 많이 해 왔다. 그렇게 해서 수원군 일왕면에서 두 번째 부자가 되었다.²¹⁾

<이름난 의원>과 함께 수원지역에 실존하였던, 그리고 그 후손이 실존하여 있는 인물에 대한 전설 중의 하나이다. 인물 전설의 경우, 대개는 ‘역사적으로 이름난 인물, 또는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과 연동되어 얘기되는 인물’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전설은 매우 특이하다. 수원지역 인물전설의 특징적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자신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일상적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을 전설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역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묵시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에서 우성하가 거부(巨富)였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부

21) 成耆說, 1981, 위의 책, 43-50쪽

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대상이었다면, 〈미투리 장수로 떼돈〉에서는 그런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부로써 얘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수원지역 사람들의 경제자본에 대한 가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조선후기 박지원의 한문단편 중의 하나인 〈허생전〉에서 허생이 매점매석(買占賣惜)의 방법으로 일시에 많은 돈을 벌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 전설의 주인공인 ‘석훈의 조부’도 미투리, 베, 대추 등을 매점매석하여 거부가 되고 있는데, 전설은 그 과정을 아무런 부정적 시선을 개입시키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설명한다. 매점매석은 자본시장 체제를 혼란시키는 위법 행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제적 자수성가의 시선으로써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납득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아직 그 자본시장 체제가 체계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완비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수원은 정조가 계획적으로 설계한 도시였고,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는 점에서, 일찍이 수원은 경제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다소 성숙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전설에는 조선후기에서 근대로의 격변 과정에서 수원지역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경제적 관점이 잘 내재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격변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지식도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3) 〈이름난 의원(간촌 이생원 이야기)〉

상광교동(上光教洞)에 사는 정광현(鄭光鉉)의 할아버지가 이인으로 이름났다. 연세 많은 노인네들은 지금도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이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었다고 본다. 어떤 일이고 하니, 하광교에 흥씨 네들이 살았는데, 어떤 댁에서 부인이 배를 짜다가 배가 고파지니까 밭에 있는 수수를 털어먹고는 체했다. 부인이 관격(關格: 먹은 음식이 갑작스럽게 체해 대소변도 잘 보지 못하고 정신을 잃는 것)이 되어 거의 죽게 되었다. 사람들이 정 생원에게 가서 묻자, 정 생원은 ‘베 흠이불에 부인을 뉘어놓고 장정 넷이 사방에서 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라.’고 처방을 한다. 그러자 부인의 병이 나았다. 또 한 번은 한 유수(留守)가 집이 서울인데, 수원에 도입하여 올 때에 자기 아버지가 따라가겠다고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그런데 유수의 아버지가 친구도 없고, 바깥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보니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몸도 아프게 되었다. 유수가 약을 해 먹였는데, 도무지 낫지를 았았다. 그래서 유수가 정 생원이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정 생원에게 보내 무슨 약을 쓰면 나올지 알아오라고 했다. 정 생원은 환자의 상태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종이에 글자 두 자를

써서는 유수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 종이쪽지에는 귀향(歸鄉)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유수가 아버지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더니, 아버지의 병이 자연스럽게 나아졌다.²²⁾

재야에 숨어 있는 명의에 대한 전설은 조선 전후기, 특히 후기의 야담집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선 이전의 상황을 알려줄 만한 문헌이 없기에,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명의, 술사 등 이인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이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기이(奇異)’에 대한 관심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조선후기와 근대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 관심이 얼마정도였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설화들을 ‘기이’의 자장 안에 끌어 들여 소개하고 있을 정도다.²³⁾ 따라서 근대 시기의 민간 이인에 대한, 위의 전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설은 기이의 전통뿐만 아니라, 조선후기부터 이어져 온 명의담의 전통 속에도 놓여 있다. 상식적으로 명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명의가 보통의 의원은 알아내지 못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에 합당한 치료약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있는 명의에 관한 전설이 조선후기의 명의담의 한 계통으로써 전승되어 왔다. 즉 치료약을 제시하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도 과학적 진단이 아닌 여러 이치를 헤아려 내린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어찌어찌 행동하라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흔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들 위주의 처방약을 써준 다든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위의 전설에서 ‘정광현의 조부’도 환자의 병세만을 전해 듣고, 왜 그런 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이치를 헤아려 본 뒤에, 지극히 일상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말하자면 특별한 명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쫓다〉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를 쫓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전혀 앞뒤 근거도 없고, 문헌에 기록된 것도 없지만,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구전되어 온 것은 틀림없다. 수원 도성에서 남쪽으로 30리 밖에 사는 한 ‘젊은 사람’이 수원 도성의 기방(妓房)에까지 와서 술을 먹었다. 그런데 술을 먹고 한잠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보니 아버님 제삿날이었다. 당시에 제사는 보통 닭 울기 전 열두 시가 좀 지나서 지냈다. 양반집의 자손이라

22) 成善說, 1981, 위의 책, 54-57쪽

23) 최원오, 2010, 「이야기의 서승(書承)에 대한 근대적 관심과 기록정신」, 『동아시아고대학』 제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두루마기에 갓 쓰고 완전히 행장을 갖추고 놀러왔는데, 시간을 보니 이미 밤 10시 반이나 11시였다. 행장을 다시 갖추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친기(親忌)를 지내지 않으면 동네에서 불효자 소릴 듣고 쫓겨나야 했다. 큰일이다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밤중에 누가 보겠냐 싶어서 바지저고리 바람으로 그냥 뛰어갔다. 그 사람은 12시가 다 되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겨우 제사를 지냈다. 그 시절엔 갓 안 쓰고 두루마기를 안 입었으면 발가벗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쁜 수원사람, 인색한 수원사람, 경우가 밝은 수원사람, 셈을 따지는 걸 분명히 하는 수원사람’ 하는 데에 결부가 되어 가지고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서울에서 한강 나루를 건너는데, 뱃사공이 열 명 이상 손님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운행했다. 때문에 빨리 온 손님들은 배가 운행될 때까지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예사였다. 그럴 때에 ‘나, 수원서 왔소.’ 하면 뱃사공이 그 사람을 바로 건네주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산소를 수원에 썼기 때문에, 수원사람을 괘시했다가는 큰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도 ‘나, 수원사람이오.’라고 속이고서는 한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 욕은 수원사람이 다 먹었다. 또 삼남지방에서 과거를 본다, 불일을 보러 간다 하면서 서울엘 가려면 떡전거리 병점에서 자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곳에서 술 먹고, 노름하고, 계집질하다가 다 털리고, 또 그로 인해 싸움이 생기면 수원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판에 어찌지 못하고 도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고서 자기가 노름하고 색시한테 돈 다 털린 얘기는 안 하고, ‘아이고, 수원 그놈들 깡쟁이, 그놈들한테 나 털리고 왔다.’고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결부되어 ‘수원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²⁴⁾

‘수원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속담의 유래와 그에 관한 세평을 내용으로 한 전설이다. 그러나 속담을 소재로 한 전설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원지역에 거주하였던 무명의 인물과 관련한 인물전설이기도 하다. 전설 중에는 속담과 그에 결부된 인물을 소재로 한 전설이 거의 드물다는 점에서 <수원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특이한 전설로 취급될 수 있다.

<수원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속담의 유래가 된 인물에 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생겨난 속담이 어떻게 약의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수원사람에 관한 세평이 어떻게 수원사람 전체에 대한 세평으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담의 유래는 어떤 수원사람이 부친의 기일을 깜박 잊고서 기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뒤늦게 기일인 걸 알아채고 제대로 옷차림

24) 成耆說, 1981, 위의 책, 71-75쪽

을 하지도 않은 채 집으로 뛰어갔다는 사건에 있다. 이야기의 전개로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러한 속담이 만들어졌을 법하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사람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속담으로 확대되면서, 마치 수원사람들을 무도하고 방자하며 얽치없으며 셈만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 전설의 화자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든 두 가지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수원이 삼남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유숙해야 했던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여객(旅客)들을 위한 유흥 환경을 적절하게 갖추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여객 중의 일부는 유흥을 즐기다가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지방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여객의 일탈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수원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곳이라서, 그 때문에 수원사람들이 특별하게 비호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외지인들이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여 수원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방자하게 굴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건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점에서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뺀다>는 수원사람들의 표면적 방어 의식기제가 작동되어 있는 전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면적 방어 의식기제의 이면에는 경제적 자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했던 지난한 삶들의 과정, 정조의 특별한 관심과 비호를 받으며 지내야 했던 중세의 특정 정치 환경²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으려는, 수원사람들의 또 다른 방어 의식기제가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벼락과거>

'간촌 이생원에 벼락과거'라고 하는 말이 있다.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이름을 현릉원이라고 했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했다. 그래서 정조는 자기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를 추존하려고 했으나 절대로 추존해서는 안 된다는 선왕의 유지도 있었고, 또한 대신들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기에 아들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정조가 사복 차림으로 아버지의 능이 있는 화성군 태안면 안현리 일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일을 하고 있

25) 다음의 기사는 이런 점을 유추해보게 한다. 「수원부 성역(城役)을 총리(總理)한 대신 채제공(蔡濟恭)에게 유시하였다. “이번에 화성(華城) 백성들에게 햇수를 늘려 급복(給復)해 주는 것과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는 교지를 내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경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에 유수(留守)와 상의해서 즉시 효유(曉諭)하기도 하고 더러 나눠주기도 하도록 하라. 그리고 현릉원(顯陵園)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성곽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경이 유수와 함께 가서 전교(傳敎)의 본뜻을 하나하나 효유해 주도록 하라.”」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년) 윤2월 16일(무술)

어서 길도 물을 겸하여 같이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이런 저런 말을 나누었다. 정조가 모르는 척하며 아버지의 능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농부가 '보아하니 당신은 선비가 틀림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면서, 뒤주대왕이신 애기능이다'라고 답했다. 정조는 농부가 뒤주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애기능이란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마치 자신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듯하여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애기 끝에 농부에게 공부를 좀 했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글을 좀 읽기는 하였지만 매번 낙방을 했다고 답했다. 정조는 지금 오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라는 방이 붙었더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길 권하였다. 정조는 수원에만 과거 시험을 붙이고, 논제를 '어느 간촌 이생원과 어느 선비와의 대화'로 제시하였다. 농부는 정조의 말을 믿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자기 나름대로 자초지종을 적어냈다. 그 결과 농부 혼자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래서 '간촌 이생원에 벼락과거'라고 하는데, 그 후손이란 분도 없고, 간촌이란 곳도 없고, 그저 그런 얘기만 떠돌고 있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후 농부는 능참봉이라는 벼슬자리를 받아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정조)이 능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와서 수원 행문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임금은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모질게 주룩주룩 쏟아지자 '아, 우리 아버님은 한(寒) 데서,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계실 터인데, 참 저거한 일이로구나.' 하며 나졸을 시켜 능참봉이 사랑방에 불이라도 켜 놓고 있으면 되거니와, 그렇지 않고 잠을 자고 있거든 당장 잡아오라고 하였다. 정조는 이런 날엔 능참봉이 자기 마음만큼만 관심을 좀 갖고서 능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나졸이 능에 가보니까, 사랑방에 불을 켜 놓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복을 입고 묘 앞에 비를 맞으며 엎드려서 있더라고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은 능참봉의 행동이 자기 생각과 똑같다고 여겨지자 기분이 좋아서 관복을 하사하고, 계급을 올려 승진시켰다. 그렇다면 능참봉은 왜 그렇게 묘 앞에 엎드려 있었는가 하니,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중이 동냥을 달라고 하자 동냥을 주니, 중이 '모월 모일 모시에 불길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예언을 하였는데, 마침 모월 모일에 임금이 능에 행차하였다. 그래서 능참봉은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에 비가 왔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러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능참봉은 묘에 나가서 엎드려 있다가 화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당하였다.²⁶⁾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뛰다〉가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속담의 유래와 관련한 무명인물을 소재로 하였듯이, 위의 전설 역시 '간촌 이생원에 벼락과거'라

26) 成耆說, 1981, 앞의 책, 58-63쪽

는 속담의 유래와 관련한 무명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설 중에는 임금의 미복 차림으로 궁궐 밖을 잠행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선비의 딱한 신세를 듣고, 그 사람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그런데 위의 전설에서처럼 선비가 임금(정조)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고, 그 결과 선비(농부)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다는 내용은 드물다. 이는 아무래도 수원지역의 전설에 정조와 관련하여 얘기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생겨난 지역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 ‘지역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전설의 구조면에서 그렇다. 정조의 효행담과 무명 선비의 행운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효행담이나 행운담이나 독립설화의 유형으로써 전승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전설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독립설화의 유형들이 서로 결합되어 한 편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효행이나 행운 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정조의 효행담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무명 선비의 행운담에 초점이 있는 것일까? 보기에 따라서 정조의 효행담일 것도 같고, 무명 선비의 행운담일 것도 같다. 문제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전설의 전면에 부각되느냐에 따라 다른 하나는 배경담으로 전락되는 것인데,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경담으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행담은 정조가 워낙 효행으로 유명한 임금이기도 했거니와 역사적으로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었으니 이야기의 전면에서 후퇴되기가 어렵고, 행운담은 피지배계층 또는 전설의 전승담당층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쉽게 공명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그 전면에서 후퇴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자면, 무명 선비의 행운담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수원지역 전설은 대체적으로 실제의 역사를 배경화하여 그에 대한 문학적 진실이나 흥미를 주장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전설의 경우는 당연히 문학적 흥미 쪽에 초점을 두고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즉 익히 알려진 정조의 효행담을 매개삼아 무명 선비가 우연한 기회에 출세하였다든지, 또는 우연한 시주나 선행이 발단이 되어 미래에 겪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든지 등의 내용을 흥미 위주로 얘기하고 있다. 사실상 위의 전설에서 정조의 효행담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거나, 비가 오자 아버지의 묘에 대해 걱정을 했다거나 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이 중에서 앞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써도 잘 알려져 있어 더 이상 부회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벼락 과거>는 정조의 효행담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수원지역 무명 선비가 우연한 기회에 출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둔 전설로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6)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의 모락산(慕洛山)에 당상(堂上) 소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고 없다. 왜 당상 소나무인가 하니, 정조가 거동할 적에 안태령을 지나 인덕원에서 지지대(遲遲臺)를 넘을 때까지 그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그래서 정조는 그 소나무가 기특하다고 하여 정삼품 벼슬을 내렸다. 정삼품이면 당상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소나무를 본 적이 있다.²⁷⁾

임금이 소나무에 벼슬을 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의 정이품송'이다.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에 한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소나무의 늘어진 가지에 연(輦)이 걸렸다. 그래서 '연이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가 마치 그 말을 이해라도 한 것처럼 늘어져 있던 가지를 위로 올려 연이 지나가도록 했다. 그래서 세조가 그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소나무가 늘어져 있던 가지를 위로 올린 것을 임금에 대한 충정(忠情)의 표시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럼 위의 전설에서는 어떠한가? 앞서 보았던 <벼락과거>에서처럼, 이 전설에서도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묘사하고 있다. 능을 참배하고 지지대(遲遲臺)²⁸⁾에 이르러 궁궐로 돌아가려니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 데서 잘 확인된다. 그런데 그런 정조의 안타까운 마음²⁹⁾을 마치 알아채기라도

27) 成耆說, 1981, 위의 책, 63-64쪽

28) 정조의 효성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인, 지지대 설치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어가가 사근현(沙斤峴)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잠시 쉬 때에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가슴이 막히는 병이 있어 궁궐을 나올 때에 꽤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배알하는 예를 마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이 다소 풀리어 가슴 막히는 증세도 따라서 조금 가라앉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 지역은 바로 수원의 경계이다. 말에서 내려 머무르며 경들을 불러 보는 것은 대저 나의 행차를 지연시키려는 뜻이다.” 하고, 인하여 그 지역을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命名)하였다.」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년) 1월 26일(병신)

「매번 현릉원을 참배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미륵현(彌勒峴)에 당도할 때면 고삐를 멈추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한 채 나 자신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서성이곤 하였다. 이번 행차에서 미륵현의 위쪽에 앉은 자리를 빙 둘러 대(臺)처럼 되어 있는 곳을 보고는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하였다. 이 뒤로는 행행(幸行)하는 노정(路程)에 미륵현 아래에다 지지대라는 세 글자를 첨가해 넣도록 할 일을 본부(本府)와 정리소(整理所)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년) 윤2월 16일(무술)

29) 이런 심정은 정조가 지었다고 하는 오언울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환궁하였다. 행궁에서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나아가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지난번 내가 갈 때에는 빨리 갔었는데, 이번 내가 올 때에는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니 그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오언울시 한 편을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게 했다. 그 시에 “혼정신성의 그림음 다할 길 없어,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 굶은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 이 마음은

한 듯 '모락산 꼭대기의 소나무'가 정조를 계속해서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감명을 받은 정조가 그 소나무에 당상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보은의 정이품송에 관한 전설에서처럼 임금이 충정을 보인 소나무에 벼슬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전설에서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성과, 그런 정조를 향한 소나무의 충정이 묘하게 중첩되어 있다. 즉 보은군의 정이품송 전설에서는 소나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에서는 정조와 소나무의 상호조응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정조가 보여준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릉원 참배, 지지대 설치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지식이 배경화되는 것과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당상 소나무 역시 정조의 효행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화된 역사적 지식일 뿐이다.

(7) <송충이를 깨물다>, <소나무마다 콩볶음>

<송충이를 깨물다>: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이장할 때, 조립 계획을 세워 밤나무, 소나무, 도토리나무, 잣나무 등을 심었다. 정조가 하루는 가보니, 송충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송충이들이 소나무를 갉아먹고 있었다. 정조는 '네가 아무리 미물일 망정 어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가꾸고 있는 소나무를 갉아먹느냐?'고 하며 송충이를 입으로 깨물었다. 삼켰다고도 하지만, 그건 조금 지나친 표현 같고, 하여튼 입으로 깨물자 신기하게도 그 시각을 기해서 송충이가 전부 없어졌다. 황당한 얘기다. (청중: 화산에 송충이가 없다).³⁰⁾

<소나무마다 콩볶음>: 아이들이 현릉원에 심어 놓은 애기 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물을 빨아 먹거나, 도끼치기 놀이를 하였다. 소나무 가지를 많이 꺾으면 소나무가 꼬부라지거나 결가지가 나와서 잡목이 되어버리니까, 정조는 아기 소나무 가지마다 콩볶음 주머니를 매달아 놓았다. 아이들이 아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먹는 대신에 콩볶음 주머니를 끌러다가 주전부리를 하라는 뜻이었다. 옛날에 초근목피로 지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이들이 그저 장난삼아 그런 식으로 아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먹으니까, 그것 대신 콩볶음을 따서 먹으라고 한 것이다.³¹⁾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 어찌하여 사흘 밤을 잤던고.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 하였다.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년) 1월 24일(신미)

30) 成耆說, 1981, 앞의 책, 65쪽

31) 成耆說, 1981, 위의 책, 66쪽

위의 두 전설은 사도세자의 묘역을 조성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즉 상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체계적 계획을 세웠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송충이들이 묘역에 심어 놓은 소나무를 갇아먹자 정조가 그 송충이를 입으로 깨물었다든지, 아이들이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즙을 빨아먹거나 또는 그 가지로써 놀이도구를 만든다며 훼손하자 소나무 가지에 콩볶음을 매달아 놓아, 묘역의 소나무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조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실, 현릉원에 대한 정조의 지대한 관심 등을 종합해 보면, 정조가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지시는 있었을 법하다.

그런데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소재로 하여 나름대로의 역사적 진실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갈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전설이 정조의 효성을 특별하게 인식하려고 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인식’은 이들 전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앞서 우리는 정조의 효행과 관련한 전설들을 다수 분석했고, 그 분석들을 통해 정조의 효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송충이를 깨물다> 전설은 다소 생소하다. 정조가 소나무를 갇아먹고 있는 송충이를 입으로 물었더니, 나머지 송충이들이 모두 사라졌더라는 것을, 이 전설에서는 ‘황당한 얘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조의 효성을 이 전설에서만큼은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조의 효행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신비화되는 것을 꺼렸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는 비록 정조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써 이해하고자 했던 인식이 작동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볼기 한 대로 사형 집행>

정조가 수원에 사도세자의 묘를 쓴 후에, 그 묘하에 사는 백성들이 좀 잘못됨이 있어도 잘 돌봐주었다.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기 바로 직전에 지어진 절인데, 본래는 신라 문성왕 시절에 간량사라는 절이 있던 곳이다. 그 터에 용주사를 지은 것이다. 용주사에는 팔도 도승원, 즉 팔도를 통괄하는 최고 기관이 설치되었다. 그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일설에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절이라고도 하지만, 조포사라고 하여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할 두부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던 시절에 용주사 중들의 행패가 특히 심했다. 하루는 용주사의 한 중이 20여 세 되는 과부 앞에다가 오줌을 갈겼다. 그래서 중은 당장 고발을 당하여 수청에 하옥되었다. 그 소식이 정조대왕에게 알려졌다. 정조는 중을 내보내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수가 ‘조사를 해보니 이러

이러한 죄가 있어 불가하오니 반드시 벌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정조는 ‘그렇다면 불기 한 대만 때려서 내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유수는 불기 한 대만 때리라고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 불기 한 대를 때려서 중을 죽일 수 있는 장정(壯丁)을 찾았다. 이때에 한 장정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다. 유수가 해보라고 하자, 그 장정은 중을 엮어놓고 불기를 벗기고서는 때릴 듯하다가 안 때리고, 때릴 듯하다가 안 때리고를 여남은 차례 반복하였다. 중은 때릴라치면 힘을 바짝 주어 똥구멍을 움찔하여 그에 대비하였는데, 그때마다 안 때리니까 나중에 진짜 때릴 때에는 ‘이번에 또 내가 속으랴.’며 힘을 주지 않았다. 그럴 때에 장정이 중의 똥구멍을 치때렸다. 똥구멍을 치때려서 바람을 넣으면 간으로 통한다고 한다. 그런 후에 중을 내보냈는데, 중이 히죽히죽 웃으며 걸어 나가다가 이내 엎드려져서 죽었다. ‘불기 한 대에 때려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다.³²⁾

〈송충이를 깨물다〉, 〈소나무마다 콩볶음이〉에서 우리는 정조의 효행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써 인식하고자 했음을 간취하였다. 그 점에서 위의 전설도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 〈수원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조는 수원을 특별하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현릉원 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능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용주사를 비호하였다. 즉 큰 잘못이 있더라도 엄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수원지역 전설의 화자들은 그걸 빙자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자 하지는 않았다. 그로 인해 수원사람들 전체가 지탄을 받는 걸 우려했던 것이다.

위의 전설에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용주사 중이 20세 과부 앞에서 오줌을 갈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자 수원 화성 유수가 엄벌해야 한다고 재차 주청하자, 정조는 마지못해 ‘그렇다면 불기 한 대만 때려서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린다. 정조의 이러한 지시는 사실상 그 용주사 중을 적당히 처리해서 방면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수원 화성 유수는 정조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용주사 중을 벌하기 위한 독자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바로 용주사 중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세게 불기 한 대를 때린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정조의 명령대로 불기 한 대만을 쳐서 용주사 중을 내보냈지만, 유수의 독자적 계획에 의하여 그 중은 죽고 만다. 명령 체계로 보자면, 유수는 임금의 명령 속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알아채고, 그 의도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유수는 그보다는 수원지역의 집단 윤리를 중요시하였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보았듯이, 수원지역의 전설에는 유독 윤리적 행실이 강조되어 있으며, 그와

32) 成耆說, 1981, 위의 책, 77-79쪽

관련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개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개입되어 있다. 이 전설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아무리 정조의 비호를 받더라도, 대머지 앓은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수원지역 사람들이 매도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단 윤리가 유수의 판결로써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3. 수원지역 전설에 나타난 역사와 윤리, 그리고 현실 인식

2장에서 수원지역 전설을 크게 명칭에 관련한 전설과 인물에 관련한 전설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개별 분석의 총합을 통해 파악되는 역사, 윤리, 현실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개별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되었듯이, 수원지역 전설에서는 역사, 윤리, 현실 인식이 여러 지점에서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를 윤리의 잣대로, 또는 윤리를 역사의 잣대로, 또 이것들을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써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여, 이들의 인식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명칭 관련 전설에서 역사, 윤리, 현실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총 6편의 자료 중에서 역사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귀정(交龜亭) 전설>, <팔 부자집 거리>,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 <배다리(古索) 전설> 등인데, 모두 정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교귀정(交龜亭) 전설>, <팔 부자집 거리>는 정조가 야심차게 진행한 ‘계축도시 화성’ 건설 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 <배다리(古索) 전설> 등은 정조의 현릉원 참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 전설마다 역사 인식은 다소 다르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교귀정(交龜亭) 전설>에서는 ‘교귀정방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관한 지식들을 끌어들이 왔지만, 사실은 그 방죽 위에 있었다고 하는 ‘용두암’의 명칭 유래 및 그 터를 지키고 살았던 용씨가 방죽이 만들어진 후 발복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은 배경화한 채, 풍수지리 신앙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팔 부자집 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화성이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의 증세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하였고, 화성 유수에게 그렇게 다스리도록 유지를 내렸다. 따라서 전설에서 처럼 전국에서 여덟 명의 부자를 뽑아 화성에 거주하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이들이 화성을 번성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구 돈 있는 사람을 가서 그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어서 살게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무이자루 돈을 꾸어 주게, 그래서 갖다 갚게.”³³⁾ 하였다는 설명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그 후의 행정구역 명칭인 ‘보시동’을 이들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설도 역시 정조의 화성 건설 계획과 관련한 데서 소재를 가져왔지만, 그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부(富)’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역사적 사실과 지식은 배경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황교’는 정조가 아니라 순조시대에 만들어진 다리이지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진 현릉원의 북쪽에 세워진 다리이기에, 결과적으로는 현릉원의 부속건물인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지식으로 보자면 정조와의 관련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설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지식들은 부각되지 않은 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무명 선비의 이인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 기능만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지식의 배경화 전략은 수원지역 전설이 수원지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면에 부각시켜 비판하자니 부담되고 하여,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배다리(古索) 전설>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의 그런 고민을 여실히 보여준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조는 화성 행행과 관련하여 주교 설치에 따른 비용이나 동원된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주교지남』이란 책을 만들어서 주교 제도를 확립했다. 이 전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주교 제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은 아예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배다리라는 마을은 흙이 질고 나쁘니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정말 그곳의 땅이 질었기 때문에 그에 부연하여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수원전설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배경화한 것에 준하여 볼 때, 이 전설은 배다리 제도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아예 배경화의 단계 너머로까지 밀어낸 것일 수도 있다. ‘임금님(정조)이 행차하는데 행랑채에서 담뱃대를 물고 있다가는 관속들한테 불경죄로 맞았다. 그 때문에 밀폐를 해서 들창만 남겨 놓는, 독특한 형태의 행랑채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행행 길가 가옥 구조가 바뀐>³⁴⁾에서 정조의 화성 행차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직접 비판은 하지 못하면서, 그 때문에 행행 길가의 행랑채 구조가 바뀌었다는 식의, 소위 간접 비판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묘하게 닮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칭 관련 전설에서 파악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의 배경화 전략은, 상층 계급의 역사에서 소재를 취하지 않은 <꽃메(뫼) 전설>이나 <통수바위>에서도 희미하게

33) 成耆說, 1981, 위의 책, 76쪽

34) 成耆說, 1981, 위의 책, 67-68쪽

나마 간취된다. <꽃메(뫼) 전설>에서는 ‘훌륭한 처녀’가 총각 머슴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자살했는데, 그 처녀가 묻힌 무덤에서 꽃나무가 자랐다고 하여, 그 묘를 ‘꽃무덤(꽃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처녀가 비록 총각 머슴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으나 처녀의 품행, 또 그 부모를 생각하는 효성에 감응하여 꽃나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여기서의 꽃나무, 또는 그 꽃나무가 자라고 있는 ‘꽃무덤’은 곧 처녀의 올바르고 훌륭한 행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 부여 전략은, 정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연상시킨다. 즉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이 화산(꽃산)에 있다는 점이다. 화산은 정조의 효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꽃메(뫼) 전설>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의 의식 속에서는 이 둘의 관련성이 충분히 연상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꽃메(뫼) 전설> 역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배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지역 전설에서의 이러한 서사 전략은 때로는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이 현실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배경화되기도 하였다. <통수바위>가 그러한 예다. 이 전설은 자식이 없는 부부가 바위에 빌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위 기자담(祈子譚) 유형의 하나이다. 그런데 서사의 전개는 영똥하게도 부부의 애절한 이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아내는 조원동에 있는 바위에서 백일 기자치성을 드리고, 남편은 연무동에 있는 바위에서 백일 기자치성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만 아내가 도중에 죽고 만다. 그래서 조원동에 있는 바위를 할미통수바위, 연무동에 있는 바위를 할애비통수바위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담의 형식으로 시작한 서사가 부부의 애절한 이별담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자담이 부부의 애절한 이별담의 배경 이야기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전설의 초점은 부부 중에서도 남편 및 그 남편과 관련한 할애비통수바위에 있다고 하겠는데, 그 점에서 그 할애비통수바위가 있던 터에 군사들이 훈련하던 ‘동장대’가 있었다고 하여 지금의 연무동(練武洞)이라는 마을이름까지 만들어졌다고 한 것까지를 더하여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지점에서의 슬한 부부의 이별이 그 지명 속에 녹아들어 있음이 파악된다. 이것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이 직면하여 있는 현실에 기초하여 형성한 인식, 즉 현실 인식이 역사 인식을 배경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파악한 사항들이 인물 관련 전설에서는 어떻게 내재되어 있을까? 아무래도 서사 구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인물에 있다고 본다면, 더 다양한 시각들이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명칭 관련 전설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윤리 인식’이 ‘역사 인식’과 맞물려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물 관련 전설에는 효행과 관련하여 정조가 다수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9편의 인물 관련 전설

중 정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설은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벼락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 <송충이를 깨물다>, <소나무마다 콩볶음>,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 등 총 5편이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떠다> 1편이다. 이 중에서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와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떠다>는 정조가 수원사람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전설들에서는 하나같이 정조의 효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편, <미투리 장수로 떼돈>, <이름난 의원>에서는 수원지역의 실존 인물,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에서는 우성하라는 역사적 인물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정조의 효성을 다룬 전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지식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는 이와 동종의 전설인, 즉 보은의 정오품송 전설과 견줘볼 때, 정오품송 전설이 소나무가 임금(세조)에게 보여준 충정에만 초점이 있다면, <정삼품의 소나무>에서는 소나무의 충정과 정조의 효성 모두에 초점이 있다. <정삼품의 소나무>에서 소나무는 단순한 충정을 표시한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정조의 효성에 조응되는 자연물’로써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설에서의 소나무의 충정은 정조의 효성을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삼품 당상 소나무’는 정조의 효성을 증명하는 증거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자연물인 것이다. 더욱이 전설의 화자는 그 소나무가 지금은 없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다면서, 애써 정조의 효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이 전설에 등장하는 ‘지지대’ 역시 그런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정조라는 인물 자체, 그리고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성이 역사적 사실과 지식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원행행이나 지지대, 그리고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삼품 당상 소나무’와 같은 여타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이 ‘정조의 효성’이라는 윤리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배경화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역사 인식과 윤리 인식이 함께 얘기될 수밖에 없을 때, 역사 인식이 윤리 인식을 위한 배경의 자리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에게 역사 인식보다는 윤리 인식이 더 우선시되는 것임을 알려준다.³⁵⁾

그렇다고 효행과 같은 윤리 인식이 무턱대고 우선시되거나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송충이를 깨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설은 현릉원에 심은 소나무의 가지를 송충이들이 갉아먹자, 정조가 그 송충이를 깨물었고, 그 이후 모든 송충이들이 사

35) 그 점에서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도 이런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우성하라는 역사적 인물을 내세웠지만, 우성하에 대한 역사적 평가보다는 윤리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 역시 본문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논의의 방향을 새롭게 전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 각주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설은 이런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런 ‘신비한 사건’을 ‘황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조의 효성을 강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신비화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조의 효성을 부정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은 냉철한 현실 인식의 감각으로써, 정조의 효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소나무의 콩볶음>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준다. 소나무 가지에 콩볶음이 주머니를 달아놓아 아이들이 그것을 따 먹게 함으로써 소나무 가지의 훼손을 피하였다는 식의, 즉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이치에 부합하는 설명을 통해 정조의 효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인식의 경향성은 역사이건 윤리이건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벼락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가 그런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전설에는 정조의 효행담과 이씨 성을 가진 무명선비의 행운담이 절묘하게 어울려 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싶은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당면한 정치현실에 고민하거나, 비가 쏟아지는 날 능참봉이 능을 잘 지켜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거나 하는 등의 언행을 통해 자신의 효성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정조의 이런 효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던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에서처럼, 그것을 증명해 줄 사건이나 자연물 등이 덧붙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는 정조의 효성은 효성일 뿐, 그로 인해 엉뚱하게도 한 무명선비가 과거를 보게 되는 행운을 얻고 벼슬자리를 받거나, 시주를 준 중으로부터 우연히 들은 예언을 듣고 위기를 벗어나거나 하는 등의 행운담이 덧붙여져 있다. 정조의 효행담은 배경화되고, 무명선비의 행운담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의 지향점이 정조의 효행을 미화하는 데 있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좀 더 유익한 쪽으로 작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 전설에서의 무명선비와 같은 행운의 지점에 자신들이 위치하고 싶은 비밀스런 욕망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에 따라 정조의 효행에 대한 윤리 인식은 배경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인식의 경향성이 정치 현실과 상충되었을 때도 유지되었을까?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은 그 점을 잘 설명해준다. 이 전설에서 정조는 수원사람, 그 중에서도 현릉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구체적으로는 현릉원 밑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나 절(용주사)을 특별하게 비호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장에서 거론 하였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그런 혐의점은 발견되니 공허한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 전설에서는 용주사의 중이 정조의 비호를 받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20여 세 되는 과부 앞에서도 오줌을 갈기는 무례하고 무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정조는 그 중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수원 화성 유수의 주청에 마지못해 볼기 한 대만 때려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사실상 그 중을 적당히 처리해서 방면하라는 뜻이다. 수원 화성 유수는 정조의 명령을 표면적으로는 따르되, 그 숨겨져 있는 의도는 따르지 않는다. 그 중의 볼기 한 대만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원 화성 유수가 정치적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면, 당연히 정조의 의도대로 처벌했어야 한다. 그러나 유수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유수의 이러한 처벌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수원사람들이 정조의 비호를 받았던 게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수원지역 내에서 무도한 행위로 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만약 표출되었다면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볼기 한 대로 무도한 중을 때려죽인 사건’에 답아냈다. 따라서 앞서의 질문에 답하자면, 현실 인식의 경향성이 이 전설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답할 수 있다. 즉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은 정치 현실보다는 그들이 직면하여 있는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은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된다>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이 전설은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된다’는 속담의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제시한 뒤에,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강화된 데에는 수원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수원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외부자의 시선이나 행위에 있음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외부자가 강을 빨리 건너고자 할 때, 정조의 비호를 받는 수원사람인 척하여 강을 빨리 건넌으로써, 또 삼남지방 사람들이 수원에 와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은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사건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수원사람들이 셈이 빠르고 영악하여 여객들의 돈을 강탈한 사건처럼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원사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 말하자면 외부자들이 수원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수원지역 전설들이 효성, 품행 등에 대한 윤리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정치적 사실이나 지식을 배경화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부, 지위 등을 욕망하는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또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효성, 품행 등에 대한 윤리 인식을 배경화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전설이 수원지역 사람들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선을 변호하기 위한 갈래, 욕망하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로써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전설은 증거물을 수반하는 서사이기 때문에, 민담

과 같은 서사에 비해 ‘말이 갖는 진실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그에 기초한 부, 지위 등에 대한 욕망 표출이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변호 역시 가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름난 의원>, <미투리 장수로 폐둔> 등을 통해 지역 인물의 이인적 면모, 상업적 능력 등을 부각시키는 것도 주목된다. 자신들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공적 삶이나 특별한 삶을 전설 갈래에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역전설에서 기억되는 인물들은 대개가 정치나 역사의 범주 속에서 애기되는데, 이들 전설에서는 ‘석훈 씨의 조부’, ‘정광현의 조부’처럼 일상적 인물의 주목할 만한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이 전설을 역사나 윤리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로써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당면한 현실 및 주목할 만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로써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말해 준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수원지역의 전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역사, 윤리, 현실 인식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지역의 구비설화에 대한 조사는 타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학문적으로 이용할 만한 것으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1-5권에 수록된 40여 편의 자료 정도이다. 그 중에서 전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는 총 15편이다. 그 편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수원 지역의 역사나 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담아내고 있어, 이 자료만으로도 수원지역 전설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자료를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의 명칭에 관한 전설(6편), 역사적 인물이나 수원지역에 거주한 실존 인물 등에 관한 전설(9편)로 나눠 살펴보았다. 명칭 관련 전설로는 <꽃메(뫼) 전설>, <통수바위>, <교귀정(交龜亭) 전설>, <팔 부자집 거리>, <대황교(大皇橋)라는 이름>, <배다리(古索) 전설> 등이 있으며, 대부분 정조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인물 관련 전설로는 <정삼품의 당상 소나무>, <벼락과거(간촌 이생원 이야기)>, <송충이를 깨물다>, <소나무마다 콩볶음>,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 <수원사람 빨가벗고 삼십 리 뛰다>, <미투리 장수로 폐둔>, <이름난 의원>, <거문고 혈을 끊게 하다> 등이 있는데, 마지막 세 작품 외에는 모두 정조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조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전설이 다수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원지역 전설은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

사, 윤리, 현실 인식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은 대부분 배경화되어 처리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전설에서 효성, 품행 등에 대한 윤리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정치적 사실이나 지식을 배경화하고 있다. 한편, 부, 지위 등을 욕망하는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서, 또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효성, 품행 등에 대한 윤리 인식을 배경화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은 수원 사람에 대한 외부자의 부정적 인식을 변호하기 위한,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당면한 현실 및 주목할 만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수원지역의 전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현실 인식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나 윤리 인식이 수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를 전설 갈래의 활용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수원지역 전설의 전승담당층들은 전설을 역사나 윤리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로써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당면한 현실 및 주목할 만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갈래로써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려준다.

본 논문은 소수의 자료로 수원지역 전설을 검토하였고, 또 그에 대한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개선된 것이어서 시론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수원지역 전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7.09.16

심사일 2017.10.16.~10.30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순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2010,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경기문화재단

成耆說,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1-5: 경기도 수원시, 화성군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원오, 2010, 「이야기의 서승(書承)에 대한 근대적 관심과 기록정신」, 『동아시아고
대학』 제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디지털논산문화대전(http://non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nonsan&dataType=01&contents_id=GC02002161)

ABSTRACT

Recognition of history, ethics, and reality in legend of Suwon

Choi, Wonoh

This paper examines what materials are handed down to legends of Suwon, what characteristics are in the contents, and how history, ethics, and perception of reality are inherent. Among the sixteen legends, there are six legends about the names of natural objects or artifacts, and nine legends about historical figures and living figures living in Suwon. Overall, it deals with historical facts and knowledge related to Chongjo.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most central part of the legend in Suwon is the recognition of reality, and that history and ethics perception are accepted from such perspective.

Key Words : Suwon, history recognition, ethics recognition, reality recognition, Chongjo

수원농악의 두레굿과 걸립굿의 상관성

김헌선*

목 차

1. 머리말
2. 수원농악 두레굿과 걸립굿의 실제와 면모
 - 1) 두레굿의 실제
 - 2) 걸립굿의 실제
 - 3) 수원농악 두레굿과 걸립굿의 상관성
3. 수원농악의 기여와 의의
4. 맺음말

요 약

이 논문은 수원의 두레굿과 걸립굿이 존재했던 지역임을 밝히는데 주력한 것이다. 현지 조사에 입각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수원 지역의 농악이 서로 긴밀한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은 수원농악의 전통적 가치와 의의이다. 수원의 전통문화 가운데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데 농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가 가능성을 밝혔다. 두레굿은 농민들이 연행한 농악이고, 걸립굿은 전문적인 예술가가 연행한 농악이다. 이 두 가지 농악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농악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수원 지역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하면서 수원의 농악으로 자리잡고 정립되었음이 확인된다.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학장(Dean, Central College, Kyonggi University), E-mail: y3k@kyonggi.ac.kr, Tel: 031-249-9108

수원 지역은 종래의 논의에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문화적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수원지역의 농악은 그러한 농사문화의 전통을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이들의 농악은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면서 유랑예인 집단의 농악으로 발전하고 변형되었다. 그 점에서 수원 지역의 농악은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문화적으로 경계면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역의 농악과 무악, 농악과 마을굿이 상관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처럼 수원 지역의 농악이 명백한 사례는 종래의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창조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의 이념에 맞게끔 계승하는데 있어서도 이 논의는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적절한 예증이 아닌가 한다. 두레굿과 걸립굿을 새롭게 계승하여 수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주제어 : 수원농악, 두레굿, 걸립굿,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통일성

1. 머리말

수원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장이고, 문화전승적 시각에서 다양성을 함의하고 있는 지역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¹⁾ 수원지역의 특정한 민속예능 가운데 농악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인데, 기왕의 논의에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수원은 들이 넓은 지역이다. 대유평(大有坪)이라고 하는 넓은 논과 들을 보면 이 고장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논농사가 행해지고 있었던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에 연계된 여러 민속행사가 있었음을 추론할 만하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농악이나 민속놀이를 비롯한 예능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진하다. 그 방면에 연구의 착안이 늦었거나 관점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현상임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아울러서 자료에 대한 천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난점을 타개할 목적으로 농악 전승자의 여러 증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수원지역 농악의 전반적 판도를 재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농악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다.²⁾ 첫 번째 증언자는 임광식(林光植, 1940-)이다. 임광식은 수원의 세류동 출신으로 “버드내”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고 걸립굿에 참여하면서 수원농악에 중요한 면모를 보고 자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증언자는 안봉현(安鳳鉉, 1953-)으로 수원에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 출신이지만 수원에서 불박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에 대한 중요한 농악의 원천에 대해 증언한다. 두레굿의 실상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증언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기왕의 논의들이 튼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³⁾ 거의 현지조사에서 추출될 수 있는 정보는 집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 관심을 달리해서 주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을 새로운 해석의 방향으로 잡고, 이들 수원지역의 농악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이 논문은 한 차례 현지조사 작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논문의 형태로 새롭게 발전시켜서 작성한다. 수원지역의 두레굿과 걸립굿에 대한 재조명이 화급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논문 형식으로 발전시킨 결과이다.

2) 김현선·시지은·김은희·김혜정, 2016, 『수원두레』, 수원문화원

3) 김원호, 2000, 『경기도의 풍물굿』, 경기문화재단

시지은, 2006, 수원지역 농악 연구-대유평농악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3집, 수원학연구소

우선 규명해야 할 문제는 수원의 두레곳과 걸립곳의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수원의 두레곳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적지 않을 것이다. 수원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두레곳은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원의 원래 지역 인근에서 벌어졌던 두레곳과 두레에 대한 증언을 찾을 수가 있었으므로 이를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두레곳의 실상은 이미 상세하게 증언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레곳과 걸립곳의 대립 관계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은 수원농악의 원상을 재구하는데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서 두레곳과 걸립곳이 수원농악의 발전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보완적이고 동시에 상호갈등적인 것인지 증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악이 불박이로 머물러 있는 것과 함께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것이 기본적인 관련양상이고, 이것은 도회지 문화를 이룩한 지역에서 거의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수원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우세하였으며, 문화적으로도 그러한 성향이 농후한 지역임을 쉽사리 간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농악의 이 양상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현지 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문헌이나 기록을 두루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두레농악이나 걸립농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멸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흔적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이 글을 집고 보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작업은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한다. 수원의 전통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 연구를 해서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중요한 한계이다.

수원지역의 두레곳과 걸립곳을 확인하는 길이 일반론을 막연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실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각에서 당연하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일반화를 불가피하게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차후에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하고, 아울러서 수원지역의 자료를 구체적 조사 자료와 함께 일반적 사실과 연결하는 모험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

2. 수원농악 두레곳과 걸립곳의 실제와 면모

수원농악의 중심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적절한 범례는 두레곳과 걸립곳이다. 두레곳은 논농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논일을 하면서 두레를 결성하고 두레의 논농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두레풍장 또는 두레농악이다. 논농사 과정에서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두레굿이다. 두레굿의 절차를 농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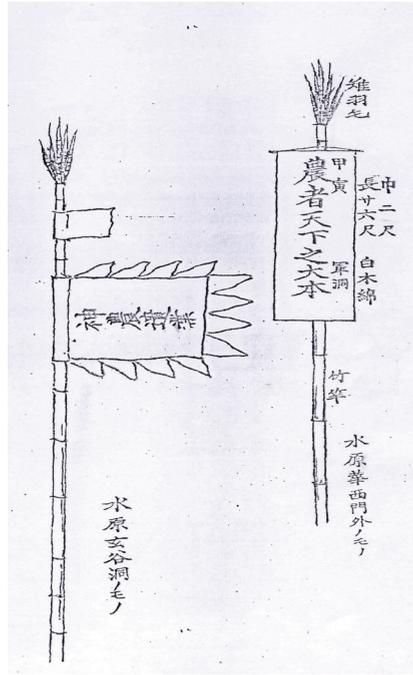
이와 함께 농악으로 일정한 밥벌이를 하면서 여러 고장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치는 것이 바로 걸립굿이다. 서낭걸립 또는 낭걸립의 전통으로 수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굿을 치게 되는데 이것이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걸립굿이다. 걸립굿에도 일정한 절차와 방식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신의 이름을 빌려서 굿을 치고 걸립의 형태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인정하면서 그곳에 침투하여 굿을 해서 걸립을 한다. 두레굿과 전혀 다른 형태로 걸립굿을 자행한다.

이 두 가지 굿의 실상을 점검하고 그것이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직능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그 실상을 점검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그 골자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실상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한다. 수원의 전통적이 풍모 속에 두레굿과 걸립굿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고장이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실상의 자료를 들어서 해명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화서문밖의 대유평을 중심으로 하는 농지가 이를 증명하고,⁴⁾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분명하게 화서문밖의 두레기가 있었음이 이를 증거한다.



〈그림 1〉 장안문과 화서문 안 농가와 농경지
(헤르만 산더, 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4) 『수원시사 1권-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431쪽 사진 재인용.



〈그림 2〉 華西門 밖과 玄谷洞의 두레旗
『韓國農産土地調査報告: 京畿道江原道忠清道』,
農商務省, 1905, 427쪽

1) 두레곳의 실제

수원지역에 논농사가 우세하고 생업의 기반을 농업으로 한 점은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두레가 극성한 실상을 소개한 바가 많다. 화서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두레가 만연하고 활성화되어 두레기가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논농사의 여러 가지 작업이 전개된다. 대유평의 넓은 뜰에서 비롯된 논농사의 전통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전거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들이 넓었음에도 증거물은 박약하고 무엇을 핵심적으로 남겨놓은 기록들이나 조사 자료가 없어서 이 점을 온당하게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전자료와 현지제보자들의 자료에 입각하여 이 점을 증명하고 보완하고자 한다.⁵⁾

5) 이하 이 대목에 대한 서술은 김현선·시지은·김은희·김혜정, 2016, 『수원두레』, 수원문화원의 자료를 근간으로 새롭게 해석을 추가하고 논의를 보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논의의 맥락을 재설정하고, 이것이 필요한 논거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논지로 삼는다.

수원지역뿐만 아니라 논농사의 핵심적 작업은 모심기와 논매기에 있다. 이 작업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고 아울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노동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그 방식에 의해서 모심기와 논매기가 대표적인 것이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작업이 전통적인 노동의 분화를 촉진하고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대체로 모심기는 품앗이로 한다. 품앗이는 이들을 통하여 일정하게 노동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서 우의를 다지는 방식이다. 노동을 교환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서로 노동의 품을 품고 앗는 각별한 방식이다. 품앗이는 전통적인 소규모의 노동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노동교환은 대체로 집안이나 마을의 친소관계를 가진 이웃사람들과 하는 특징을 지닌다. 수원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품앗이가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규모의 정서적 친소를 강조하는 가구당의 개별적 작업의 분열된 형태의 노동이고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진 노동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원지역에서 모심기와 같은 논농사의 노동과 달리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성원을 구성하는 노동은 논매기와 같은 것을 들어서 예증을 삼을 수가 있다. 논매기는 반드시 두레로 한다. 두레는 전통적인 마을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며, 두레만큼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공동체 노동의 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레를 통해서 집단 공동노동의 실재를 구성하고 노동의 일을 주관하고 마을 공동체의 두레를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지배하게 된다. 농약은 두레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마을 단위의 두레가 서게 되면, 논매기를 하러 나갈 때에 농약을 하고, 쉴 참에 놓고, 들어올 적에 노는 과정에서 농약으로 확실하게 기능을 하면서 유흥과 신명을 공유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두레가 노동공동체이고, 두레굿은 노동을 고양시키는 방편으로 선택된다.

농약의 연주를 통해서 이에 입각하여 놀이의 신명과 노동의 신명을 함께 고취시키는 심미적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농약을 통해서 노동을 집약화하고 아울러서 노동의 신명과 강도를 극대화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단을 진두지휘하는 농약이 필수적으로 동원되기 마련이다. 두레와 노동, 농약과 두레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원지역에서 두레와 같은 형태로 논매기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증언에서 확인된다. 그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의 논농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의례적 논매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수원지역에서 이러한 증언이 다수 확인되고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게 되면 논매기는 대체로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하는 논매기는 흔히 ‘애벌논매기’라고 하는데, 이를 달리 처음에 한다고 하여 ‘초벌논매기’라고도 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모를 심은 지 대략 15일 정도가 경과된 뒤에 한다. 그것을 ‘애벌논매기’라고 한다. 이 논매기에서 가장 중요한 연장은 호미와 우장이었다고 한다.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엷드려서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으며 농약이 절대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하는 논매기는 ‘두벌논매기’라고 한다. 모가 자라서 오금 정도에까지 이를 때에 이 논매기를 한다. 이 역시 호미를 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는 논매기는 ‘논 흙치기’라고 한다. 모가 무릎에 올 때 즈음에 이러한 논매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논매기를 하지 않으며, 이 마지막 작업을 통해서 논매기를 완성하게 된다. 세 번에 걸친 논매기에서 애벌논매기-두벌논매기-논흙치기 등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하게 농약을 통하여 두레풍장의 진수를 선보이게 된다. 농약의 형식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매기의 조직인 두레와 농약이 긴밀하게 맞물려서 작업을 하게 되지만, 이를 통하여 새로운 미학적 형식을 가미한다. 일을 하고 신명을 고취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농요이다. 농요는 대체로 선후창으로 부르게 되는데 선후창의 미학적 창조가 필요한 것은 집단을 이끄는 인물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추종자가 논농사의 농요를 통해서 매개되고 함께 논농사의 작업이 고취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논을 매면서 부르는 논매기 소리이다. 이 소리는 서로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관계가 반드시 농약과 농요의 형태가 노동과 맞물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 세 번의 논매기에서 절대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논매는 소리이다. 논매는 소리 역시 지역마다 마을마다 각기 다르다. 세 번에 걸쳐서 하는 논매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단계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수원의 농요는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생성되었다. 그 가운데 지리적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의 지리적 환경과 조건은 북으로 안산시, 의왕시, 용인시 등과 연결하고 있으며 서로는 화성시와 인접하고 있다. 동으로 인접하는 지역에는 용인시가 에둘러 있으며, 남으로 오산시, 평택시 등과 인접하고 있다. 수원의 농요가 이들 지역의 소리와 밀접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원지역에서 발견되는 농요의 실상을 주목할 만한 것이고 현재 그다지 연구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농요 가운데 〈논매는소리〉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지니고 있다. 〈논매는소리〉 가운데 후렴구에 입각한 소리를 유형적으로 갈라서 정리하면서 지

역적 특색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농요 〈논매는소리〉 분포와 양상

지역·특징 논농사소리	채록 지역	〈논매는소리〉의 구체적인 면모
권선구농요금곡동 소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화성군 매송면 호매실리)	박우선 가창자의 소리: 소리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며 둘레소리-상사소리-덩어리소리-방아소리 등으로 이어진다. 3 소박4박자로 된 소리이고, 굿거리와 한배가 맞는 소리이다. 〈둘레소리〉 월출동령 달이 솟네 실실 돌러라(메기는소리) 돌러라 돌러라 설설 돌러라(받는소리) 〈상사소리〉 월출동령 달이 솟네 실실 돌러라(메기는소리) 에넬렐렐 상사뒤요(받는소리) 〈덩어리소리〉 얼카덩어리(받는소리) 〈방아소리〉 해는 지고 어두신 날에 옷갓을 하고서 어디를 가소(메기는소리) 에헤에야 허허 우겨라 방아로구나(받는소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설워마라
팔달구 이의동 소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시 팔달구 상광교동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김천식 등의 소리로, 우겨라 방아소리를 부르고, 3소박4박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우겨라 방아소리〉 어허어허 어허 우겨라 방아로구나(받는소리)
팔달구 상광교동 소리	수원시 팔달구 상광교동소리	방아소리-상사소리-몸돌소리 등으로 구성되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권선구 고색동 소리	수원시 팔달구 상광교동	송원식에 의해서 연행되는 소리로 세 가지 소리가 등장한다. 얼 렐렐 상사뒤야소리-얼카덩어리-에허 방아로구나 등이 그것이다. 〈상사데야소리〉 한많은 세상을 걸구나 넘는다면(메기는소리) 얼렐렐 상사데야(받는소리) 얼릉동탕 건너매는 걸 못논이나 매지(메기는소리) 얼렐렐 상사데야(받는소리)

논농사 소리에 의한 지역유형이 쉽사리 드러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이 함께 받는 받음소리인데 이를 흔히 후렴구라고 한다. 후렴구에 의한

일정한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정보는 이 소리들이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운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일정한 체계 속에서 운용한다. 후렴구가 일정하게 분화되고 말로써 변이를 이루면서 다양하게 응집되고 해체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말이 함께 활용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후렴구를 통해서 증명된다.

아울러서 이 논농사 소리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외형적인 틀은 곧 논매기와 두레농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논매기의 회차와 논매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이 이를 둘러싼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논매기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으며, 두레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레를 짜서 각각의 소임을 정하고 일과 두레를 연결했을 가능성을 추론하게 된다.

〈표 2〉 논매기 회차와 논매기의 방식 및 두레 양상

구분 \ 회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매기 명칭	애벌논매기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논흫치기)
논매기 연장	호미	호미	손으로 풀뽑기
논매기 조직	두레	두레	두레
논매기 농약	두레굿	두레굿	두레굿

수원두레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에서 하는 농요 또는 일소리, 두레의 성립 여하, 논매기의 실상과 의의 등을 핵심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의 실례로 근거를 삼는데, 세류동 버드내, 금곡동, 광교동 등을 비롯한 수원 시내의 사례, 화성 지역의 봉담 역말(동화동), 동시에 경기도 시흥시 등의 사례 등을 비롯하여 평택과 오산 등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점에서 수원두레문화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강력한 예증이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논매기 소리의 존재가 일부분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레가 짜여지면서, 두레풍장을 연주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증언 과정에서 얻어낼 수가 있었다. 아울러서 세 번의 논매기와 더불어서 일정한 놀이와 신명을 공유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으며, 그것이 두레풍장과 두레논매기의 방식으로 중요한 작동을 하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것이 수원두레문화의 중요성과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3〉 수원 일대 두레소리의 지역적 양상과 풍장

지역 \ 논매기절차	첫째 논매기	둘째논매기	셋째논매기	지역
수원 두레소리와 풍장	애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광고, 쇠죽골, 버드내, 고새기마을
화성 두레소리와 풍장	애벌논매기	두벌논매기	논흙치기	화성 봉담 역말
시흥 두레소리와 풍장	초벌논매기	재벌논매기	만물논매기	시흥 물왕리 거모동 등지
평택 두레소리와 풍장	초벌매기	재벌매기	만물매기	평택 포승지역

수원두레문화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 반드시 두레를 곁들여서 일을 하면서 신명나게 노는 것이 요점이다. 두레문화의 요점이 신대를 통해서 신을 받고 여름철 백중제와 같은 때에 일정하게 마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놀이를 하고 함께 집안의 여러 집지킴이 신을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수원두레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놀이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이 소리의 구성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애벌매기는 첫 번째 하는 것인데 이 소리는 흔히 둘레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둘레소리뿐만 아니라, 상사소리와 같은 것들이 쓰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논매는 소리를 하면서 호미로 논을 파서 옆으면서 곳을 친다. 두벌매기는 다양한 소리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는 소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세 번째 하는 방식은 논물을 흙치면서 다니고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수원두레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레굿을 치는 것이다. 두레풍장에서 논매기의 동작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지만 이 소리를 구연하지 않고 논에 행진을 하거나 흥겹게 놀 때에 하는 가락이 농악과 어우러지고 호미씨세를 할 때에 하는 가락이 두레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두레가락을 통해서 일련의 아름다운 풍장 가락을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레가락의 전형적인 면모는 여러 가지이지만 일정한 가락의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락을 구사하게 된다.

길군악7채는 길군악으로 쓰이는 가락이고, 삼채가락으로 놀이를 하면서 일정한 군더더기를 구현한다. 암채와 숫채로 이루어진 가락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채가락과 짝짝이 가락을 치면서 일정한 놀이를 하기도 하고, 길군악7채가락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락의 양상을 보이면서 일정한 가락을 연행하는 점이 나타난다.

논매기를 통해서 두레굿을 치고 일정하게 논농사를 하면서 소리를 한 사실이 수원

두레굿과 두레문화의 요점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원지역에서 돌올하게 이러한 양상이 드러난 것이었는데 이 점이 그렇게 연구되거나 조사되지 않았다. 수원은 두레굿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적 개방성과 의의를 고취하고 있는 지역임을 절감하게 된다. 농악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고 운용되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논매기를 통해서 두레굿을 치고 일정하게 논농사를 하면서 소리를 한 사실이 수원 두레굿과 두레문화의 요점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두레굿의 전통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으며 이 소리의 체계를 통해서 농악이 발달한 점을 인정하게 된다. 두레의 내용은 정서적으로 논농사 소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외형적인 틀은 바로 두레굿과 같은 농악을 통해서 구현된다.

논농사를 이루는 세 가지의 중핵적인 요소들은 바로 두레, 두레소리, 두레농악의 두레굿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논농사가 생산의 근간을 이룬 점이 이처럼 고도의 노동조직과 노동예술을 형성하게 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작동하면서 두레를 이루며, 수원지역의 두레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두레를 중심으로 두고 본다면 두레는 일정한 기능과 의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레는 노동공동체, 신앙공동체, 예술공동체, 정서공동체적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두레굿의 실상은 이와 같은 두레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요점적으로 해명하고, 이에 대해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레가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두레이다. 두레를 통해서 마을은 하나로 결성되고 김매기 또는 논매기 등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점이 확인된다. 두레의 노동공동체는 모심기와 같은 것에서는 하지 않고, 김매기의 작업을 통해서 구현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두레는 신앙공동체이다. 두레를 내서 처음에 하는 일이 서낭대나 신대에 신을 받는 일을 감행하게 된다. 마을의 주신인 당신이나 당산신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귀일하고 신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신대와 영기로 조직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공동체로 상징성을 가지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레는 그러한 점에서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신성한 의례의 성격을 지니면서 등장하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두레는 예술공동체이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사실의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고도의 문화적 창조로 이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농악기를 최소한으로 들고서 두레풍장에 의한 신을 모시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농사를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각도에서 예술공동체

의 예술적 창조는 각별하게 주목된다. 우리가 오늘날 계승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예술창조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예술, 오늘날의 거듭된 창조로 이어가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레는 정서공동체이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더불어서 함께 신명을 다지면서 신을 모시기 때문에 함께 다양한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인 일체감을 통한 일련의 놀이와 노동, 두레와 일판 등을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농사를 매개로 공유되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점을 볼 수가 있겠다. 두레를 통한 일련의 미학적 일체감은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두레문화 역시 이러한 정의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수원의 몇 가지 예증과 인접한 지역의 예증을 통해서 수원두레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를 위의 정의에 대입하게 되면 거의 같은 양상을 자아내는 점을 쉽사리 확인하게 된다. 그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원두레문화의 강고함과 함께 전통적인 두레문화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2) 걸립굿의 실제

수원지역의 농악에서 걸립굿이 이따금 발견되었다.⁶⁾ 걸립굿은 두레굿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을 뒤흔드는 특정한 형태의 연예농악이다. 이 농악이 공동체의 기반을 온전하게 흔들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두레굿의 기반 위에서 출현하였지만 조선후기의 유랑연예인집단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걸립굿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노동조직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놀이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농악이 충돌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의 농악을 자아내는 점이 인정된다.

걸립굿은 그 형태나 내용이 두레굿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목적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점은 그 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서낭대를 내세우고 다니는 것이지만 거의 연어먹을 요량으로 굿을 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는 간단한 굿이 아니다. 걸립대를 내세우고 마을에 가서 허락을 얻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른 바 “곰뱅이쇠”를 얻어낸다고 말한다. 달리 “곰뱅이”를 튼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6) 이하 이 대목에 대한 서술 역시 김현선·시지은·김은희·김혜정, 2016, 『수원두레』, 수원문화원의 자료를 근간으로 새롭게 해석을 추가하고 논의를 보완하여 서술한다. 증언 자료를 활용하고, 의미를 선명하게 가다듬으면서 인용한다.

허락을 얻으면 일단 그 마을의 당산에 가서 일정하게 마을의 신에게 당산굿을 치고 허락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걸립을 위한 고사소리를 하고 일정하게 돈과 전물을 모으는 일을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을의 너른 공터를 택해서 농악놀이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그것은 판굿을 위주로 하는 놀이를 하면서 연예농악의 형태로 된 일정한 놀이를 한껏 보여주는 것이다.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점이 드러난다.

경기도 수원 지역 걸립농악의 지역적 특색은 웃다리농악과 같은 점에서 발견된다. 경기도 지역의 수원, 오산, 안성, 평택 등지의 농악은 웃다리농악의 가락, 판제, 가림새 등을 선명하게 갖추고 있다. 경기도 일대 남부 지역의 웃다리농악 가락이 구체적인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락의 일치점이 발견되는데, 가령 길군악7채, 마당굿1채, 짝짝이 또는 동리3채, 자진가락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가락과 같은 경기도 지역의 가락은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령 충청북도의 보은이나 옥천 등지에서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충남 서산과 당진 등지에서도 경기도의 가락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구성되어 발견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행진가락에 쓰이거나 명석말이 진풀이에 쓰이는 길군악7채의 가락이 야무지게 쓰이지 않는 것은 경기도 웃다리가락의 쓰임새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웃다리농악의 판제 또는 고유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경기도의 안성과 평택 등지의 농악에서 찾아진다. 웃다리농악의 판제는 결국 농악의 편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락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준거가 판제이다. 판제가 한결같고 뚜렷한 것이 곧 안성과 평택의 농악이다. 또한 웃다리농악은 가림새가 분명하다. 가림새는 앞치배, 뒷치배, 잡색놀이 따위의 놀음이 진풀이와 더불어서 체계적인 예능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의 수원, 안성과 평택 농악의 가림새는 곧 웃다리농악의 가림새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전승되는 농악은 그 나름대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분화되고 발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과연 이 지역의 농악은 각기 달라서 일정한 공통점을 추출하기 어렵다. 경기도에서 이동 쪽으로 넘어가 강릉 일대의 영동지역에서는 길군악7채를 연주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은 경기도 안성지역의 농악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러나 안성 이남이나 이서 지역에서는 안성과는 다른 농악이 존재하며, 서산과 당진 등지에는 농악의 판제가 안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충남 부여군의 추양리 농악은 경기도와 전혀 다르고, 가락과 판제에서 그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충청북도 보은이나 옥천 등지에서도 경기도 가락을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경기도 안성과 평택의 농악이 중심이 되고 웃다리농악과 아랫다리농악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 지역의 가락에 깊이 영향을 주는 지역과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독자적 지역 유형을 유지하는 농악가락도 존재한다.

걸립굿의 형태가 지역적으로 이처럼 같아지는 데는 남사당패와 같은 떠돌이 예능인들의 농악인 걸립농악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가락을 연주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들 농악은 판굿이나 판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예농악을 선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걸립굿의 형태는 중요한 것이고 떠돌이 농악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점을 드러낸다.

경기민속경연대회에 참여한 자료에 의하면 걸립굿을 독자적으로 변형하면서 발전시킨 것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세련된 걸립굿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걸립굿에다 여러 가지 지역적이고 가장 수원시를 대표할 만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걸립굿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걸립굿의 실상을 예증으로 삼아 보여주고자 한다.⁷⁾

- ① 입장굿: 다른 농악과 마찬가지로 두 줄로 서서 나발·나각 등을 세 번 분 뒤에 후어림굿으로 시작 휘모리로 맺은 다음 자진모리로 시작한다.
- ② 입성놀이: 상쇠·부쇠·버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다시 원 위치 한 다음 다시 중앙에 모여 좌우로 돈 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선 다음 양 쪽이 서서히 마주 보고 전진하여 치배들 사이에 미지기를 한 다음 좌우치기와 땀들이 8번을 하고, 영기와 나발이 만든 문으로 들어간다. 장단은 자진모리땀음과 자진모리·입성장단이 쓰인다. 수문장회의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성문을 순시하는 의미이며 좌우치기와 입성은 능 행차 때 행렬이 장안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 ③ 당산별림 1: 씨래질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무동 뒤로 버꾸가 가서 대형을 만든다. 여기에서는 개인놀이를 행하는데, 상쇠가 부포놀이를 너설놀이를 하고 버꾸가 각각 개인놀이를 행한다. 당산에 서서 ㄷ자 모양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를 당산별림이라고 한다.
- ④ 길군악 칠채와 오방진·(원천)물굿: 오방진은 행궁터의 오방지신을 다스려 행궁의

7) 2003년과 2004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면서 수원농악을 기반으로 하는 수원지역의 걸립굿과 두레굿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간 전례 자료집이 있어서 이를 인용하면서 걸립굿의 예증으로 삼고자 한다.

영원무궁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장단은 늦은 길군악칠채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몰아친다. 이때 오방진이 들어설 자리에는 각 방위를 나타내는 기가 서며 중앙 황(룡)기에서는 (원천)물굿이 행해지는데 옛날 만석거와 축만제 원천저수지를 만들 때 고사소리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물굿을 할 때의 장단은 빠르게 모는 길군악7채에서 자진가락으로 치다가 중앙으로 모였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굿을 한다. 소리는 ‘물염쇼 물염쇼 원천에 물염쇼, 문염쇼 문염쇼 사통팔달 문염쇼, 길염쇼 길염쇼 대대길에 길염쇼’이다.

- ⑤ 당산별림 2: 두 원에서 상쇠와 부쇠가 나란히 나와 한 줄로 만들어 나오다가 그대로 ‘ㄷ’자 형으로 만들어 개인놀이를 한다.
- ⑥ 열십자진(가세진): 개인놀이 후에 상쇠쪽으로 무동이 뒤따르고 부쇠쪽에는 버꾸가 뒤따라가면서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들었다가 비스듬히 들어와 서로 교차해 선다. 장단은 자진모리에서 쌍줄배기가 되면 동살풀이로 바꾼다. 다시 가세진에서 진쇠 장단으로 완전히 열십자의 +자로 만든 뒤 타령장단으로 좌우로 움직이다가 안으로 모였다가 풀었다가 한다. 이는 화성 축조 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중심을 맞추어 상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⑦ 사통박이: 십자진에서 터벌림장단에 맞춰 십자진의 각 끝이 중심이 되어 사방을 막았다 풀었다 한다. 이는 화성 건물을 지을 때 틈을 없애고 튼튼하게 하여 성 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⑧ 사통막이(가세배기): 물굿이 끝나면 상쇠는 자진모리로 몰아 쌍줄배기 대형으로 만드는데 장단은 계속 자진모리로 친다. 이 때 상쇠는 소무와 버꾸를 데리고 제자리로 인도해 주고 미지기를 두 번 진행한다.
- ⑨ 네줄배기: 원진에서 좌우치기가 끝나면 어림굿을 신호로 상쇠 앞으로 네 줄을 만들어 서서 대대 좌우치기를 한다. 돌림벅구·절구벅구 등의 채상놀이와 짝짝이 등 경기 충청 옷다리의 농악 가락과 동일하다.
- ⑩ 퇴장: 좌우치기가 끝나면 기들은 대형 앞으로 서고 입성장단으로 들어가다가 휘모리와 인사굿으로 끝을 맺는다.

걸림굿은 판제와 판굿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련된 가락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풀이를 독자적으로 하지만 걸림패의 농악 전개와 다르지 않다. 걸림굿이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농악, 대유평을 비롯한 두레농악의 전통,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걸림굿의 가락이 만나서 인상적인 굿으로 발전한 것이 위의 예증에서 드러난다. 걸림굿의 존재는 수원농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수원농악의 걸립굿을 정의한다면 수원은 물화가 변성하고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화성을 둔 지역이었으므로 문화적으로 경기남부의 핵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악의 전통을 새롭게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써 걸립굿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화를 얻고 식량을 거두어 먹을 요량으로 돌아다니는 집단의 산물이 두레굿에 의존하면서도 새롭게 하는 걸립굿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남사당패의 농악과 무관하지 않고 서로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전개되었음이 드러난다.

수원지역 걸립굿은 수원지역 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보여주는 외부적 자극이다. 외부의 자극에 입각하여 중심을 두고 보면, 그것이 지나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두레굿과 적지 않게 교섭하고, 서로 상승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부여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걸립굿의 순기능과 순작용을 유념해야 마땅하다.

3) 수원농악 두레굿과 걸립굿의 상관성

수원농악의 전통, 수원두레문화에서 두레굿과 걸립굿은 서로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⁸⁾ 수원지역 농사문화의 근간을 지니고 있는 쪽이 두레굿이고, 토박이문화의 근간에서 파생되고 발전한 것이 두레굿이라고 하겠다. 두레굿의 근간을 통해서 형성된 두레굿은 소박한 두레풍장의 면모를 지닌다. 두레풍장의 가락에서 근간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농악 근본 가락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두레굿은 다른 지역의 전형적인 가락과 일치되면서 다른 지역의 농악 가락을 받아들이는 핵심적 구실을 하였다. 두레굿의 전통은 지속적 근간을 형성하는 일반적 의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터전 노릇을 한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널리 행해진 걸립굿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소인이다. 걸립굿은 토박이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다시 이를 활용하여 응용하면서 수원 두레문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농악에서 이질적인 것들은 처음에 갈등관계에 있지만 나중에는 서로 조화하고 통일되면서 두레문화의 속성을 강하게 하고 돌출하게 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한 점에서 두레굿과 걸립굿은 융합적이고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레굿과 걸립굿을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점은 온당하지 않고, 배척적이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진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화는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생성하고 극복하면서 그 역동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수원의 농악 역시 같은 현상임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8) 이 대목에 대한 서술 역시 김현선·시지은·김은희·김혜정, 2016, 『수원두레』, 수원문화원. 증언한 자료를 근간으로 새롭게 해석을 추가하고 논의를 보완하여 서술한다.

있다.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화적 충돌과 함께 문화적 복합 현상은 진정한 역사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증이 된다. 이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문화는 지체되지 않고 발전되고, 수원두레문화를 촉진시켰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성 싶다. 그러한 사실은 원형적인 것들의 전형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로 구실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수원의 농악 문화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이 확인된다.

재래의 두레굿을 강조하면 현재의 도시문화적 공간이나 개방적인 공간에서 농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원형이나 전통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실낱같이 있는 것들을 망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재래의 두레굿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정향과 좌표를 정하는 것은 이상적이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생길 때가 적지 않으나 역사적 경과와 내력이 이를 잘 해명한다. 그러므로 두레굿과 걸립굿이 만나서 풍성하고 다양하게 열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일이 진실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악을 힘들게 이끈 주체는 분명하게 두레굿을 만든 농사꾼이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농사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70년대 이전의 농사꾼이기를 포기한 특정한 사람들은 연예농악의 전례인 농사굿을 배제하고 이를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일을 주선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일을 선도하게 되었다. 걸립굿을 배우고 두레굿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이유가 이러한 산업화와 전통문화의 접변 속에서 마련된 대안이나 자구책이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두레굿과 걸립굿의 새로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수원농악의 두레굿과 걸립굿은 돌이면서 하나이다. 돌이기 때문에 수원농악의 구성요소로 긴요한 구실을 각기의 자리에서 한다. 두레굿은 농민들의 토착 기반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걸립굿은 농민의 토착 기반 위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이질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것이다. 걸립굿은 전통문화의 산물이고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걸립굿은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질적인 것이고 걸립굿의 상품화된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두레굿과 걸립굿은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청도의 농악을 형성하는 것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수원농악의 근간을 형성하고 하나의 특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구실을 하면서 수원농악의 특성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고장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수원지역의 농악이 이처럼 선명한 구실을 한 점은 다른 고장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3. 수원농악의 기여와 의의

수원농악의 기여와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의 농악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형적으로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으므로 이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인근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농악의 유형이 분포한다.

- 가) 두레농악
- 나) 남사당패농악
- 다) 성황제농악
- 라) 도당굿무악

가)는 두레굿으로 두레농악을 말한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두레굿이 두루 확인되고 대체로 거의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는 점이 확인된다. 두레를 결성하고 두레의 소임을 정한 뒤에 마을 수호신에게 신대로 신을 받은 뒤에 전개되는 것이 두레굿이다. 두레굿은 들이 넓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두레굿의 음악은 두레풍장이나 두레풍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가락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논농사 소리를 하면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두레농악은 수원 인근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경기도 남부 전역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두레굿이 완강하게 전개되는 것이었는지 현재의 정황으로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두레굿이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농사를 하는데 다른 고장과 수원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수원 인근 지역에서 두레굿의 소박한 형태에 대한 증언이 있음이 이를 증거한다.

나)는 떠돌이유랑예인집단의 걸립굿이나 걸립농악을 지칭한다. 걸립농악의 형태는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행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농악은 만연하였다. 그렇지만 경기충청 일대의 유랑예인집단은 남사당패와 같은 것들이 크게 흥행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안성 청룡사를 중심으로 하는 절걸립패가 있었으며, 이들은 도회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걸립 행위를 뚜렷하게 하고 다녔던 점이 구전이든 문헌이든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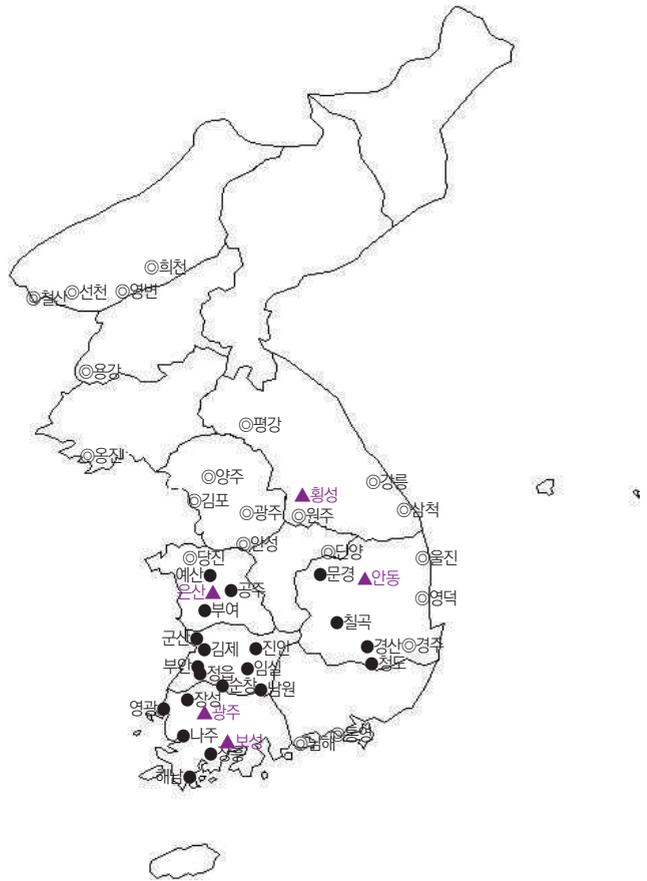
이들이 활용하는 가락은 거의가 경기도와 충청도의 가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실은 이들의 심층적 기저에서 드러나는 농악의 형태는 경기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사당패에서 연행하는 농악 가락이 거의 경기도 가락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을 본다면 이들의 농악 가락은 경기도의 가락, 그 가운

데서도 경기도의 두레가락이 주가 되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다)는 경기도 일원에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고장에서 행해지던 농악이어서 주목된다. 외관상 두드러지는 점은 무속의 성황제를 가락하였으며, 무당이 연행하는 무악과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서 마을주민의 농악이 결합되는 지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그러한 농악의 형태는 좀체로 보기 힘들지만 남녘 등지에서 행해지는 농악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성황제의 농악은 경기도 수원 일대, 화성, 시흥, 안산 등에서 행해지는 형태이다.

마을굿의 의례로 무악과 농악이 결합되는 것은 이례적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일체의 논의는 한 차례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한 논의에서조차도 이러한 농악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보고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의 특정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농악이 연행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고, 수원농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범례이다. 이 점에서 마을굿의 의례는 소중한 기여를 한다고 보여진다.

라)는 경기도 마을굿의 일환으로 놀아지는 것에서 농악이 아닌 무악이 마을의 의례 음악으로서 기능을 하는 전례를 찾을 수가 있다. 무악은 농악과 음악적 짜임새나 구성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무악이 농악의 기능을 대체로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기도 마을굿의 일환으로 하는 무악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국 동계 유행복합분포도〉

○: 무녀광대의 무악 ▲: 무녀광대의 무악과 마을사람 농악 ●: 농악

경기도 도당굿과 같은 것은 농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적으로 무악구조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도당굿의 진쇠나 도당굿의 올림채의 사례와 같은 무악이 경기도 농악의 길군악7채나 마당굿1채와 성격을 함께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것은 도당굿의 무악과 마을에서 연주하는 농악이 서로 근본적 바탕이 상통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수원지역의 사례는 위의 도표⁹⁾에서 보이는 바처럼 특징하게 변형을 이루는 형태임을 확인하게 된다. 수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에서 잠깐 유형적으로 살펴서 논의한 것에도 수원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마도 자료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주종을 이루다가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원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 곳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문화적 원천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다. 수원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다양성 위에서 일정하게 두레굿, 걸립굿, 성황제 농악, 도당굿의 무악과 연계되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점에서 경기도의 가락은 주목할 만한 것임이 확실하게 입증된다.

수원농악은 두레굿과 걸립굿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입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는 점에서 긴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성황제의 농악이나 도당굿의 무악마저도 일정하게 농악의 기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수원농악의 긴요한 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수원지역의 농악이 지니는 가치와 기여는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4. 맺음말

수원농악의 대립적 구성소는 두레굿과 걸립굿이다. 두레굿은 충실하게 전통사회의 인자를 간직하고 있는 농사의 기본적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두레와 두레문화의 산물이다. 모심기는 대체로 품앗이로 하면서도 논매기만은 철저히 농악을 중심으로 하는 두레굿을 통해서 이룩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두레굿은 수원에서는 동네굿이라고 하였으며, 동네굿은 무당이 하는 것 말고 무당이 아닌 농악대가 하는 소박한 형태의 원초적인 굿을 동네굿이라고 지칭하였음이 밝혀졌다.

9) 정병호, 1986, 『농악』, 열화당, 23쪽.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앞으로 많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주어서 두레곳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걸립굿이다. 걸립굿은 안성 남사당패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풍토를 많이 받아서 이 때문에 걸립굿이 수원에 변화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수시로 걸립의 대상이 된 지역이 수원이라고 하는 점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것은 수원이 물화가 변성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걸립굿이 가을걷이나 명절을 전후로 하여서 자신의 예능으로 걸립을 하던 패거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두레곳과 달리 떠돌이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선보이는 점에서 분명하게 다른 곳이었음이 밝혀졌다.

두레곳과 걸립굿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것은 농악 가락의 짜임새가 유사하고 정서적이고 미학적 공동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존립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무척 중요하고 경기도와 충청도의 지역적 친연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사실임이 밝혀졌다. 그것은 가락과 판제, 가림새 등이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걸립굿과 두레곳이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레곳과 걸립굿이 서로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내적 기반과 외적 충격이 수원 농악의 근간을 이루었다.

두레곳은 전통적인 문화의 산물이고, 걸립굿은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특정한 형태의 굿이다. 조선후기에 떠돌이예능집단이 생성되고, 아울러서 유랑예인집단이 주축이 되어 개척한 것이 걸립굿이다. 두레곳과 걸립굿이 한 시대에 공존한 것은 아니고, 퇴적층처럼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상이한 것들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두레곳과 걸립굿은 수원농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긴밀한 작용을 하였다고 본다. 두레곳의 근간을 바탕으로 걸립굿이 성립하고, 달리 걸립굿의 자극을 다시 받아서 두레곳 역시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하였다. 둘은 태생 과정에서 같은 기반을 유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다.

수원농악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수원농악의 저변은 민중들이 향유하는 민속문화의 토대이고, 그 터전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갈래와 예술적 직능을 가진 것들이 생산되었다. 수원농악이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민속예술축제에 출품되어서 변형을 이루었지만, 그 근간에 토박이 농악이 자리잡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수원의 문화적 다면성은 수용과 극복,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을 모두 한 자리에 담는 데서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고 구현되었음이 바로 증명된다. 그러한 점을 인정하고 수원농악이 앞으로 수원적인 정체성과 문화적 온축을 보여주는 것에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점이 다시금 전망된다.

수원농악은 한강 이남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남부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충청농악의 핵심 부위를 구현한다. 한강 이북의 지역에서는 농악이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흔하게 농사풀이 농악이라고 한다. 농사풀이는 소박한 두레굿의 변형이다. 이와 달리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남부의 일정한 고장에서 확인되는 성황제의 농악과도 다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레굿과 걸립굿이 구조적으로 연관되면서 이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수원농악은 농악의 형태, 놀이의 양태 등에서 전혀 다른 돌출한 특성을 드러낸다. 거의 두레굿과 걸립굿이 근간을 이루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농악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점을 드러내면서 세련된 맛을 구사하는 것임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수원농악의 가능성은 여러 모로 타진되고 전망된다. 앞으로 수원농악의 본질을 찾아서 이것들을 새로운 형태로 전승하고 계발하면서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수원농악의 장기적 전망은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대의 유산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수원농악의 단기적 전망은 이를 시급하게 문화재로 발굴하고 정착시키면서 확실한 의미의 향토문화유산으로 가꾸면서 사회 공공재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농악이 그만큼 우리의 곁에 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투고일 2017.09.26

심사일 2017.10.16.~10.30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수원시사-수원의 지리적 환경』1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김원호, 2000, 『경기도의 풍물굿』, 경기문화재단
- 김현선, 2014, 『한국농악의 다양성과 통일성』, 민속원
- 김현선·시지은·김은희·김혜정, 2016, 『수원두레』, 수원문화원
- 시지은, 2006, 수원지역 농악 연구-대유평농악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3집, 수원
학연구소
- 정병호, 1986, 『농악』, 열화당

ABSTRACT

A Study on The Farmer's Music in Suwon Region

Kim Heon-seon

This paper is a result of trying to find out that Suwon farmer's music. It is the traditional values and significance of Suwon farmer's music that we intend to prove intensively in the paper. Durae gut(두레굿) is a farmer's music, and Goelip gut(걸립굿) is a farmer's music picked up by a professional artist. These two kinds of Suwon farmer's music are deeply related to each other and reveal the diversity of Suwon farmer's music through it.

The Suwon area should recognize that it has cultural diversity and unity that did not appear well in the conventional discussion. In the Suwon area, farmer's music has faithfully preserved the tradition of such farming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 Suwon farmer's music of the Suwon region has developed and transformed into the farming family of the wandering group with real value. From this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area is a culturally bordered area where the point is a zone.

This clear example has not been mentioned in the previous discussion in that it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creating the cultural diversity of Suwon and succeeding it to the ideology of the new era, this argument is a good example to be accepted as a new one. We must inherit Durae gut and Goelip gut as a tradition of Suwon.

Key words : Suwon farm music, Durae gut, Goelip gut, cultural diversity, cultural unity

수원 지역 제조업체의 공간자료 분석을 통한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 진단

조성철*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수원 지역 제조업체 집적지의 공간자료 분석 |
| 2. 이론적 고찰 | (1) 등록공장 전수의 입지패턴 분석 |
| 1) 신산업 발생의 입지적 조건 | (2) 시점별 제조업체 집적지의 형성과정 추적 |
| 2) 신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의 공간적 입지패턴 | 2) 로봇 관련산업 제조업체 군집의 공간자료 분석 |
| 3)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 | 3)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의 현황 분석 및 가능성 진단 |
| 3. 자료 및 분석 방법 | (1) 로봇산업 사업체 입지 패턴의 공간자료 분석 |
| 1) 분석 자료 | (2)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 특징 고찰 |
| 2) 분석 방법 | 5. 맺음말 |
| (1) 사업체 집적지의 식별방법 | |
| (2) 로봇 사업체의 식별방법 | |
| (3)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의 식별방법 | |
| 4. 공간자료분석을 통한 수원 지역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 진단 | |

요 약

수원 지역은 우리나라 신생산업의 혁신을 오랜 기간 선도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로봇 및 드론산업 분야의 선도적인 사업체를 육성·유치해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구성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gional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E-mail: sccho@krihs.re.kr, Tel: 044-960-0153

졌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의 전략적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로봇산업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역내 사업체의 클러스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로봇산업과의 연관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제조업체 및 로봇 연관산업의 군집 형성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수원 지역에서의 로봇산업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수원 지역 등록공장 입지 분포의 전수자료 및 로봇산업협회의 내부 자료,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로봇산업과 연관산업을 식별하고 그 입지 패턴의 특이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제조업체 군집은 대기업 입지, 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긴밀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둘째, 수원 지역 등록공장 전수인 12,499개 사업체 중에서 881개 사업체가 로봇 연관산업으로 식별되었다. 특히 수원 시내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산업 군집이 관찰되었으나, 연관산업의 다양성 수준은 높지 않았다. 셋째,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는 50여개로 추산되며 군집을 형성하기보다 역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나 영통구를 중심으로 한 군집에서는 제조용 로봇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사업체가 다수 관찰되었다.

주제어 : 로봇, 클러스터, 사업체 군집, 연관다양성, 공간자료분석, 수원

1. 머리말

1969년 매탄벌 부지에 삼성전자 사업소가 입주한 이래 수원은 신생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제조업 거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1972년 흑백TV, 1976년 컬러TV, 그리고 1979년 VTR이 모두 수원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후로도 대기업 및 협력사 집적에 힘입어 전기·전자업종의 생산을 선도하던 수원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력이 집중된 혁신거점으로 그 기능을 옮겨갔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수원시의 생산역량은 빠르게 축소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배후도시인 화성, 오산, 평택으로 거대한 제조업체 군집이 확산되면서 역내 전체의 생산역량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던 수원은 최근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 호칭되는 제조혁신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역내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이다. 수원 지역은 이미 로봇과 드론산업에서 국내수위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가 다수 입지해있다.¹⁾ 이에 기초해 수원은 특화지구, 융·복합센터, 테스트베드, 메이커스페이스 등 로봇·드론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산업공간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신산업의 출현이 진공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전략적인 관계 속에 조직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신산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의 문제는 지역 내 이미 축적된 구산업의 역량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결합할 것인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수원 지역 신산업의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간 수원 지역에서 구산업의 역량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심 도시인 수원과 그 배후지역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역내 산업 생태계를 재생해왔는지 이해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 등록공장 입지 분포의 전수자료를 이용해 일련의 공간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가능성을 수원 지역의 맥락에서 진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원 지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로봇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사례는 전체 등록공장 중 극히 소수이며, 따라서 이들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시 말해, 로봇 산업의 기초적인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수원 지역에서도 로봇 산업은 여전히 배아기에서 성장기로 오르는 길목에 걸쳐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1) 박상우·권병필·조영훈·임병한·이태영·김정근, 2015, 『수원 로봇산업 발전방안 연구 : 재난안전로봇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미래산업을 진단하기 위해 먼저 역내 산업 생태계의 과거를 추적했다. 즉, 지역산업 포트폴리오의 발달 과정 및 확산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 역사적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위에 로봇이라는 신산업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지를 진단한 것이 본 연구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신산업의 발생 조건에 대한 최근 진화경제지리학 문헌의 논의를 고찰한 뒤, 이에 기초해 수원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 및 본 연구가 적용한 통계분석 기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간자료의 시각화와 군집 식별을 위한 공간자료분석기법이 제시되었고, 로봇산업과 로봇 연관산업을 식별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론이 설명되었다. 4장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먼저 수원 지역 제조업체 클러스터의 시기별 형성 과정을 1절에서 분석한 뒤,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특징을 다음 2절에서 분석하고, 마지막 3절에서 로봇산업 사업체의 현황과 입지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 같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로봇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수원 지역의 맥락에 뿌리 내린 형태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5장은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2. 이론적 고찰

1) 신산업 발생의 입지적 조건

경제지리학 문헌은 오랜 기간 새로운 산업이 어떠한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탐구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신산업의 입지(location)가 아니라 발생(emergence)에 대한 물음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진화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문헌부터라 여길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지리학 문헌이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의 공간적 특이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면, 2000년대 이후 진화경제지리학 문헌은 산업군집의 시공간적 진화 과정의 역동성을 분석의 주제로 삼고 있다. 진화경제지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설명한 Frenken & Boschma (2007)에 따르면 진화경제지리학은 산업, 네트워크, 도시 및 지역의 공간적인 진화 과정을 설명하되, 특별히 미시적인 경제행위자인 사업체의 발생, 진입, 성장, 이탈 과정에 분석적인 초점을 위치시킨다.²⁾

2) K. Frenken, R. A. Boschma, 2007,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volutionary economic

특별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깊은 신경지리학의 주제는 구산업의 쇠락과 신산업의 발생이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맞물리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구산업의 쇠락만큼이나 신산업의 발생이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까지 축적된 실증문헌들의 관찰은 신산업의 발생이 완전한 임의성(randomness)을 갖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입지적 조건에 의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현상임을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들이 강조했던 신산업 발생의 입지적 조건은 지역 내 산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다. 이들에 따르면 신산업은 대개 다양한 업종의 경계면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관련성이 없어 보였던 기존의 업종들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결합할 때 그 융합으로부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술이 융합해 스마트헬스 산업이 부상한 사례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뿌리는 Vernon(1966; 1979)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PLC)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레이몬드 버논(R. Vernon)의 이론적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제품의 원형(prototypes)이 개발되고 시험되는 산업의 태동기에는 투입요소의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진 소비자애의 접촉이 가능한 대도시권의 다양성이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배제품이 확립되어 품질보다 가격 경쟁이 산업의 질서를 지배하게 되는 성숙기에는 다양성보다는 업종 구조의 특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유리한 교외 입지가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품수명주기 이론의 고전적인 설명은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신산업의 발생을 관련지었던 2000년대 이후 지역학 문헌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실증적인 관찰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리로 제시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신산업의 발생을 설명하는 문헌들의 초점이 다양성(diversity)에서 “연관된 다양성(related variety)”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옮겨간다. 특히 Ron Boschma나 Koen Frenken 등을 위시한 일단의 진화경제지리학자들은 슈페터(J. Schumpeter)의 논리를 계승해 신산업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구산업으로부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construction)임을 강조했다. 즉, 신산업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산업들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의 기술적 특징이나 제도적 특징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의 ‘이유 있는’ 결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geography: industrial dynamics and urban growth as a branching proces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7. No. 5, pp.635-649

3) R. Vernon,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pp.190-207; R. Vernon, 1979, "The product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pp.255-267

Boschma & Frenken (2012)은 이러한 과정을 산업 다각화(diversification) 과정과 관련지었는데, 신산업의 발생은 대개 구산업의 경쟁력 쇠퇴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기존의 역량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해 제품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결과라는 것이다.⁴⁾ Boschma et al. (2013)은 스페인 50개 지역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존 산업의 분포가 구비되어 있을 때 신산업의 발생확률이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⁵⁾ 마찬가지로 Neffke et al. (2011)은 스웨덴 70개 지역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 뒤, 신산업과 지역 내 산업 포트폴리오의 기술적인 관련성이 높을수록 신산업의 역내 진입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⁶⁾ 이들 문헌은 신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의 밀도 있고 다양한 분포를 “연관된 다양성”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 역시 이 개념을 빌어 수원 지역 신산업의 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것이다.

2) 신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의 공간적 입지패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까지의 진화경제학 문헌은 연관산업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신산업의 발생과 입지가 집중되리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신생산업 일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의 맥락에 맞게 논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로봇산업 역시 신산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비슷한 이론적 예측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업종생태계의 다양한 특징을 신산업이라는 범주 하나에 압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가 될 것이다. 로봇산업은 신산업인 동시에 제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수직적 하청관계가 지배적인 질서로 자리하고 있는 기계제조업에 속해 있다. 따라서 전혀 다른 배경에서 파생된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 등의 신생산업과는 차별된 공간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신산업의 입지패턴을 단일화된 논리로 압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봇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 나름의 내적인

4) R. A. Boschma, K. Frenken, 2012, “Technological relatedness and regional branching”, In *Beyond Territory. Dynamic Geographies of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and Innovation*, ed. H. Bathelt, M. P. Feldman, D. F. Kogler, London: Routledge, pp.64-81

5) R. A. Boschma, A. Minondo, & M. Navarro, 2013,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t the regional level in Spain: A proximity approach based on product relatedness” *Economic Geography* Vol. 89, No. 1, pp.29-51

6) F. Neffke, S. Henning, R. A. Boschma, 2011, “How do regions diversify over time? Industry relatedness and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paths in regions” *Economic Geography* Vol. 87, pp.237-265

논리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봇산업은 이제 막 양산화 단계로 접근하고 있는 신산업이기에, 그 입지패턴을 엄밀하게 분석한 사례가 국내외 모두에서 희소하다. 로봇산업의 입지패턴을 이론화하기 위한 실증 역시 축적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로봇산업의 일반적 특징을 기존의 이론 틀에 대입함으로써 연역적으로 입지패턴을 가설하는 작업은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Asheim & Gertler (2005)와 Asheim et al. (2007)의 이론 틀은 좋은 시작점을 제공한다.⁷⁾ Asheim et al. (2007)은 현대적인 경제조건에서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야기하는 핵심 동인이 지식의 교류에 있다고 전제한다. 특히 각 산업에서 활용되는 지식의 종류는 산업의 공간적 집적수준과 형태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이러한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Asheim et al. (2007)은 산업지식의 종류를 종합적(synthetic), 분석적(analytic), 상징적(symbolic)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종합적 지식은 현장의 직관과 노하우를 결합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귀납적인 지식이다. 반면, 분석적 지식은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생산되는 연역적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지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심미적 디자인이나 예술적 이미지,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지식이다.

상기한 저자들은 어떠한 유형의 지식이 업계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는지에 따라 산업의 공간적 패턴이 상이하게 조직되리라 예견했다. 특히나 학술논문의 형태로 명시적(codified) 전수가 용이한 분석적 지식은 다른 유형의 지식에 비해 원거리로 교류될 수 있는 정보의 폭이 넓다.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지식거점을 중심으로 집적해 글로벌 연계를 폭넓게 형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형태의 공간구조가 주요하게 관찰된다. 이와 달리, 종합적 지식은 대면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교류가 중요하며, 기술변화 역시 공식적인 R&D 채널만이 아니라 생산현장에 착근된 지식 학습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간패턴 역시 생산기업들의 군집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사례가 잦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지식이 주로 활용되는 업종에서는 다양한 발상과 최신의 유행에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대도시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상의 틀에 대입할 때, 로봇산업은 종합적 지식이 주요하게 활용되는 부분이라 해석된다. 상기한 문헌에서도 로봇산업이 소속된 기계제조업은 종합적 지식이 지

7) B. Asheim, M. Gertler, 2005, "The geography of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ed. J. Fagerberg, D. C. Mowery, pp.291-317 ; B. Asheim, L. Coenen, & J. Vang, 2007, "Face-to-face, buzz and knowledge bases: Sociospatial implications for learning, innovation, and innovation policy" *Environment and Planning C* Vol. 25, pp.655-670

배적으로 활용되는 부문으로 규정된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나 사물인터넷 부문이 소속된 BT와 ICT 부문은 분석적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로 구분된다. 물론 최근의 신산업은 업종 간의 융합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융합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이 같은 구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중에는 전문화된 기계부품 제조업체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가 축적된 산업역량을 전환해 로봇분야로 다각화를 시도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⁸⁾

이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로봇산업은 종합적 지식을 지배적으로 활용하는 전문화된 기계제조업의 공간논리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으리라 가설한다. 종합적 지식이 활용되는 부분의 혁신은 많은 경우 문제해결형 지식습득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특수부품의 수급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생산공정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새로 보급된 기술을 기존 생산라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기업이 놓인 조건에 맞게 소화하고 응용하는 데서 혁신이 발생한다. 이 같은 지식은 기업이 놓인 지역적인 맥락에 대단히 의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특정한 지역에서 도출해낸 해법은 다른 지역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행위자들은 현장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산업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문제해결의 조직적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이론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수원지역 로봇산업의 입지패턴을 해석할 것이다. 즉, 신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의 발생과 입지는 여전히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대학이나 연구기관보다는 산업단지 등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군집이 형성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3)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을 수원 지역을 사례로 진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에서 길어낸 가설을 검증하는 성격의 연역적 연구라기보다는, 사업체 입지분포의 시공간적 집적 경향을 추적하며 특이점을 해석하는 귀납적 성격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발생조건에 대한 최근 논의를 반영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나름의 분석적 창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 소절에서 정리한 문헌들의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원 지역에서 로봇산업 사업체의 창업(birth) 혹은 진입(entry) 과정이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존 산업이 집적되어 있던 지역에 집중되리라 예측한다. 이러

8) 2017년 9월 한국로봇산업협회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취득한 내부자료에 기준한 해석

한 가설의 토대가 되는 논리는 앞 소절에서 설명한 최근의 신경지리학 문헌의 분석 결과에 맞닿아 있다. 선행 연구가 구축한 논리에 기초해, 본 연구는 신산업으로서 로봇 산업의 등장은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산업처럼 기존에 수원 지역이 특화해있던 구산업의 다각화 전략에서 상당 부분 뿌리를 갖고 있으리라 예상한다. 또 기존 사업체의 고속권 인재가 스피노프(spino-off)하거나 분사하는 데에서 로봇산업 사업체의 창업이 상당 부분 기인했으리라 예상한다. 이 같은 가설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로봇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산업 사업체의 군집 뿐 아니라, 로봇 산업과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연관 산업의 군집을 동시에 관찰하고 양자 간의 관련성을 해석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원 지역에서 로봇산업 사업체의 입지 분포가 지리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리라 예측한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깊이 의존하는 신산업들은 거리로부터 자유롭게 입지하는 기업이 되리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문헌들의 관찰은 정보통신 산업들의 입지가 오히려 더욱 강한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⁹⁾ 그 까닭은 지식, 특별히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s)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이 신산업의 태동기에 중요한 경쟁력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라 회자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강남, 판교, 가산·구로, 대덕 등의 집적지에 밀도 높게 군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로봇산업의 입지 패턴에 규정하는 데에 한국적 맥락의 다양한 제도적 기관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측한다. 먼저는 정부조직이 사업체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하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계획입지가 사업체의 집적을 촉진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대기업처럼 태동기 신산업 사업체에게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할 수 있고, 모방을 통한 학습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입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도 지역학 분야의 다수 문헌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입지가 신산업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자료패턴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체 군집과 인접한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의 존재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다.

9) I. Audirac, 2005, "Information technology and urban form: challenges to smart growth"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28, No. 2, pp.119-145

10) M. Feldman, 1999, "The new economics of innovation, spillovers and agglomeration: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 8, No. 2, pp.5-25

3.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수원 지역 제조업체의 시공간적인 집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이하 FEMIS; Factory Establish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원자료 DB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및 증설하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공장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FEMIS 자료망은 우리나라 등록공장 전수에 대한 주소지 및 업종 정보를 매월 갱신하고 있는 자료로서, 제조업체 표본자료 중에서는 표본의 규모나 주소지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2017년 8월 기준 가장 최근에 갱신된 FEMIS DB를 전달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수원학 문헌에서 수원 지역은 행정구역인 수원시 경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래 수원 도시권에 긴밀하게 편입되어 발전했던 화성과 오산, 평택 지역을 널리 포괄한다. 본 연구도 이 같은 입장을 계승하여 수원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의 행정시 경계를 연결한 수원 지역을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로 설정하였다. 2017년 8월 현재 수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공장의 전수는 12,499개로 추산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등록이 의무화되지 않는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경우는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방법

(1) 사업체 집적지의 식별방법

최근까지 공간계량경제학(spatial econometrics) 문헌은 사업체가 지리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탐색적공간자료분석(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기법을 개발해왔다. 공간자료분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검정하는 목적이다. 둘째는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입지정보 중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강도를 가진 군집을 구분해 시각화(visualization)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적으로 상관되

어 있는 인자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 다시 말해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고, 의미 있는 사업체 군집을 식별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해 본 연구는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검증하기 위한 Local Moran's I 검정을 실시한다. 특정한 속성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속성 정보의 오차항이 임의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값에 상관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각 읍면동의 사업체 분포가 연접해있는 읍면동의 사업체 분포와 상관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분포를 공간적으로 자기상관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사업체 입지 분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면, 사업체 분포가 몰려 있는 지역들이 한데 뭉쳐 군집을 이루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사업체 입지가 저조한 지역들 역시 공간적으로 연접하는 분포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수준은 사업체 입지분포의 군집 경향 여부를 통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량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적인 시각화와 관련해 본 연구는 사업체 등록주소의 점 좌표 정보를 이용해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 추정을 시도한다. 공간적인 밀도 함수의 한 종류인 커널밀도함수는 지도 상의 각 지점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부드러운 등고선 형태로 시각화하는 공간자료분석기법이다. 따라서 측정 오차로 말미암아 발생한 산만한 좌표 값을 도면에서 지워내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핫스팟(hot spots)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공간자료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ArcMap 10.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2) 로봇 사업체의 식별방법

앞 소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등록공장 전수를 포함하는 FEMIS DB를 기본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 이슈가 되는 것은 12,499개의 수원 지역 등록공장 전수로부터 어떻게 로봇 사업체를 식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FEMIS DB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산업용 로봇(C29280)'이라는 업종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용 로봇' 분류로 대표업종 코드를 기입한 사업체의 수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으며, 수원 지역에서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표기업의 경우에도 업종코드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동향이 산업용 로봇보다도 생활형·서비스용 로봇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용 로봇' 업종 코드에만 제한된 식별 작업은 적절성을 더욱 잃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로봇 사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두 가지 독창적인 접근을 구상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사업체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로봇산업협회의 회원사 명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요 생산품목 등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명부를 제공받았고, 이 중에서 연구소나 대기업을 제외한 전국 소재 125개 회원사를 로봇산업 사업체로 식별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의 기업DB에 정리되어 있는 주요 생산품목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DB를 이용한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로서, 국내 750만 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기업DB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한 기업 외에도 기업정보협의회와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사업체 속성정보를 통합해 2017년 3월 기준 국내 법인기업 전수인 1,569,474개의 사업체 정보를 갖고 있다. 기업신용평가를 위한 자료이기에 사업체가 직접 제출한 정확한 사업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기서 세부 생산품목 정보를 이용했다. 식별 방법은 사업체별 생산품목 목록에서 검색해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체 전부를 추출한 뒤, 이 중에서 생산품목이 지나치게 다양한 대기업 등 관련성이 적은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체를 로봇산업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소속사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 소재 455개 로봇산업 사업체를 추가 식별했다. 식별된 로봇산업 사업체 중에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수원 지역 소재 사업체를 분류한 결과 총 53개의 사업체가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사업체를 다시 FEMIS DB에서 식별해 공장 주소지 정보를 획득하였다.

53개의 사업체 수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수원 로봇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는 산업분석 컨설팅그룹인 ㈜알앤디비즈에서 제공받은 현황자료를 이용해서 수원시 소재 로봇산업 명부를 23개 사업체로 식별하고 있다.¹¹⁾ 반면에 본 연구가 수행한 단계적인 식별에서는 17개의 사업체만이 로봇산업 사업체로 식별되었다. 수원시정연구원(2015)의 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식별에서는 제외되었던 사업체들을 다시금 ㈜한국기업데이터의 DB에서 확인해보면 주요 생산품목에 로봇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품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알앤디비즈의 조사에서 로봇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로 식별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식별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사업체

11) 박상우·권병팔·조영훈·임병한·이태영·김정근, 2015, 『수원 로봇산업 발전방안 연구 : 재난안전로봇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를 로봇산업 사업체로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 지역 일대에 소재한 53개의 사업체만이 로봇산업 사업체로 식별되어 최종적인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의 식별방법

앞서 2장에서 제시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로봇산업과 연관된 업종의 사업체 군집을 식별하고 수원 지역에서의 입지 분포를 탐색한다. 로봇 연관산업의 식별을 위해서는 산업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신성장산업 분야별 업종매칭 결과를 이용하였다.¹²⁾ 서동혁 외(2016)는 박근혜 정부 시기 발표된 12대 신성장산업 목록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을 매칭시켰다. 구체적으로, 각 신성장산업 분야와 관련한 참고문헌 수집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부문별 핵심 구성요소를 정의한 뒤, 각 구성요소와 관련성이 깊은 세세분류 업종을 매칭시키는 방식이다. 12대 신성장산업 중에서 로봇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문은 지능형 로봇과 드론(무인 항공기)이다. 본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두 개 부문에 매칭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FEMIS DB에 다시금 매칭함으로써 수원 지역 소재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식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수행한 결과, 수원 지역 전체 등록공장인 12,499개의 제조업체 중에서 881개의 사업체가 로봇 연관산업으로 구분되었다.¹³⁾

12) 서동혁·최윤희·김승민·심우중, 2016,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산업연구원

13) 서동혁 외(2016)의 기준을 전국 사업체에 적용하면 로봇·드론 연관산업 사업체 수를 13,304개로 추산된다. 이에 기준해 수원지역의 로봇 연관산업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추정하면 1.17로서 전국수준보다 산업의 집적이 소폭 이뤄진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1〉 서동혁 외(2016, 산업연구원)의 신성장산업별 세세분류 업종매칭 결과

신산업	구성요소 (핵심 부품 및 기술·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로봇	1) 감지 및 인지 센서(오감인식, 공간감각, 복합감각, 생체인식 등)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2) 인간·로봇 상호작용(사용자 인식 및 상호작용, 명령/의도/음성 인식 등)	26310 컴퓨터제조업
		721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73202 제품디자인업
	3) 제어(경로계획, 보행제어, 자기위치 추정, 지도작성 등)	27211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4) 로봇·인공지능(지식표현, 추론, 학습) 및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미들웨어, 의사결정 메커니즘, 개발도구 등)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5) 작업/기구(물체조작, 이동기구, 구동기, 감속기, 매니퓰레이터)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6) 네트워크 인프라(로봇 통신 네트워크, 원격제어, 보안, 고장진단 등)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드론	1) (자상통제장비) 실시간 통제 컴퓨터	26310 컴퓨터 제조업
	2) (자상통제장비) 안테나 및 추적기 (자기추적용중 · 대형반사형안테나 · 탑재방향성안테나시스템 등)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3) (자상통제장비) 광대역 송수신장비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4) (자상통제장비) 통신제어기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5) (비행체) 센서(MEMS기반센서, G-센서) EO/IO/SAR 등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6) (비행체) 촬영용/센서용 멀티스펙트럼 카메라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27321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7) (비행체) 소형 배터리 부품	28119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8) (비행체) 항공용 회전익용 모터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3401 인형및장난감제조업		
9) 항공용 무선데이터 통신 서비스	61220 무선통신업	
	61299 그외기타전기통신업	
10) 무인항공기 정보활용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자료 출처 : 서동혁 외, 2016,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pp.197-198의 내용에 따라 작성

4. 공간자료분석을 통한 수원 지역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 진단

1) 수원 지역 제조업체 집적지의 공간자료분석

(1) 등록공장 전수의 입지패턴 분석

〈그림 1〉은 2017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수원 지역 등록공장 전수인 12,499개 사업체의 주소지 분포를 도면에 표현한 것이다. 산업단지 지정용지 면적을 별도의 레이어로 포함시켜서 사업체의 계획입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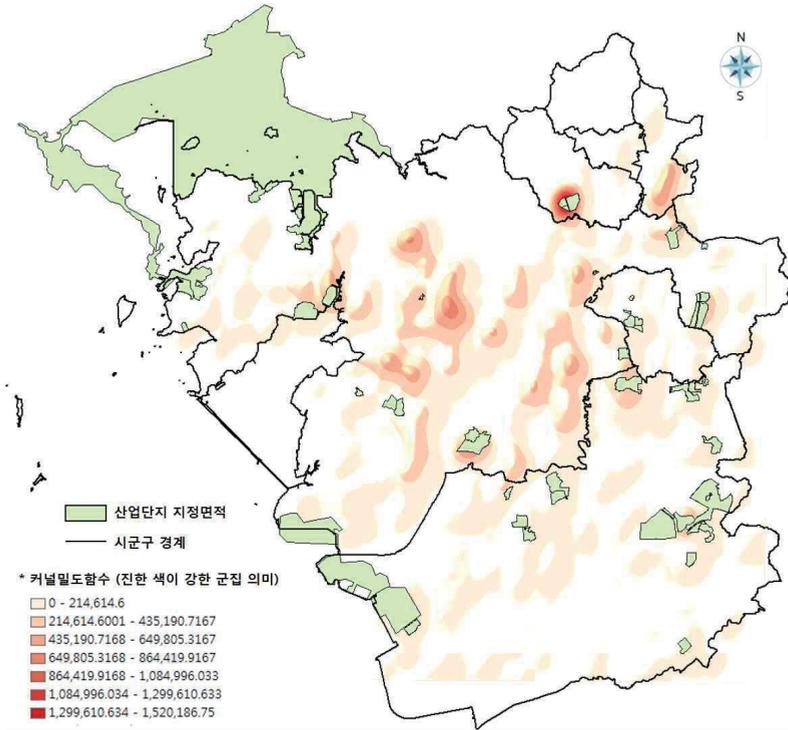
먼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수원시의 공장 분포를 살펴보면, 다수의 공장이 계획입지 형태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 산재된 개별입지 형태의 공장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1,175개 등록공장 중에서 508개의 등록공장이 계획입지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663개 공장은 개별입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계획입지 공장은 모두 고색동 일대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된 수원1·2·3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수원산단은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업종에 특화된 일반산업단지로서 전체 면적은 2016년에 완료된 3차 산업단지 면적까지 포함해 1,257,510㎡에 이른다. 종사자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는 (주)서연전자, (주)삼익전자산업, (주)인팩일렉스, (주)혜성옵틱스 등의 사업체였으며 자동차부품이나 기계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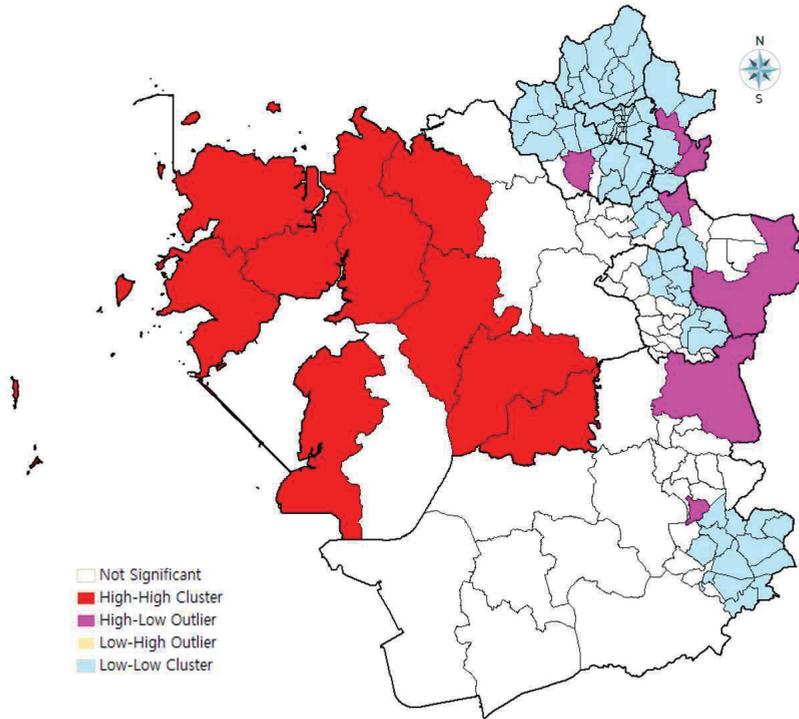
반면에 수원시내 개별입지 공장은 영통구청 앞에 위치한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을 둘러싸고 집적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663개의 개별입지 등록공장 중에서 452개의 등록공장이 영통구에 위치했는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삼성전자 및 연구단지의 남동부 배후를 부채꼴 형태로 둘러싸는 형태로 입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변 사업체의 업종을 살펴보면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특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삼성계열사와의 전·후방 연관관계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다.

수원시 밑으로는 수원 지역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입지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어진다. 화성시는 김해시, 김포시와 함께 개별입지 공장의 수나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8,238개의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등록공장 9,121개의 90.31%에 달한다. 계획입지 공장의 분포를 살펴보면 화성시에서 등록공장이 가장 집적되어 있는 계획입지는 마도일반산업단지, 발

안일반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다. 특히 발안산단은 3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화성시 최대규모 산단으로서 절반 이상의 사업체가 기계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50개 남짓의 전기·전자 분야 사업체가 함께 입지하고 있는 184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다. 마도산단과 발안산단 역시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에 특화된 유사한 업종 구조를 갖고 있다.

화성시와 연결한 오산시에서는 224개의 등록공장이 파악되었고, 이 중에서 64개의 사업체가 가장1·2일반산업단지 및 세마일반산업단지에 계획입지하고 있다. 가장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014년 6월 준공되어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30여개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크게 특색 있는 산업구조가 발달하지 못했으나 최근 오산시 내삼미동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전 및 스타트업캠퍼스 건립을 포함하는 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모멘텀이 탐색되고 있다.





* 자료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2017년 8월 기준)

* 주 : 위는 등록공장 점 좌표를 이용해 사업체 군집을 시각화하는 커널밀도함수 추정결과이며 아래는 수원지역 읍면동별 사업체 분포에 기준한 Local Moran's I 추정결과를 각각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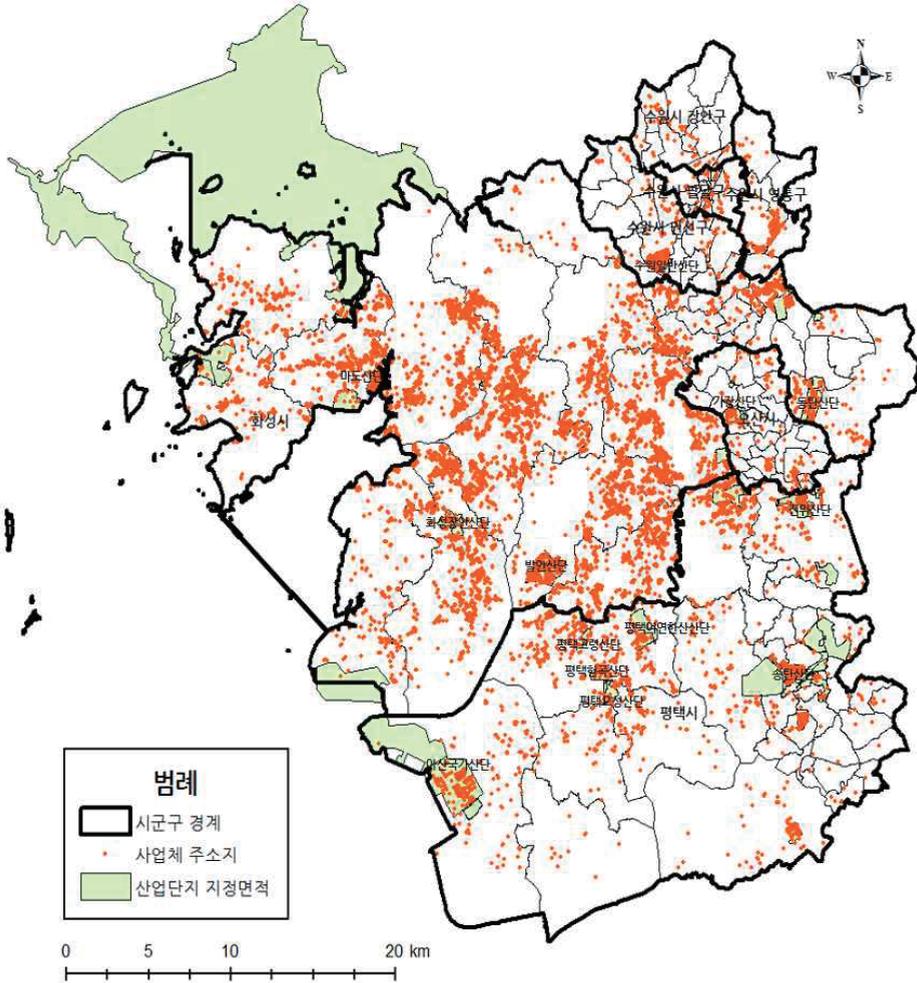
〈그림 1〉 수원 지역 등록공장 분포의 공간자료분석

수원 지역 남부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모두 1,979개의 등록 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화성시 수준은 아니지만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평택시는 전체의 68% 등록공장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고 있다. 반면 개별입지 공장들의 사업체 군집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다수 공장이 산지와 농지의 전용을 통해 산 능선을 따라 산재하는 입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641개의 사업체 중에는 석유화학 및 기계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의 규모가 가장 컸다. 지자체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중에는 150개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송탄일반 산업단지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석유화학과 기계업종의 순으로 업종 특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상 〈그림 1〉을 이용한 탐색과정은 지역 내 등록공장 입지패턴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지만, 각 사업체 군집의 밀도를 눈대중으로 식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

석을 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2>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앞 장에서 미리 설명된 공간자료분석기법들을 수행한 결과를 도면에 표현했다. 먼저 좌측에 제시된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는 산재해있는 사업체 분포 중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밀도를 가진 사업체 군집을 부드러운 등고선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수원시를 살펴보면, 수원1·2·3일반산업단지 일대의 군집 밀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수원 지역 일대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사업체 집적이다. 동시에 삼성전자 계열사가 입지한 영통구청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밀도의 사업체 군집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밀도의 사업체 군집이 등장한 지역은 화성시였다. 특징적인 점은 산업단지 지정용지에 밀집한 사업체 밀도보다도 개별입지 공장들의 클러스터에서 높은 수준의 군집 밀도가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화성시 팔탄면과 비봉면 일대의 개별입지 공장 군집 밀도는 수원 지역 개별입지 군집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오산시와 평택시에서는 산업단지에 일정 수준의 입지 밀도가 관찰된 점을 제외하면, 특징적인 군집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오산시와 평택시의 개별입지 공장들은 수원이나 화성과 달리 공간적인 집적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2>의 우측 그림은 수원 지역 등록공장 입지의 공간적인 자기상관성을 검정하는 Local Moran's I 추정결과이다. 지역 전체 입지패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추정하는 Global Moran's I 지표와 달리, Local Moran's I는 세부지역별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검정한다. 위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처리된 High-High(H-H) 클러스터는 해당 읍면동에도 다수의 사업체가 집적해있지만 연접해있는 주변 읍면동에도 사업체 분포가 몰려 있는 경우, 다시 말해 사업체를 군집시키는 힘이 강하게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핑크색으로 표현된 High-Low(H-L) 클러스터는 해당 읍면동의 사업체 밀도는 높으나 주변 지역의 사업체 분포는 저조했던 경우, 다시 말해 외딴 섬처럼 사업체 밀도가 홀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반대로 Low-High 클러스터는 해당 읍면동의 사업체 분포는 저조하나 주변 지역에 사업체 군집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처리된 읍면동 지역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정도가 어느 형태로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 자료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그림 2〉 수원 지역(수원·오산·화성·평택)의 등록공장 입지현황 (2017년 8월 기준)

이제 추정된 공간통계량을 해석해보자. 먼저 사업체 분포가 밀집된 지역이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H-H 클러스터는 화성시 서부 일대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개별입지 공장의 연담화가 방사형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며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지역으로서, 일부 지역은 수도권 난개발의 사례로 곤잘 지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화성시의 개별입지 공장 클러스터가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다음 소절에서 시점별 입지패턴 자료를 비교하며 추가 고찰할 것이다. 반면, 외딴섬 형태의 공간분포를 가리키는 H-L 클러스터는 수원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권선구 고색동 일대와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위치한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식별되었다. H-L 클러스터는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면, 평택시 진위면 일대까지 이어져있다. 이들 지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및 기흥사업장 일대의 개별입지 공장(반월동), 동탄테크노밸리 내 동탄일반산업단지 입주 계획입지 공장(동탄면), LG디지털파크가 위치한 평택진위일반산업단지의 계획입지 공장(진위면) 클러스터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

(2) 시점별 제조업체 집적지의 형성과정 추적

앞 소절의 공간자료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수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적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체 클러스터(H-L 클러스터)는 대개 산업단지 조성의 결과이거나 삼성전자 사업소 주변으로의 연관사업체 집적으로 야기된 결과이다. 둘째, 수원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연담화되어 형성되고 있는 제조업체 클러스터(H-H 클러스터)는 화성시 일대에 넓게 퍼져있는 개별입지 공장들의 군집이다. 이제 자연스레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각 유형의 클러스터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이다. H-L 클러스터의 경우 지자체이든, 대기업이든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발생 과정을 추측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다. 그러나 H-H 클러스터의 경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사업체 군집이 뻗어나가는 공간적 논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추이 뿐 아니라 시점 간의 추이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림 3>은 1970년대부터 수원 지역 등록공장의 입지 분포를 공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상단 좌측 지도에 표시된 사업체 분포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등록된 수원 지역 공장들의 입지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단, 시점 간 비교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본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2017년 8월 현 시점에서 정상운영되고 있는 등록공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시점에 수원 지역에 등록되었다가 폐업했거나 이전한 공장의 경우는 <그림 3>의 시점별 분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그림 3>의 좌측 상단 지도가 표현하는 바는 1970년대 수원 지역 등록공장 전수의 분포가 아니라, 1970년대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수원 지역에서 정상운영되고 있는 등록공장 전수의 분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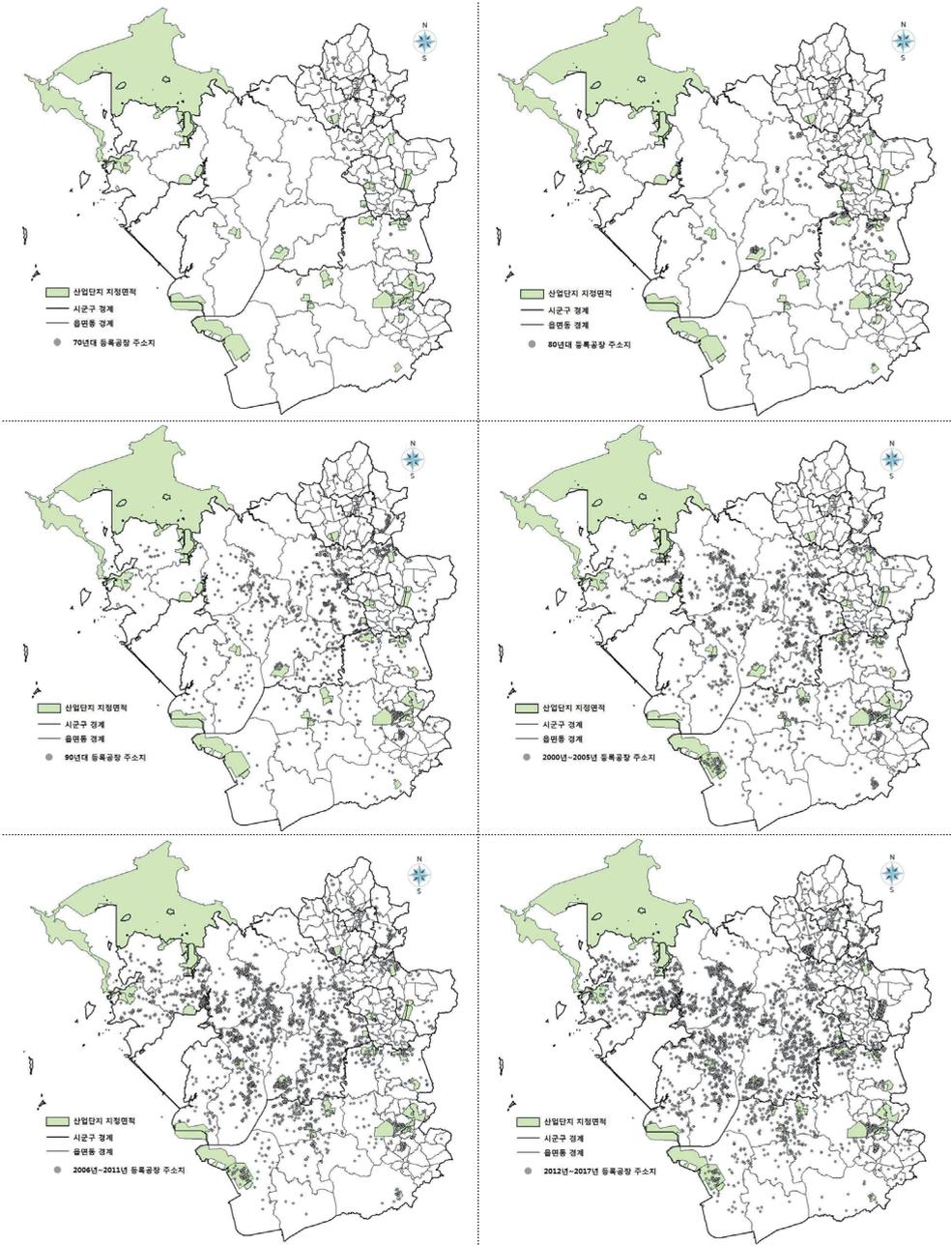
이러한 가용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림 3>의 시점 간 변화 추이는 수원 지역

제조업체 집적지 형성의 과정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원 지역에서 활동했던 42개 등록공장의 집적지는 먼저 수원시 매탄동 일대 삼성전자 사업소 인근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에도 상당한 숫자의 등록공장이 관찰되었다. 이들 사업체 군집의 형성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대도시권 인구분산 정책 및 서울시 제조업체 공장의 경기도 이전정책에서 상당 부분 기인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1970년대에 수원 시내에 주로 집중되던 등록공장 분포는 1980년대부터 평택시와 화성시 일대로 그 외연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평택 진위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지정된 지역이나 화성시 향남읍 현재 발안산업단지 부근에 등록공장 군집이 관찰되었다. 발안산업단지의 조성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진위산단 역시 지정일이 2004년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에서는 계획입지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는 화성시로의 제조업체 공장 확산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90년대 등록되어 현재 정상운영중인 1,123개 등록공장 중에서 848개의 등록공장이 화성시 일대에 입지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지정된 산업단지들이 공장의 집합적 입지를 촉진하는 구실을 상당 부분 수행했으나, 팔탄면과 비봉면 일대를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군집이 형성되는 추세 역시 뚜렷하다. 그러나 화성시 일대의 폭발적인 제조업체 확산이 두드러진 시기는 결국 2000년대 이후라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전반기는 90년대 형성되었던 제조업체 군집을 중심으로 등록공장의 수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다. 2000년대 후반기는 제조업체 군집 간의 연담화를 통해 이어지며 거대한 개별입지 공장 클러스터 형성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2012년 이후의 등록공장 분포는 2000년대 후반의 입지 분포와 비교해 사업체 군집의 위치가 대체로 중첩되고 있으나, 군집의 밀도와 외연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확인된 수원 지역 개별입지 공장 확산의 원인은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원시를 개발행위가 규제되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오산 및 화성 일대를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공장신설을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 전후 급증한 공장용지 수요는 당시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되었던 의정부, 남양주 일대의 수도권 북부로 대거 흡수되었다.

14) 강호제·류승한, 2011, 『수도권 스마트성장 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72-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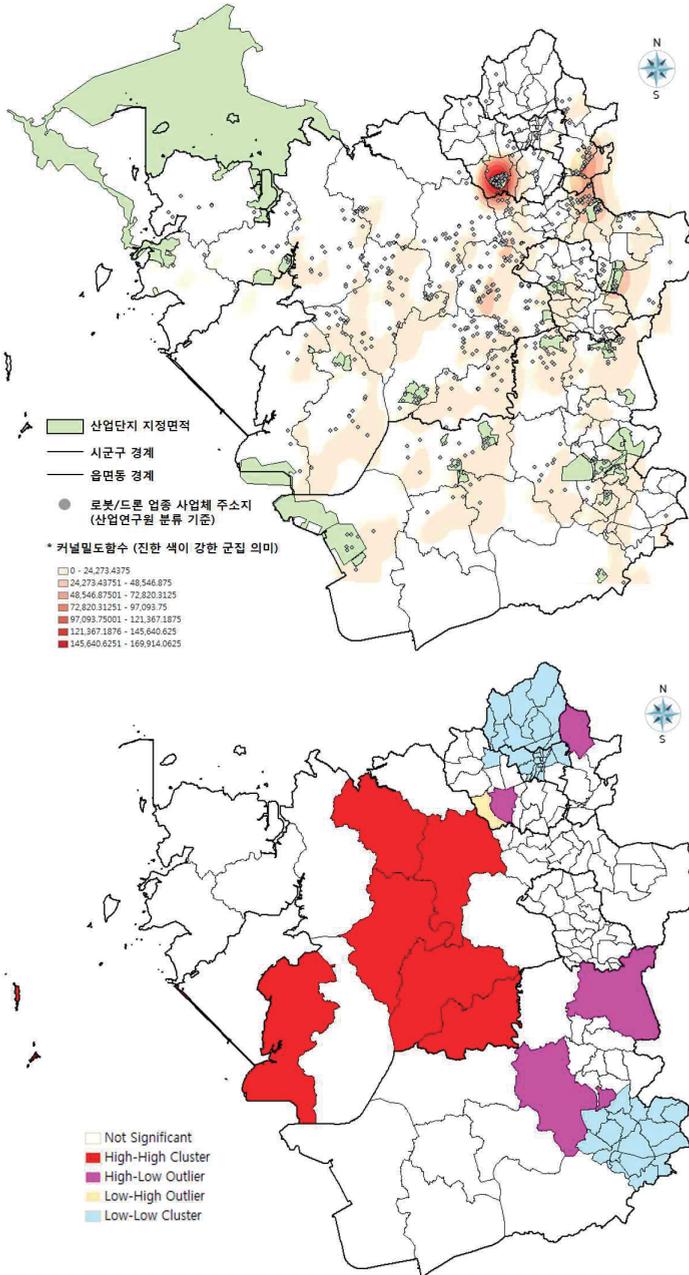
* 자료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2017년 8월 기준)

〈그림 3〉 수원 지역 등록공장 분포의 시점 간 변화 추이

수원 지역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은 수도권 권역조정안이 발표된 1994년 1월인데, 이 개정안에서 정부는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 있던 화성과 오산 일대를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한다. 또 비슷한 시기 국토관리이용법 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을 신설함으로써 산·농지 전용을 통한 공장신설을 허용한다. 이어서 1996년에는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신설을 허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 이상의 규제완화 과정은 과밀억제권역 끝자락에 연결한 화성시 일대로 폭발적인 개별입지 공장이 집중하게끔 유도하는 결과를 빚는다. 규제완화로 인한 공장신설 물량 증가가 충분히 예측되는 시점에서 정부에게는 산업단지 개발 등의 계획입지 수단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적어도 수원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방도로 주변이나 전용된 산·농지 주변에서 개별입지 공장의 무질서한 확산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2) 로봇 관련산업 제조업체 군집의 공간자료분석

앞에서 분석한 제조업체 군집의 확산 과정을 배경으로 삼고서, 본 소절에서는 수원 지역 로봇관련 업종 사업체의 입지 분포를 분석한다. <그림 4>는 수원 지역에 산재한 881개 로봇 연관산업 사업체의 분포를 표현한 뒤 공간자료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좌측 그림에는 사업체 군집의 식별 및 시각화를 위한 커널밀도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로봇 연관산업의 클러스터가 가장 높은 빈도로 집중되어 있는 지점은 수원1·2·3 일반산업단지이며, 이어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으로 다수의 사업체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동탄산업단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집이 관찰되었으며, 개별입지 공장의 군집 중에는 화성시 정남면 일대의 로봇 연관산업 군집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그림 4>의 아래 그림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검정을 위한 Local Moran's I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수원일반산단 등의 집적지가 주로 H-L 클러스터로 구분된 가운데, H-H 클러스터는 개별입지 공장의 군집이 이어져있는 비봉면, 봉담읍, 팔탄면, 향남읍, 양감면, 우정읍 일대를 두루 연결하고 있다. 두 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양자가 식별하고 있는 군집의 패턴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커널밀도함수가 국지적인 클러스터 식별에 집중하는 데 반해, Local Moran's I는 제조업체 군집이 읍면동끼리 공간적으로 연결해있는 패턴을 읽어내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판단된다.



* 자료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그림 4〉 수원 지역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의 군집경향을 보여주는 공간자료분석의 결과

〈표 1〉에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차용한 산업연구원의 로봇 관련산업 업종 목록은 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인지센서 기술부터 인공지능 기술까지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군집이 로봇산업의 어떠한 구성요소와 주로 연관되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식별된 각 클러스터의 세부업종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2〉에서는 로봇 관련산업 사업체 128개가 집적해있는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업종 분포를 살폈고, 이어서 84개의 관련사업체가 밀집한 수원시 영통구 클러스터의 업종 분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중심부에서 로봇관련 업종 184개 공장이 다수의 소규모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비봉면, 봉담읍, 팔탄면, 향남읍, 양감면 일대의 업종 구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수원일반산단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과반 이상인 70개의 등록공장이 ‘그외기타 전자부품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서 드론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의 구성비가 높았고, 직접적으로 로봇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용로봇제조업’ 사업체 역시 전체 사업체의 10%를 상회하는 14개가 입지하고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 일대 역시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에 ‘기타주변기기제조업’의 비중이 높았고,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각 업종이 고른 비중으로 입지하는 패턴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개별입지 군집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70% 가량이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특화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로봇의 제어와 관련되는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의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 수원 지역 로봇 연관산업 대표 클러스터의 업종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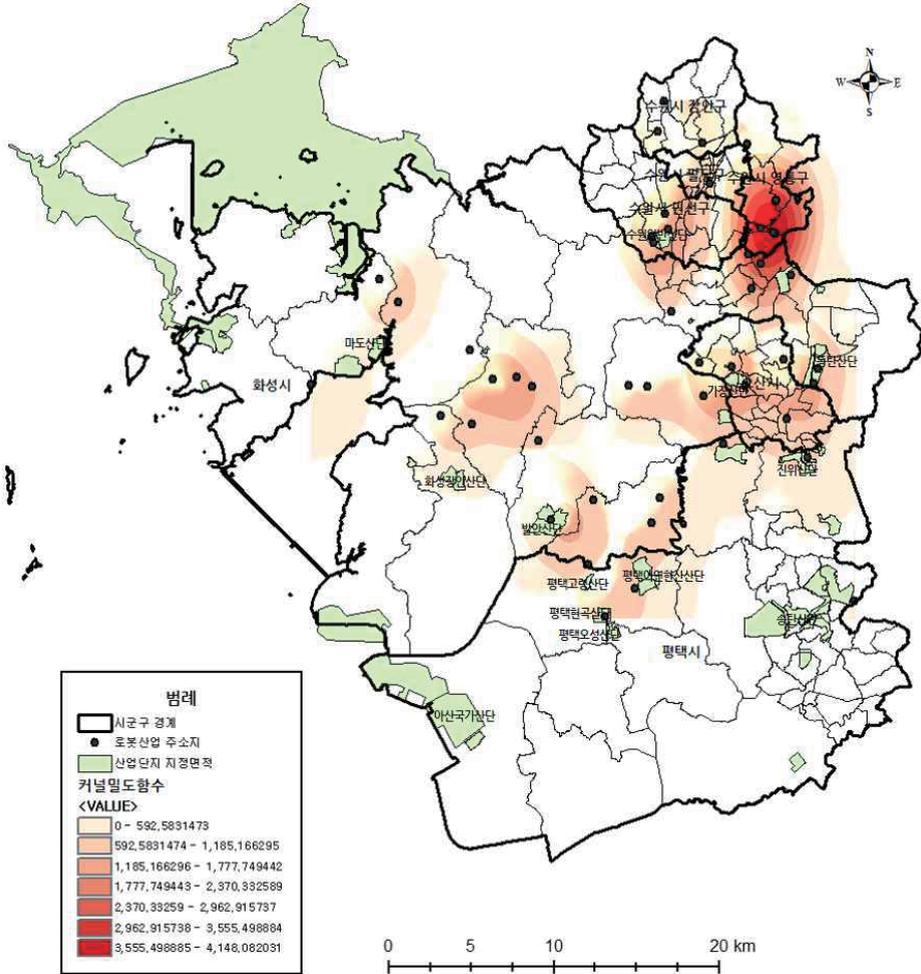
신산업	구성요소	한국표준산업분류	수원시 일반산업단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개별입지 군집
클러스터별 사업체 전체 수			128	84	184
로봇	1) 감지 및 인지 센서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4	3	1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70	24	126
	2) 인간·로봇 상호작용	26310 컴퓨터제조업	5	0	0
		27211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1	0	0
	3) 제어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1	6	9
		26329 기타주변기기제조업	3	13	9
4)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14	4	5	
5) 작업/기구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3	2	1	
6) 네트워크 인프라	26310 컴퓨터 제조업	5	4	1	
드론	2) 안테나 및 추적기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10	12	16
	3) 광대역 송수신장비				
	4) 통신제어기				
	5) 센서				
	6) 촬영용/센서용 멀티스펙트럼 카메라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0	0	0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0	0	0
	7) 소형 배터리 부품	26422 이동전화기제조업	0	0	0
		27321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1	2	9
	8) 항공용 회전익용 모터	28119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16	12	5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0	1	0
	33401 인형및장난감제조업	0	0	2	

자료 출처 : 서동혁 외, 2016,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pp.197-198의 내용에 따라 작성. 원 저자들의 분류에는 로봇 및 드론산업과 관련한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 일부 비제조업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제조업체 등록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정리하였음

주 : “수원시 일반산업단”은 수원1·2·3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로봇 관련산업 사업체를 의미하며, “수원시 영통구”는 영통구 일대 삼성전자 주변에 입지한 로봇 관련산업 사업체 군집이고, “화성시 개별입지 군집”은 Local Moran’s I 추정에서 식별된 비봉면, 봉담읍, 팔탄면, 향남읍, 양감면 일대의 사업체 군집임

앞서 본 연구의 2장은 신산업의 발생 조건이 연관산업의 다양성과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최근 문헌들의 실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표 2〉의 패턴을 다시금 평가하면 세 개의 클러스터 모두 높은 수준의 연관 다양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세 개의 클러스터 모두에서 로봇 산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지원하는 업종들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사업체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전체 업종의 대다수가 전자부품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화성시 클러스터는 적어도 연관다양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신산업의 발생지로서 부적절한 업종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수원 시내 두 개의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연관다양성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 일반산업단이 로봇의 제어와 인공지능 및 소프트

트웨어와 관련된 업종을 거의 입주시키지 못한 데 비해, 영통구 일대는 이 지점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확보하고 있어 전자부품제조업 분야와의 지역 내 융합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 자료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그림 5〉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의 군집경향을 보여주는 커널밀도함수의 추정 결과

3)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의 현황 분석 및 가능성 진단

(1) 로봇산업 사업체 입지 패턴의 공간자료 분석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림 5>는 본 연구가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라 식별한 53개 사업체의 주소지 분포를 표현한다. 시각적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업체 주소지가 상대적으로 몰려 있는 지점이 붉은 색의 군집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수행한 커널밀도함수 추정과 비교할 때 각 군집의 밀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성숙한 의미의 사업체 군집이라 해석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일단 가장 높은 밀도를 기록한 지점은 수원시 영통구였는데 10개 남짓한 사업체가 근접한 거리에서 몰려 있는 패턴을 보인다. 이 밖에도 수원 1·2·3일반산단을 포함해 각 산단에 복수의 사업체가 함께 입지해있는 패턴이 관찰되지만, 대체로 53개의 로봇 사업체는 수원 지역 곳곳에 산재해있는 모습을 보였다. 즉, 수원시 영통구 일대를 제외하면 수원 지역의 로봇산업 사업체는 공간적인 집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클러스터 내에 조금씩 흩어져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작업가설은 연관산업이 다양하게 집적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신생산업의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는 것이었다. 앞 소절의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 수원시 일반산단 지역이나 영통구 지역의 로봇산업 사업체 입지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통구를 제외하면 특징적인 군집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연관다양성과 신산업 발생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수원 지역의 로봇산업이 여전히 태동기에 머물러 있어 의미 있는 군집 경향을 식별하기 어려운 데서 기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로봇산업 사업체의 집적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산업입지 정책 수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2)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 특징 고찰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활용해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의 면면을 더 깊이 살펴보았다. 국내 로봇산업이 서비스용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데 반해, 수원 지역의 로봇산업 사업체들은 제조업용 로봇을 다루는 비중이 높았다. 대표적으로는 웨이퍼 반송로봇, FPD 반송로봇 등 이적재용 로봇설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사업체로서 수원시 권선구의 라온테크와 오산시의 ㈜티이에스

가 자리하고 있다. 또 용접용 로봇을 생산하는 (주)페이브텍 등의 사업체와 가용용 및 표면처리 로봇에 특화된 (주)두림야스카와 등의 기업이 관찰되었다. 권선구의 로보스타, (주)디씨티, JS메카트로닉스, 동성자동화 등도 모두 제조용 로봇을 생산하며, 팔달구의 (주)피에스아이, 영통구의 윈텍오토메이션, 아이엠티, (주)사이보그랩 역시 제조용 로봇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서비스용 로봇과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문서비스용 로봇 중에는 복강경수술 로봇을 생산하는 (주)미래컴퍼니가 대표적인데, 화성시 양김면에 입지하고 있었다. 개인서비스용 로봇 중에는 청소기로봇으로 유명한 (주)마이크로인피니티와 장애보조용 로봇을 생산하는 (주)엑소아틀레이트아시아가 대표적이다.

가장 큰 군집으로 식별되었던 수원시 영통구 소재 사업체들을 살펴보면, 사업체 다수가 지식산업센터 등 정책적으로 공급된 산업공간에 계획입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먼저 (주)페이브텍은 영통구 신원로의 지식산업센터인 이노플렉스에 입주하고 있는데 자동용접로봇 기술이나 레이저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통구 이노플렉스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엑소아틀레이트아시아는 하지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이며 2016년부터 국내 재활보행 로봇 시장에 진출하였다. 또 수원시내 소재 기업으로서 (주)마이크로인피니티는 2001년 창업해 광교테크노밸리 한국나노기술원에 입주한 사업체로서 로봇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항법센서와 항법시스템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법전문회사였다. 이후 축적된 항법기술을 응용해 로봇산업의 핵심 요소인 위치파악·경로인식 기술을 이동형로봇이나 청소로봇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형 로봇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매출액 규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산업용로봇 전문기업의 경우가 많았다. 수원 지역 로봇산업 사업체 중 매출액 규모에서 선두를 기록한 기업은 화성시 남양읍에 입지하고 있는 (주)두림야스카와이다. 이 기업은 한국의 두림로보틱스와 일본 야스카와전기가 자본·기술 제휴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스마트공장의 핵심 기술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20여곳에 수출하고 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 규모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오산시 가장동에 입지한 (주)티이에스다. 국내유일의 진공이송로봇 전문업체를 자부하고 있는 (주)티이에스는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대기형 로봇 생산에 있어 국내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 기업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주)크렌텍이었는데 산업용 로봇과 크리닝 로봇 생산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5. 맺음말

(1) 분석 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수원 지역 제조업체 및 로봇 연관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역내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본 연구의 추산에 따르면 수원 지역은 12,499개의 등록공장 전수 중에서 881개 사업체가 로봇 연관산업으로 분류되어 로봇산업의 성숙을 위한 구조적인 토대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 제조업에 비해 로봇 연관산업의 군집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원일반산단이나 삼성전자 사업소 주변 등 본 연구에서 식별된 일부 사업체 군집 역시 연관다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표 2>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로봇기술의 구성요소 중에서 수원 지역의 연관산업 클러스터는 “감지 및 인지 센서” 기술에 높은 수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오랜 기간 전기·전자업종의 핵심기술을 축적해 왔던 수원 지역 산업구조의 역사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상이한 기술 부문의 융합으로부터 성장의 모판을 찾는 신산업의 발전 경로를 고려할 때 더 다양한 연관산업의 역내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원 지역 로봇산업은 아직 사업체 수가 특징적인 군집을 형성할 만큼 많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지역별 연관산업의 분포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해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조용 로봇 부문에서는 국내 굴지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가 몇몇 입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로봇산업으로 진입해 창업한 경우보다는 항공산업 등 연관산업에 종사하다가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포착해 시장에 진입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원 지역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 등 배후지역으로 넓게 산재해있는 로봇 연관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입지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봇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거점별 연관산업의 분포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에서의 스핀오프(spin-offs) 및 기능적 연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산업에 대한 입지를 공급할 때 클러스터 형성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연구의 기여 및 한계

본 연구는 실증적,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수원학 및 기존 지역학 문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실증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원 지역의 제조업체 집적 및 신산업 사업체의 입지 현황을 탐색한 희소한 연구 사례로서 수원학 문헌에 기여한다. 특히 본

연구가 제기한 수원 지역 산업입지의 특수성은 수원학 문헌에 새로운 연구 주제를 파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관산업의 집적이 신생산업의 발생조건으로 구실한다는 본 연구의 문제 제기는 향후 연구에서 더 정교하게 검증될 만한 이론적 가치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산업 사업체의 식별을 위한 독창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범했다.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 DB를 이용해 신생업종의 사업체를 식별한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은 국내외 문헌을 통틀어 희소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이용했던 기존 문헌들의 접근 방식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기존 통계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신생업종 사업체를 식별하는 데에 적용될 잠재적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수원 지역의 제조업체 군집 형성 과정을 비증 있게 분석했으나, 각 시점별 제조업체의 입지 정보가 아니라 현재 정상운영 중인 공장의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시점별 자료를 구성했기에 적극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한 시점에서 수원 지역에 입지했으나 나중 시점에서는 폐업하거나 사업지를 이전한 기업들이 자료에 반영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로봇 연관산업의 입지와 로봇산업 사업체 발생 간 상관성을 탐색했지만, 수원 지역의 로봇 사업체 53개의 표본 규모로는 정교한 통계적 분석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로봇 연관산업 클러스터와 로봇산업 클러스터 간의 공간적 연계를 눈짐작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양자 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거나, 로봇만이 아닌 기타 신산업 및 그 연관산업으로 분석을 확장할 수 있다면 풍부해진 종속변수의 변산을 이용해 더 엄밀한 형태의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원지역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시공간 변화를 해석하고 있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클러스터의 시공간 변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본격적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의 실증연구들은 시간집중(temporal clustering)이나 시공간집중(space-time clustering) 기법을 사용해서 공간적 군집의 변화상을 해석하고 있다(Kang, 2010). 본 연구의 <그림 3>은 수원지역 제조업 클러스터의 변화상을 각 시점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는 식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동일 자료에 시공간집중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시점 간 클러스터의 변화상 뿐 아니라 변화의 정도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통계량의 도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태동 단계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관찰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공간 분석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신산업의 발생경로를 탐구하는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추이를 통합적으로 추정하는 최근의 분석기법 적용이 더 적

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일 2017.08.30

심사일 2017.10.16.~10.27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강호제·류승한, 2011, 『수도권 스마트성장 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박상우·권병필·조영훈·임병한·이태영·김정근, 2015, 『수원 로봇산업 발전방안 연구 : 재난안전로봇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서동혁·최윤희·김승민·심우중, 2016,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산업연구원
- 한국산업관리공단,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2017년 8월 기준)
- B. Asheim, M. Gertler, 2005, "The geography of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ed. J. Fagerberg, D. C. Mowery, pp.291-317
- B. Asheim, L. Coenen, & J. Vang, 2007, "Face-to-face, buzz and knowledge bases: Sociospatial implications for learning, innovation, and innovation policy" *Environment and Planning C* Vol. 25, pp.655-670
- I. Audirac, 2005, "Information technology and urban form: challenges to smart growth"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28, No. 2, pp.119-145
- R. A. Boschma, K. Frenken, 2012, "Technological relatedness and regional branching", *In Beyond Territory. Dynamic Geographies of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and Innovation*, ed. H. Bathelt, M. P. Feldman, D. F. Kogler, London: Routledge, pp.64-81
- R. A. Boschma, A. Minondo, & M. Navarro, 2013,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t the regional level in Spain: A proximity approach based on product relatedness" *Economic Geography* Vol. 89, No. 1, pp.29-51
- M. Feldman, 1999, "The new economics of innovation, spillovers and agglomeration: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 8, No. 2, pp.5-25
- K. Frenken, R. A. Boschma, 2007,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industrial dynamics and urban growth as a branching proces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7. No. 5, pp.635-649

- H. Kang, 2010, "Detecting agglomeration processes using space-time clustering analys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Vol. 45. No. 2, pp.291-311
- F. Neffke, S. Henning, R. A. Boschma, 2011, "How do regions diversify over time? Industry relatedness and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paths in regions" *Economic Geography* Vol. 87, pp.237-265
- R. Vernon,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pp.190-207 ; R. Vernon, 1979, "The product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41, pp.255-267

(⇨)한국기업데이터, 인터넷 기반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CRETOP+ 웹사이트
(www.cretop.com)

한국산업관리공단,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원자료 DB (2017년 8월 기준)

ABSTRACT

Exploring the emergence of robot industries in the Suwon region

Cho, Sungchul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ways how the emergence of robot industries in the Suwon region has been shaped by existing industrial capabilities wherein the region are specialized. Inspired by previous studies that have highlighted the critical roles of ‘related variety’ on the birth of new industries, I expect that the emergence of robot firms in the Suwon region have been concentrated in regions in which clusters of related industries and assets exist. To this aim, the paper analyzes locational patterns of 12,499 manufacturing firms in the Suwon region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 existing set of industries in the region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robot industries. Findings suggest that the Suwon region may strategically focus on the new industries that are functionally related to its current industrial portfolios.

Key Words : Robot, Cluster, Agglomeration, Related Variety, Spatial Data Analysis, Suwon

수원시 주택가격 변동과 인구이동의 인과관계 분석*

권성문**, 김리영***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의 인과관계 분석 |
|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 분석개요 |
| 1) 인구이동과 주거이동 | 2) 인접지역 가격 변동과 수원시 인구 이동 |
| 2) 선행연구 검토 | 3) 해당 지역의 가격 변동과 인구이동 |
| 3. 주택가격 및 인구이동 현황 | 5. 맺음말 |
| 1) 주택가격 추이 | |
| 2) 인구이동 추이 | |

요 약

이 연구는 수원시 주택가격 변동이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 인접한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이 수원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수원과 수원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고양, 성남, 용인의 지역을 포함하여 그랜저인과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원시 인구이동은 인접한 지역과의 이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접지역으로의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수원을 포함한, 성

*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 책임연구원(Associate Research Fellow, Dep. of Policy Research, Korea Housing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전문연구원(Research Fellow, Dep. of Urban Planning,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kimlee@suwon.re.kr, Tel: 031-220-8023)

남, 용인, 고양 지역의 전입, 전출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이나 전세가격 변동과 인과관계가 있다. 성남지역은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화와 인구이동이 상호 관련이 있지만, 이외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수원시 인구이동은 용인 지역 보다는 성남시 주택가격 변동과의 관련성이 높다. 넷째,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 변동이 인구이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원시 이동은 인접 지역과의 이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접지역으로의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가중, 인구유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접지역을 포함한 주택 시장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주택가격 변동, 인구이동, 인과관계, 그랜저인과 분석

1. 머리말

수원시는 인구이동에 의해 199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연평균 11,412명이 순유입 되었으나 최근 인구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택지개발로 주택공급이 확대되면서 2012년~2014년 연평균 2만 명 이상의 순전입하였으나, 2015년 1,862명, 2016년 2,235명으로 최근에는 순 전입 인구는 감소하였다.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수원시내부이동을 제외하면 인접한 경기도내 시군 간의 이동비율이 높고, 인접 시군으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이동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내 시군에서 수원으로 연평균 13,423명이 순 전입 해왔으나, 2015년과 2016년 평균 4,300명이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이동의 원인에 대해 지역 간 인구이동은 기대소득 또는 절대소득, 취업 기회 등과 같은 경제적측면의 이동이 주된 원인으로 설명되지만, 지역내부나 인접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이동은 주거이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거이동은 해당지역 내에서 주거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구이동과 차별적으로 설명하는데, 고용상태의 변화 없이 지역 내의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하성규, 2006¹⁾; 이외희, 2010²⁾).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고용, 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과 달리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은 주택관련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역 간 이동보다는 지역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도시 내부 그리고 인접한 도시 간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내 인구이동은 주로 주거조절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이동 역시 수원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비율이 가장 높으며, 주변 지역 간의 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인구이동으로 나타나는 영향이 관련 기반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적 인구증감과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인구변화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구이동의 연구는

1)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2) 이외희, 2010,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축적은 미흡하고, 인접한 지역 간, 지역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에 대한 실증분석의 축적은 매우 미흡하다. 수원시 사회조사결과 인구이동의 주된 이유가 주택과 관련한 이유를 들고 있어, 주거선택과 이동과 관련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료 부담 변화와 인구이동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은 주택가격 변동과 인구이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가격변화가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수원시 주택가격(매매가격, 전세가격) 변동은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
둘째, 수원시의 가격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는 인접한 유사 규모의 도시(성남, 고양, 용인)와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인접한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이 수원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

위와 같은 연구 질문 하에 기존의 유사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실증분석은 수원시 이외에도 수원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경기도내 주요도시(성남, 고양, 용인)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자료가 2003년 11월부터 제공되고 있어 2003년 11월부터 최근 2017년 8월까지로 정하였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구이동과 주거이동

인구이동을 설명한 대표적인 고전적 모형으로 중력모형을 들 수 있다. Ravenstein (1885)은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의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지역 간 거리에는 반비례한다고 설명하였다(Ravenstein, 1885³⁾; 권용우, 1999⁴⁾). 즉 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3)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pp.167-235

4) 권용우, 1999, 『지역간 인구이동패턴 연구』, 국토연구원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지역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이동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고용의 기회나 기대효용을 크게 만들어 인구규모가 클수록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반면 거리는 이동에 따른 비용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용은 작게 되어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신고전적모델의 경우, 지역 간 경제적 차이가 이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wis(1954)⁵⁾는 도시의 절대소득이 농촌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Todaro(1969)⁶⁾는 도시와 농촌간의 절대소득 차이가 아니라, 장래 기대소득의 차이로 인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구가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소득이 이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과 실제 취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소득을 주장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허재완, 1993⁷⁾; 김리영외, 2013⁸⁾)

Tiebout(1956)⁹⁾는 지역의 공공재나 조세가 이동의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지역 공공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거주와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자치단체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동은 지자체의 공공재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인구이동을 개인들의 이동 선택행위 과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에는 인적자본 이론, 소비자론, 인구이동 의사결정모델 등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인구이동을 하나의 투자행위로 보고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클 때 이동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소비자론은 소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인구이동을 소비재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인구이동은 목적지의 교육, 문화 등 소비동기가 기원지보다 클 경우 유발되는 것이다. 인구이동 의사결정모델은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이주자와 비이주자의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 중에 하나로 인

5)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pp.139-191

6) Todaro,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138-148

7) 허재완, 1993, 『도시경제론』, 서울: 박영사

8) 김리영·양광식, 2013, 「인구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25(3), 1-20쪽

9) Ti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24

구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거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고용상태의 변화 없이 지역 내의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하성규, 2006; 이외희, 2010¹⁰).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고용, 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과 달리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은 주택관련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주거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주택서비스의 변화,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요인들에 의해 개인의 만족과 복지를 최대화 하려는 것이다.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은 주거이동을 바라보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거이동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이론, 주택시장과 주택수요와 관련이론, 주택선택과 관련된 이론 등이 있다.

주거이동의 동기에 따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동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주거이동은 소득수준, 가구원수와 가족구성, 주택형태 및 위치에 대한 선호 등과 같은 가구 내부적 요인과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여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주택소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하성규, 2006).¹¹⁾

2) 선행연구 검토

주택가격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타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중고주택가격과 신규주택가격간에 관련이 있는 지, 혹은 가격변화와 거래량은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특정지역의 가격변동이 타지역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재고주택가격변동이 신규주택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강남지역 가격변동의 타지역으로 전이되는지, 재건축가격 변동이 분양주택가격의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면 인구이동과 주택가격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인구이동에 의한 주택가격 변동의 관계나 영향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거이동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볼 때 주택가격수준의 변화나 주거비용의 변화는 인구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느 특정지역의 가격과 인접지역 가격 변동이 인구이

10) 이외희, 2010,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11)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238~251쪽

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권지혜(2005)와 임덕호·박선구(2010)의 연구결과는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혜(2005)는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신규주택가격이 기존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강남 기존주택 가격이 강북 기존주택가격에 영향을, 강남 신규주택가격이 강북 신규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이 주변지역, 전국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이외 서울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이나 경기도, 전국에 대한 영향의 존재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의준 외, 2000; 박현수·안지아, 2009¹²⁾). 지역 간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체로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후, 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변화가 타 지역 주택가격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의준 외(2000)¹³⁾의 연구는 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변동은 1~5개월 이후 다른 지역의 아파트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10개월 후에는 다시 정상 추세에 수렴하지만, 반응 속도와 크기는 강남구, 서초구가 속해있는 동남권과의 거리와 가격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용만·이상한(2004)¹⁴⁾은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 간에는 주택가격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비강남지역이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에 '과잉반응'하거나 시장의 정보에 강남지역이 먼저 반응하고 비강남지역이 나중에 반응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변동이 실제 비강남지역 주택가격변동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박현수·안지아¹⁵⁾는 서울시의 각 구별로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등 5개 변수를 이용, VAR모형을 통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인과성을 분석하였으며, 그랜저인과검정결과 5개 구에서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12개 구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그랜저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박현수·안지아, 2009, 「VAR모형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1), 한국부동산연구원, 27-49쪽

13) 김의준·김양수·신명수, 2000,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 분석」, 『국토계획』 35(4), 109-117쪽

14) 이용만·이상한, 2004,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국토계획』 39(1), 73-91쪽

15) 박현수·안지아, 2009, 「VAR모형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1), 한국부동산연구원, 27-49쪽

인구이동과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중 김리영(2013)¹⁶⁾의 연구는 인구이동에 의한 주택가격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연령별 인구이동이 주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별 가격에 대한 영향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준형·최막중(2009)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양재섭·김상일(2007)의 연구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느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변화는 해당지역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력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구규모가 큰 도시, 인접한 지역의 주택시장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미시적 실증분석의 축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자체간의 가격변화와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가격 변화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수원 주변의 인구규모가 큰 지역의 주택가격 변화가 수원시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는 지 분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3. 주택가격 및 인구이동 현황

1) 주택가격 변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급락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종료 이후 완만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후, 성남과 용인지역의 매매가격은 2005년 봄철부터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2005년 6월 기준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서울 2.8%, 성남 14.2%, 용인 15.3%, 수원 -1.9%를 기록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2006년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지속되었으며, 리먼파산이 이루어진 200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서울 12.4%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성남은 이보다 앞선 2007년 12월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수원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전년

16) 김리영, 2013, 「연령별 인구이동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48(2), 341-3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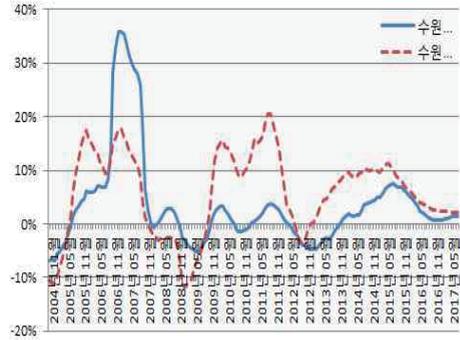
동월 대비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18년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남은 2009년 11월까지 24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매매가격의 하락이 지속되었다.

주택가격의 본격적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서울 매매가격은 3년 6개월(2010년 8월부터 2014년 1월, 42개월간) 하락하였으며, 수원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수원은 2008년 7월 매매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고 이후 하락과 소폭의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4월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한 최고점까지 회복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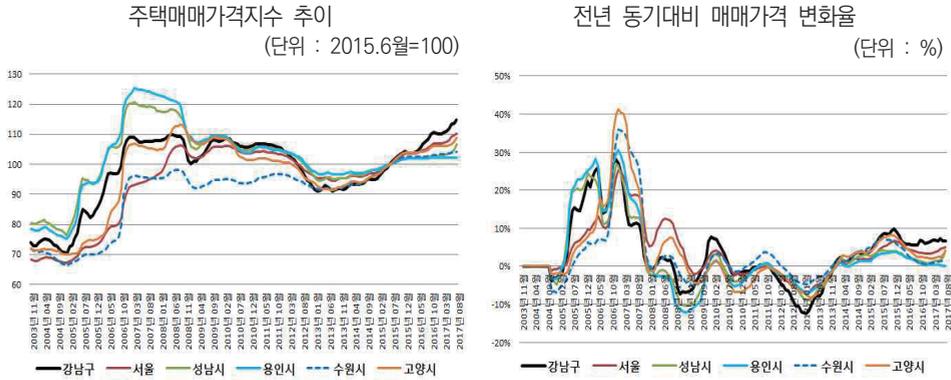
가격지수 추이(단위 : 2015.6월=100)
자료 : 한국감정원



전년동월대비 가격 변화(단위: %)

〈그림 1〉 수원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2003.11~2017.8월)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경기도내 4개 도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화추이를 비교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 한국감정원

〈그림 2〉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

기초자치단체별 가격변동의 추세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가격변동의 폭과 기간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그림 좌측의 매매가격지수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매매가격변동에 비해 성남과 용인시의 가격 변화폭이 크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측의 전년동기 대비 주택매매가격 변화율을 살펴보면, 용인시와 성남시의 가격 변화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수원시는 다소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는 수원과 고양시에 비해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수원과 고양시는 단기간 동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가격 변동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와 경기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가격변동을 비교해 보면, 강남지역의 가격변동폭에 비해 성남시와 용인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10%이상의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강남지역은 2014년 8월부터 전년동월 대비 3%이상의 높은 매매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 4월부터 2017.8월말 까지 전년동월 대비 5%이상의 상승이 지속되었다. 수원시는 2014.9월부터 2016.5월까지 21개월간 전년동월 대비 3% 이상의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4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1%이상의 매매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남지역에 비해 가격상승폭은 낮지만, 2015.4월부터 2016.8월까지 고양시의 전년 동기대비 주택가격은 3%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2017.7월과 8월 전년대비 3%이상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2015년 4월~2016.3월까지 1

년간 전년 동기대비 3%이상의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2017년 8월 전년 동월대비 4.1%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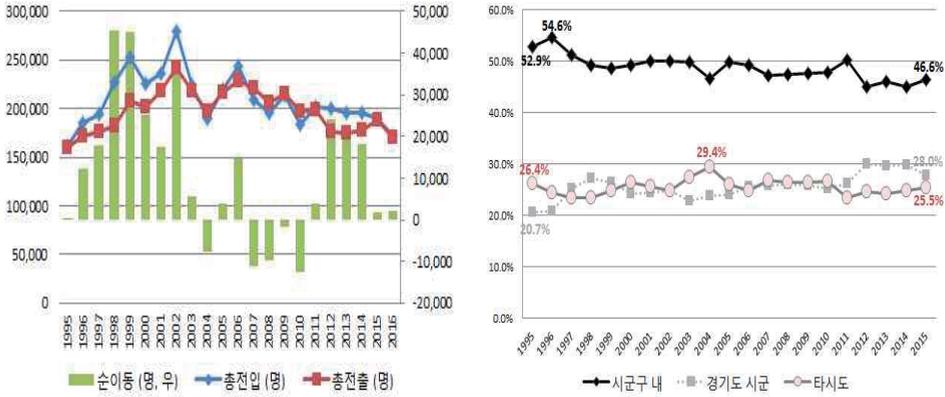
〈표 1〉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초통계

구분		HPS (서울매매가)	HPSW (수원매매가)	HPSN (성남매매가)	HPYI (용인매매가)	HPGY (고양매매가)
가격지수	Mean	94.40	90.50	101.58	102.20	96.11
	Median	98.05	94.55	102.55	102.10	101.15
	Maximum	109.10	103.90	120.70	125.50	113.30
	Minimum	67.10	66.00	76.30	75.30	69.90
	Std.Dev.	12.91	11.24	10.58	12.13	12.73
변화율	Mean	0.29%	0.23%	0.17%	0.17%	0.25%
	Median	0.19%	0.10%	0.00%	0.00%	0.09%
	Maximum	5.85%	12.28%	7.10%	8.54%	9.88%
	Minimum	-1.71%	-1.74%	-2.88%	-3.67%	-1.80%
	Std.Dev.	0.008	0.012	0.012	0.013	0.012

2) 인구이동 추이

수원시 내부이동(수원시내) 비율은 경기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최근 5년(2011-2015년)과 직전 5개년 간(2005-2010년)의 이동추이를 비교하면, 수원시 전입 인구에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타 시도에서 수원으로 유입되는 인구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부터 2016년 말까지 연평균 수원시 전입인구는 208,866명, 연평균 전출 인구는 197,453명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시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은 연평균 11,412명으로 연간 1만 1천명 이상이 인구이동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 순이동은 2,235명으로 이전에 비해 약 9천명이 감소하였다.



수원시 전입-전출추이

자료 : 통계청

수원시 인구대비 전입인구 비율

〈그림 3〉 수원시 인구이동 추이

수원시 인구이동은 지역별로는 경기도내 인접지역으로는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았으며, 타 시도에서 전입, 전출되는 인구는 전입이 더 많았다. 수원에서 경기도내 시군으로 연평균 883명이 순유출 되었지만, 타 시도 에서는 전입되는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수원으로 연평균 12,295명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부터 2017.8월말 기준 수원의 월평균 전입인구는 16632명, 전출인구는 16340명으로 월평균 292명이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반면, 성남시는 월평균 전입인구는 14733명, 전출인구는 15,176명으로 평균적으로 전출이 전입에 비해 더 많았다.

수원과 함께 용인, 고양은 월평균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았는데, 용인은 월평균 1408명이 전입, 전출은 12008명으로 월평균 2,076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고양은 월평균 전입인구는 14,869명, 전출은 14,175명으로 694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표 2〉 인구이동 기초통계

(단위 : 명)

구 분		평균	중위	최대	최소	표준편차
수원	전입	16,632	16,096	26,049	11,398	2,997
	전출	16,340	16,317	23,130	10,788	2,612
성남	전입	14,733	14,420	23,236	9,426	2,730
	전출	15,176	14,738	24,882	10,307	2,638
용인	전입	14,084	13,297	25,083	9,767	2,843
	전출	12,008	11,876	17,571	7,326	2,050
고양	전입	14,869	14,628	22,728	10,191	2,484
	전출	14,175	13,981	21,516	9,768	2,268

4. 주택가격과 인구이동의 인과관계 분석

1) 분석개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시계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서 특정변수의 과거치가 다른 변수의 현재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어느 것이 원인변수이고 어느 것이 결과변수인지 불확실할 경우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이용하며, X_t 와 Y_t 간에 어떤 변수가 원인변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Y_t = u + \sum_{i=1}^k \alpha_i X_{t-i} + \sum_{j=1}^q \beta_j Y_{t-j} + e_t \quad \dots\dots (\text{식 1})$$

$$X_t = u + \sum_{i=1}^m \lambda_i X_{t-i} + \sum_{j=1}^n \delta_j Y_{t-j} + e_{2t} \quad \dots\dots (\text{식 2})$$

위 식에서 오차항은 상호 독립적이고 동분산이며, X 의 과거치가 (식 1)의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F검정을 이용한다.

여기서 X 가 Y 의 원인이라는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X 를 조작하여 Y 에 관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랜저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두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그랜저인과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두변수가 경험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두변수가 인과관계에 있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을 ADF(Augmented Dickey-Fuller)단위근 검정한 결과, 불안정한 시계열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시계열에 로그를 취하여 차분(differencing)을 하였으며, 1차분결과 안정적인 시계열로 확인되었다.

2) 인접지역 가격 변동과 수원시 인구이동

서울주택가격(매매, 전세)의 변동은 성남, 용인, 수원, 고양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랜저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지역의 인구이동이 서울주택가격 변동(매매, 전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의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은 수원, 용인, 고양은 유사하지만, 성남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성남의 인구이동은 서울의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과 상호 그랜저인과 관계를 보였다. 즉 성남의 인구이동은 서울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성남의 인구이동이 서울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 용인, 고양의 인구이동은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도시의 인구이동이 서울지역 주택가격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 주택가격 변화와 주요도시 인구이동의 그랜저인과 분석 결과

구분	lag 1		lag 2		lag 3		lag 4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성남 전입 → 서울 매매가	1.542	0.216	0.760	0.469	0.531	0.662	0.692	0.599
서울 매매가 → 성남 전입	0.041	0.839	10.561	0.000	7.201	0.000	5.214	0.001
성남 전출 → 서울 매매가	1.769	0.185	0.790	0.456	0.501	0.683	0.564	0.689
서울 매매가 → 성남 전출	0.189	0.664	10.843	0.000	8.174	0.000	5.954	0.000
성남 전입 → 서울 전세가	1.946	0.165	2.517	0.084	1.742	0.161	0.964	0.429
서울 전세가 → 성남 전입	1.512	0.221	15.716	0.000	9.812	0.000	7.148	0.000
성남 전출 → 서울 전세가	1.364	0.245	3.786	0.025	2.505	0.061	1.124	0.348
서울 전세가 → 성남 전출	2.716	0.101	24.116	0.000	14.827	0.000	10.348	0.000
수원 전입 → 서울 매매가	1.289	0.258	0.928	0.397	0.773	0.511	0.864	0.487
서울 매매가 → 수원 전입	0.001	0.982	5.560	0.005	3.463	0.018	2.443	0.049
수원 전출 → 서울 매매가	0.868	0.353	0.746	0.476	0.717	0.543	0.797	0.529
서울 매매가 → 수원 전출	0.095	0.758	5.087	0.007	3.431	0.019	2.588	0.039

구분	lag 1		lag 2		lag 3		lag 4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수원 전입 → 서울 전세가	1.238	0.268	0.739	0.479	0.739	0.530	0.548	0.701
서울 전세가 → 수원 전입	1.373	0.243	8.570	0.000	5.097	0.002	3.554	0.008
수원 전출 → 서울 전세가	0.395	0.531	0.610	0.544	0.487	0.692	0.293	0.882
서울 전세가 → 수원 전출	1.678	0.197	11.400	0.000	6.517	0.000	4.418	0.002
용인 전입 → 서울 매매가	0.627	0.430	0.172	0.842	0.085	0.968	0.195	0.941
서울 매매가 → 용인 전입	0.011	0.918	8.008	0.001	5.393	0.002	4.091	0.004
용인 전출 → 서울 매매가	0.633	0.428	0.327	0.722	0.159	0.924	0.264	0.901
서울 매매가 → 용인 전출	0.251	0.617	6.200	0.003	3.892	0.010	2.973	0.021
용인 전입 → 서울 전세가	1.593	0.209	0.768	0.466	0.617	0.605	0.717	0.582
서울 전세가 → 용인 전입	0.015	0.903	9.126	0.000	5.366	0.002	4.236	0.003
용인 전출 → 서울 전세가	1.454	0.230	0.652	0.523	0.614	0.607	0.849	0.496
서울 전세가 → 용인 전출	0.428	0.514	10.788	0.000	6.470	0.000	5.080	0.001
고양 전입 → 서울 매매가	0.083	0.774	0.070	0.933	0.837	0.476	1.369	0.247
서울 매매가 → 고양 전입	0.034	0.854	3.546	0.031	2.600	0.054	1.976	0.101
고양 전출 → 서울 매매가	0.022	0.882	0.139	0.871	0.877	0.454	1.676	0.159
서울 매매가 → 고양 전출	0.048	0.828	5.002	0.008	3.709	0.013	2.962	0.022
고양 전입 → 서울 전세가	1.023	0.313	0.484	0.617	0.829	0.480	0.833	0.506
서울 전세가 → 고양 전입	1.959	0.164	13.077	0.000	8.387	0.000	6.007	0.000
고양 전출 → 서울 전세가	1.103	0.295	0.480	0.620	0.885	0.451	0.865	0.486
서울 전세가 → 고양 전출	1.094	0.297	15.900	0.000	10.004	0.000	7.180	0.000

주 : 음영은 유의수준 10%이내 변수를 의미함

수원시 주변의 인구규모가 유사한 성남과 용인지역의 가격변동이 수원시의 전입, 전출 인구에 영향을 주는 지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성남의 주택매매가격의 변동과 전세가격 변동은 수원시의 전출인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랜저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인구변동이 성남지역 가격변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반면, 용인지역은 주택매매가격변동의 영향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전세가격 변동이 수원시 전출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 전출인구의 변화는 용인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전입인구의 변화에 대한 성남시와 용인시 가격 변화의 인과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남시 매매가격변화는 수원시 전입인구에 대한 그랜저 원인변수로 나타났으나, 용인시 매매가격변화는 수원시 전입인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랜저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원시 전입인구는 용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랜저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성남과 용인지역 가격변화의 수원시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을 종합해보면, 수원시 인구이동은 용인지역에 비해 성남지역 가격변동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 인접지역 가격변동과 수원 전입·전출간 그랜저 인과 분석

구 분		lag 1		lag 2		lag 3		lag 4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전출	성남매매가 → 수원 전출	0.131	0.717	4.177	0.017	2.970	0.034	2.278	0.064
	수원 전출 → 성남매매가	0.021	0.886	0.401	0.670	1.478	0.223	1.094	0.362
	성남전세가 → 수원 전출	0.002	0.966	3.521	0.032	2.590	0.055	1.760	0.140
	수원 전출 → 성남전세가	1.917	0.168	0.786	0.457	0.689	0.560	0.328	0.859
	용인매매가 → 수원 전출	0.296	0.587	1.036	0.357	1.370	0.254	1.202	0.313
	수원 전출 → 용인매매가	1.979	0.161	0.905	0.407	2.898	0.037	2.095	0.084
	용인전세가 → 수원 전출	0.007	0.933	2.381	0.096	1.578	0.197	1.188	0.319
	수원 전출 → 용인전세가	1.651	0.201	1.174	0.312	1.263	0.289	1.251	0.292
전입	성남매매가 → 수원 전입	0.334	0.564	4.703	0.010	3.128	0.028	2.427	0.050
	수원 전입 → 성남매매가	0.006	0.937	0.441	0.644	1.432	0.236	1.064	0.377
	성남전세가 → 수원 전입	0.021	0.885	2.262	0.108	1.673	0.175	1.091	0.363
	수원 전입 → 성남전세가	2.329	0.129	0.833	0.436	0.804	0.493	0.437	0.782
	용인매매가 → 수원 전입	0.299	0.585	1.342	0.264	1.254	0.292	1.021	0.399
	수원 전입 → 용인매매가	1.134	0.289	0.499	0.608	2.738	0.045	1.966	0.103
	용인전세가 → 수원 전입	0.194	0.661	1.436	0.241	0.932	0.427	0.758	0.554
	수원 전입 → 용인전세가	1.148	0.286	0.831	0.438	1.307	0.274	1.211	0.308

주 : 음영은 유의수준 10%이내 변수를 의미함

3) 해당 지역의 가격 변동과 인구이동

수원시 전입 인구변동은 수원시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 인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시 전출인구는 매매가격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인

변수는 아니며, 전세가격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전입인구는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출인구는 수원시 전세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기도내 인구규모가 유사한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 모두 전세가격 변동이 인구이동(전입, 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수원시와 성남, 용인시는 매매가격 변동이 인구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양시는 인구이동의 결과가 매매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성남과 용인의 인구변동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이 그랜저원인이 되며, 성남은 인구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시는 전세가격 변동이 전출 인구변동과 상호그랜저 인과관계를 보였는데, 용인시 전출이 전세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전세가격 변동이 전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양시의 매매가격 변동이 전입이나 전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전세가격 변동이 전입과 전출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전입, 전출의 인구변동이 고양시 매매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양시 전세가격 변동은 고양시 전입-전출 변동과 상호 그랜저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전입과 전출인구 변화는 전세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전세가격 변화 역시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4개 도시 그랜저 인과 분석 결과

구 분	lag 1		lag 2		lag 3		lag 4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수원	수원전세가→수원매매가	9.482	0.002	7.096	0.001	4.714	0.004	3.592	0.008
	수원매매가→수원전세가	0.814	0.368	0.748	0.475	0.871	0.457	1.099	0.359
	수원전입→수원매매가	0.051	0.822	0.099	0.905	0.336	0.799	0.564	0.689
	수원매매가→수원전입	0.242	0.624	2.466	0.088	1.724	0.164	1.356	0.252
	수원전출→수원매매가	0.008	0.930	0.028	0.973	0.327	0.806	0.582	0.676
	수원매매가→수원전출	0.427	0.514	1.916	0.151	1.570	0.199	1.567	0.186
	수원전입→수원전세가	0.035	0.852	0.230	0.795	0.173	0.914	0.162	0.957
	수원전세가→수원전입	0.000	0.991	3.938	0.021	2.389	0.071	1.942	0.106
	수원전출→수원전세가	0.005	0.945	0.277	0.758	0.252	0.860	0.122	0.975
	수원전세가→수원전출	0.019	0.891	5.472	0.005	3.294	0.022	2.306	0.061

구 분	lag 1		lag 2		lag 3		lag 4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F-Statistic	Prob.	
성남	성남전세가→성남매매가	0.340	0.560	0.411	0.664	0.780	0.507	0.671	0.613
	성남매매가→성남전세가	0.195	0.660	1.299	0.276	1.257	0.291	1.036	0.391
	성남전입→성남매매가	0.047	0.829	0.519	0.596	1.120	0.343	0.786	0.536
	성남매매가→성남전입	0.003	0.954	7.499	0.001	5.401	0.002	4.042	0.004
	성남전출→성남매매가	0.006	0.936	0.532	0.589	0.755	0.521	0.532	0.712
	성남매매가→성남전출	0.314	0.576	6.283	0.002	5.029	0.002	3.941	0.005
	성남전입→성남전세가	1.222	0.271	0.964	0.384	0.552	0.648	0.368	0.831
	성남전세가→성남전입	0.164	0.686	7.179	0.001	4.431	0.005	3.187	0.015
	성남전출→성남전세가	0.858	0.356	1.331	0.267	0.747	0.526	0.390	0.816
	성남전세가→성남전출	0.020	0.888	10.740	0.000	6.517	0.000	4.542	0.002
용인	용인전세가→용인매매가	1.309	0.254	1.058	0.350	0.896	0.445	2.337	0.058
	용인매매가→용인전세가	0.198	0.657	2.526	0.083	1.736	0.162	1.915	0.111
	용인전입→용인매매가	1.203	0.274	0.690	0.503	1.397	0.246	1.065	0.376
	용인매매가→용인전입	0.067	0.795	1.354	0.261	3.111	0.028	3.569	0.008
	용인전출→용인매매가	1.928	0.167	1.061	0.349	1.981	0.119	1.377	0.245
	용인매매가→용인전출	0.000	0.992	1.196	0.305	1.963	0.122	2.152	0.077
	용인전입→용인전세가	2.576	0.111	1.217	0.299	1.786	0.152	1.323	0.264
	용인전세가→용인전입	5.613	0.019	4.264	0.016	2.334	0.076	1.705	0.152
	용인전출→용인전세가	4.919	0.028	2.685	0.071	2.819	0.041	2.359	0.056
	용인전세가→용인전출	0.978	0.324	2.456	0.089	1.300	0.276	0.935	0.446
고양	전세가고양→매매가고양	3.291	0.072	2.164	0.118	1.264	0.289	0.934	0.446
	매매가고양→전세가고양	0.616	0.434	1.382	0.254	0.748	0.525	0.516	0.724
	고양전입→매매가고양	0.637	0.426	0.393	0.676	2.860	0.039	2.328	0.059
	매매가고양→고양전입	0.491	0.484	1.329	0.268	1.878	0.136	1.702	0.152
	고양전출→매매가고양	1.098	0.296	0.708	0.494	2.556	0.057	2.315	0.060
	매매가고양→고양전출	0.376	0.540	1.850	0.161	2.076	0.106	1.947	0.106
	고양전입→전세가고양	2.581	0.110	1.361	0.259	1.760	0.157	2.951	0.022
	전세가고양→고양전입	0.000	0.985	0.977	0.379	2.693	0.048	1.901	0.113
	고양전출→전세가고양	2.915	0.090	1.506	0.225	2.170	0.094	3.155	0.016
	전세가고양→고양전출	0.187	0.666	1.669	0.192	2.205	0.090	1.630	0.170

주 : 음영은 유의수준 10%이내 변수를 의미함

5. 맺음말

이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 변동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원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변동과 인구이동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경기도내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남, 고양, 용인 지역의 인구이동과 주택가격변동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이동과 주택가격변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수원시의 특성이 타 지자체와 유사, 차이점을 확인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인구이동이 인접한 지역과의 인구이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접지역으로의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수원을 포함한, 성남, 용인, 고양 지역의 전입, 전출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변동이나 전세가격 변동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성남을 제외한 수원, 용인, 일산지역의 인구이동이 서울지역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지역은 서울지역 주택가격변화와 인구이동이 상호 관련이 있지만, 이외 지역의 인구이동이 서울지역 가격변동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셋째, 수원시 인구이동은 용인시는 전세가격변화, 성남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화가 원인변수로, 용인지역의 주택시장변화 보다는 성남시 주택시장 요인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별로 해당지역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변동의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의 유사점은 전세가격이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매매가격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원은 매매가격변동이 전입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성남, 용인, 고양은 매매가격이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매매가격변동에 의한 인구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수원시 인구이동이 인접한 지역과의 인구이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접지역으로의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지역으로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경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변화가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이 더 광범위하다. 따라서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비단 주택시장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인구의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접한 성남시의 주택가격 변동이 수원시 주택가격 변동의 그랜저 원인이라는 점에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주변 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영향이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수원시 주택시장과 인구

이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변수간의 인과관계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이동이 경제적 측면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기반산업 등의 연계성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주택시장요인이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순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 전세가격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수급과 임대료 등 임차시장 분석을 통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방안 모색, 그리고 정부의 정책 영향 분석과 수원시와 인접도시의 주택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주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관련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료가 축적된다면 수원시의 주거정책 수립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17.10.10

심사일 2017.11.03.~11.11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권용우, 1999, 『지역간 인구이동패턴 연구』, 국토연구원
- 김의준·김양수·신명수, 2000,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인과성 분석」, 『국토계획』 35(4), 109-117쪽
- 김리영, 2013, 「연령별 인구이동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8(2), 341-356쪽
- 김리영·양광식, 2013, 「인구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20쪽
- 김준형·최막중, 2009,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4(4), 109-118쪽
- 박헌수·안지아, 2009, 「VAR모형을 이용한 부동산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9(1), 한국부동산연구원, 27-49쪽
- 이용만·이상한, 2004,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국토계획』 39(1), 73-91쪽
- 이외희, 2010,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 임덕호·박선구, 2010, 「신규아파트 분양가격과 중고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주택연구』 18(2), 53-71쪽
- 하성규, 2006,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 허재완, 1993, 『도시경제론』, 서울: 박영사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연구』 13(1), 1-19쪽
-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pp.139-191
- Porell, F., 1982, "Intermetropolitan Migr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9(3), pp.137-158
-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pp.167-235
- Ti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24

Todaro,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138-148

ABSTRAC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using Price and Migration in Suwon City

Kwon, Sung-moon · Kim, Lee-young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fluctuation and population movement. Additionally, it was analyzed that the change in residential prices in neighboring cities affected the population movement in Suwon. The geographic range of the analysis included regions of Suwon, Goyang, Seongnam, and Yongin. Analysis used the Granger Casualty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e results we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local population movements.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s in Suwon are as follows.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effort to prevent leakage to adjacent areas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utflow to neighboring areas. Next, the housing price, such as soaring rental prices, is affecting the population transfer in Suwon.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residential housing supply and housing market monitoring should be continued for residential housing and housing policies.

Key Words : Housing Price, Migration, Residential Mobility, Granger Casualty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 수원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

현대용* · 정도효**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t-test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
| 1) 행정가치 | (2)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
| 2) 행정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 (3)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
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
| 3) 무기계약직에 관한 선행연구 | |
| 3. 연구 분석의 틀 | 5. 맺음말 |
| 1) 연구모형 | |
| 2) 분석대상 및 방법 | |
| 4. 분석결과 |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을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 KWAN UNIVERSITY), E-mail: hdy9913@naver.com, Tel: 010-4194-8916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 KWAN UNIVERSITY)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총 150부를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빈도 분석과 t-test 분석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행정가치들에 대한 인식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된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유는 고용안전의 보장만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가치를 내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직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권한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조직에 이익 측면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편견은 증가시킬 수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행정가치를 내재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직무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관련되는 권한을 배분하여 책임감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근로자가 아닌 공직에 있어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정가치,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t-test(평균차이검정)

1. 머리말

2008년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세계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짐에 따라 인력 운용의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인력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갔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독특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정착되어 왔다.¹⁾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고용불안, 임금격차 및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게다가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비정규직, 용역 등을 늘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고, 노동 환경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하에서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백서』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임금근로자 19,627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4천 명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4년 32.4%, 2015년 32.5%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임금,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임금수준은 2015년 기준으로 정규직에 비해 65.5%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근속기간은 정규직이 7년 5개월임에 비해 2년 5개월 수준이다.²⁾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1) 고용노동부, 2017(b),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 고용노동부, 2017(a), 『고용노동백서』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화를 우선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업무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많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같은 공공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비정규직은 자신들만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한 조직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들이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그로인한 가치의 충돌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직문화의 융합, 인사상의 각종 불이익, 경력관리의 어려움, 업무의 중복 등을 야기 시켜서 조직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을 저해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저해 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가치 상충은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대응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비정규직은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관련자들의 부정부패를 통해 임용되는 비리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또한 공직자로서의 행정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빈도 분석과 t-test 분석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가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개개인이 지니는 중요도와 방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가치를 통해서 개인이 지니는 주관과 현실에 있는 객관적인 수많은 속성들을 연결 하여 다양한 개념을 창출해 내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³⁾ 이 과정에서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방향을 결정한다. 즉, 가치는 어떤 행위의 정당성 혹은 어떠한 행동의 동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목표 기준이 된다.⁴⁾ 따라서 가치는 개인의 동기부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조직 안에 있든 조직 바깥에 있든 수많은 가치판단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가치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새로운 의미로 대치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면서 많은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⁵⁾ 또한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조직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그 조직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공공조직은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공공조직은 공공적 가치인 공익의 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가치판단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의 가치는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즉, 행정에서의 가치는 공익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⁶⁾ 행정에서 가치가 중요한 것은 공공행정은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가치는 공공행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가치는 공무원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의 결정요인이나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을 결정하는 공무원 사회와 그 집단의 기준이 된다. 행정가치에 대한 고민은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

3) 오석홍, 1995, 「行政과 價値」, 『행정논총』3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4) 신희영, 2007, 「공직가치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5) 권인석, 2005, 「공공조직에 있어서 가치의 유형과 구조 : 논의의 제기」, 『한국조직학회보』2, 한국조직학회

6) 신희영, 2007, 「공직가치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제이고, 가깝게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으로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다. 결국, 같은 조직에 속해있더라도, 다양한 행정가치 속에서 조직구성원이 어떠한 행정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과정이 달라지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행정조직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가치를 분석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고민의 시작이, 곧 행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치와 현실이 부합되는 행정가치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가치도 다양화되고 있다. 행정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한 변화가 촉진될수록 행정에서의 가치체계의 역할은 중요해진다.⁷⁾

2) 행정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행정가치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학의 계량적인 측정과정을 넘어서 현대 행정학의 탄생에서부터 행정의 범위와 역할, 목적의 정의에 따라서 내부적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민주행정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과 행정가치가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오석홍(1995) 글의 주된 논의는 행정에서 가치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대부분 가치에 관련된 문제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 가치체계의 내·외부적 일관성이 결여되는 상황, 적정한 가치조정에 실패하는 것, 공무원의 가치와 실천행동이 괴리되는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인석(2005)의 연구는 가치라는 문제가 행정조직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행정가치가 현재 행정 조직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다양한 가치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조직에 있어서의 가치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조적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했다. 공공조직은 하나의 제도로서 제도적 가치를 추구한다. 공공조직의 제도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로서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가치는 시장적 가치나 문

7) 오석홍, 1995, 「行政과 價値」, 『행정논총』3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화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가치에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신희영(2007)의 글은 먼저 행정가치의 개인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 그리고 행정 체제 수준으로 행정가치의 공익과 공공성에 대해 살펴본다.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간의 관계에서 공적가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대 행정조직에서 필요한 행정가치란 무엇인지 찾아간다. 결론으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성, 민주성,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박형준 외(2009)의 연구에서는 행정가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헌법적 가치와 관리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가치가 서로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에는 단독적인 가치 틀에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행정가치를 지닌 공무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옥성·김상철(2011)의 연구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현대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행정가치는 행정의 각 단계마다 행위자인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에 앞서 반드시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지도적 행동원리나 실천에 옮겨야 할 최고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결국 행정가치들은 정책과정의 투입단계인 정책형성 시에는 민주성, 전환단계인 정책 집행 시에는 합법성과 능률성, 산출단계인 정책평가시에는 효과성과 형평성 등이 영향을 준다. 따라서 행정가치들은 정책과정의 투입, 전환, 산출단계에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준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해욱·최정우(2014)의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점차 비정규직이 행정서비스 공급자로서 담당하는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적 차별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빈약한 행정가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행정가치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Milina & McKeown이 제시한 30가지 행정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이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되는 가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단순히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가치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간의 편견을 만들고 두 집단 간 협업과 업무 몰입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가치를 내재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행정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행정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개인 수준에서 느끼는 행정가치와 조직 문화 수준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 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행정조직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무기계약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조직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통일된 준거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행정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오석홍(1995)	행정에서의 가치문제	행정에서의 가치충돌은 공무원의 가치와 실천행동의 괴리를 야기함
권인석(2005)	행정가치가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탐구가 필요
신희영(2007)	행정가치의 공익과 공공성 연구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민주성, 형평성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침
박형준 외(2009)	행정에서의 헌법·관리적·정치적 가치 관계 규명	공무원들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임
박옥성·김상철(2011)	근대 행정사상이 현대 행정에 미친 영향 연구	행정가치는 정책과정, 투입, 산출 등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업무를의 준거 틀을 제공
박해욱·최정우(2014)	행정가치에 대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식비교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집단 간 편견을 만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

3) 무기계약직에 관한 선행연구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행정조직보다는 민간조직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그리고 문제점의 원인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정규직과의 인식적인 대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강창민(2013)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김민희(201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기계약직 관리 및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17개 시·도별 무기계약직 인력배치 및 관련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직종 및 인력은 매우 다양하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규모와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별, 그리고 학급별로 배치 인력 수의 편차가 심했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보장 미흡, 인건비, 정규직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김태현(2017)의 연구는 법리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받지 않게끔 법적인 제도화 또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나 조직 내에서 이들의 신분은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정규직과 선을 긋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방지를 위한 판결내용이 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사례별로만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윤애림(2009)의 연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이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나 자본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문제가 나타난 대표적 부문 및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둘러싼 쟁점들은 기간제 고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의 노동조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노동 조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학교행정기관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 조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지닌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애림(2013)의 연구는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선별적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불안, 미미한 처우개선과 차별, 직무 분리와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밝힌 이유는 상시적 업무임에도 근속기간 및 임용경로에 따라 기간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노동자가 혼재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사업장에 차별적 노동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승협(2016)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고용불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노동자의 직무보상체계에 대한 미흡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중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을 대상으로 직무의 유사성과 보상격차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사무보조직종의 경우에 수행직무는 임금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기관별 임금격차는 불합리한 차별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강창민(2013)의 연구는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의 근무환경을 통해서 직장동료에 대한 만족은 높은 반면 업무처리 지침, 업무지시 및 감독의 방법, 의사결정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어 무기계약직의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한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결정권한 여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무기계약직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처리 시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와 임금에서 큰 차별과 불만족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차이로 기본적인 복지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게 되면 이는 결국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기계약직의 복무가 일정수준 안정이 된 이후에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직과 행정조직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부터 나오는 2차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2〉 무기계약직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결과
김민희(201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운용실태와 현황	여전히 지방교육행정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 미흡, 정규직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음
김태현(2017)	법리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판례 분석을 통해 연구	사회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사례별로만 접근되고 있음
윤애림(2009)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학교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 전환 실태조사	무기계약 근로계약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명문조건이 없음을 악용하여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형성 되고 있음
윤애림(201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실태 분석	상시적 업무에서 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이 혼재하게 되면서 차별적인 노동 조건이 형성 됨
이승협(2016)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의 직무 유사성과 보상격차 적절성 분석	사무보조직종의 업무량과 질은 정규직과 비슷함에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음
강창민(2013)	업무처리 지침, 업무지시 및 감독의 방법, 의사결정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불만족이 나타나는 이유 연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회와 임금에서 큰 차별과 불만족을 인식하고, 이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짐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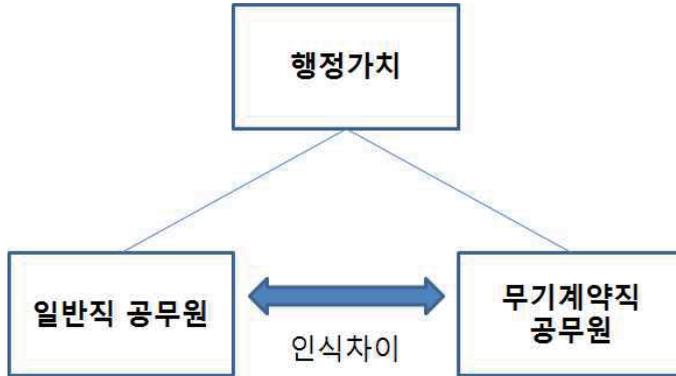
3. 연구 분석의 틀

1) 연구모형

Molina & McKeown(2012)⁸⁾에 따르면 다양한 행정가치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이외에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신뢰, 전문성, 민주적 가치의 존중, 주민과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행정조직에서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운영적 환경과 조직적 환경과 같은 행정의 맥락에 따라 가치의 내재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8) Anthony DeForest Molina & Cassandra L. McKeown, 2012, "The Heart of the Profession: Understanding Public Service Values",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Vol. 18 No. 2, pp.375-396

본 연구에서는 고찰한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다른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정가치의 내재화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간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olina & McKeown(2012)이 제시한 30개의 행정가치를 분석내용으로 하여 각각의 가치에 대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간의 행정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Molina & McKeown(2012)가 제시한 행정가치의 측정개념과 이에 대한 설문문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와 같다.

〈표 3〉 무기계약직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문 항	
책임성(Accountability)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군의 업무(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인정(Benevolence)	시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한다.
동료애(collegiality)	동료들과의 연대를 중시한다.
용기(Courage)	개인적인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정당한 행동을 한다.
헌신(Dedication)	열정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한다.

문 항	
효과성(Effectiveness)	원하는 결과를 가장 잘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효율성(Efficiency)	최소의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성(Expertise)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직(Honesty)	시민, 고객들과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인간성(Humaneness)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존경, 칭찬, 연민 등을 표한다.
공정성(Impartiality)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편견 없이 대한다.
포용성(Inclusiveness)	의사결정 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청렴성(Incumbency)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
혁신성(Innovativeness)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나 업무(시책) 발굴에 적극적이다.
도덕심(Integrity)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준수한다.
합법성(Lawfulness)	현행 법률과 조례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명령복종(Obedience)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른다.
조직이익(Organizational Interest)	조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여성(Participative)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원성(Pluralism)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수익성(Profitability)	조직의 재정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익(Public Interest)	공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뢰성(Reliability)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대의성(Representative)	시민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	시민,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사익추구(Self-Interest)	개인의 복지와 역량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
유용성(Serviceability)	시민, 고객, 이해관계자 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	공정하고, 공평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환경과 자연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시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한다.

자료: Molina & McKeown(2012) 재구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이 지닌 가치의 중요도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은 '1', 매우 중요함은 '5'로 하는 5점 척도를 구성하여 인식을 측정하였다. 그 중 성의껏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 7명(일반직 2명, 무기계약직 5명)을 제외한 143명(일반직 98명, 무기계약직 45명)을 대상으로 t-test(평균비교검정)를 실시하여 수원시의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간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4.3%로 여자보다 많으며, 나이는 46-55세 이하가 48.3%와 26세-35세 이하가 25.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렬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31.5%,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이 각각 37.8%, 19.5%, 11.2%를 차지하고 있다. 재직년수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4.2%, 20년 이상이 21%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직경력이 10년 이상인 남자의 응답 비율이 다른 특성을 지닌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92(64.3%)
	여	51(35.7%)
	합계	143(100%)
나이	25세 이하	2(1.4%)
	26-35세 이하	37(25.8%)
	36-45세 이하	23(16.1%)
	46-55세 이하	69(48.3%)
	56세 이상	12(8.4%)
	합계	143(100%)
직렬	일반직-행정직	54(37.8%)
	일반직-기술직	28(19.5%)
	기능직	16(11.2%)
	무기계약직	45(31.5%)
	합계	143(100%)
재직년수	5년 미만	19(13.3%)
	5년 이상-10년 미만	24(16.8%)
	10년 이상-15년 미만	49(34.2%)
	15년 이상-20년 미만	21(14.7%)
	20년 이상	30(21%)
	합계	143(100%)

2) t-test 분석결과

(1)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분석 결과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행정가치들 중 동료애, 전문성, 공정성, 조직이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값을 나타냈다. 공무원의 기본소양이나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책임성, 헌신, 포용성, 청렴성, 혁신성, 도덕심, 합법성, 명령복종, 공익과 관련된 가치는 수원시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사이에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에 대한 인식과 윤리가치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이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공직을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혁신성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도 두 분석대상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명령복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분석결과 일반직(전체)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공무원보다 상급자의 업무지시사항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일반직(전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t-검증

행정가치	일반직(전체) 공무원 평균	무기계약직 평균	t 값
책임성(Accountability)	3.87	3.04	2.36**
인정(Benevolence)	3.51	3.45	0.54
동료애(collegiality)	3.68	3.62	0.86
용기(Courage)	3.20	3.09	1.21
헌신(Dedication)	3.94	3.33	2.68**
효과성(Effectiveness)	3.41	3.24	1.63
효율성(Efficiency)	3.99	3.96	0.57
전문성(Expertise)	3.51	3.62	-0.98
정직(Honesty)	3.26	3.01	1.45
인간성(Humaneness)	3.61	3.55	1.32
공정성(Impartiality)	3.70	3.74	-0.54
포용성(Inclusiveness)	3.74	3.26	3.07**
청렴성(Incrruptibility)	4.06	3.66	2.75*
혁신성(Innovativeness)	3.62	3.38	2.19*
도덕심(Integrity)	3.80	3.41	3.05**

행정가치	일반직(전체) 공무원 평균	무기계약직 평균	t 값
합법성(Lawfulness)	3.58	3.13	2.77**
명령복종(Obedience)	3.94	3.52	2.10*
조직이익(Organizational Interest)	3.48	3.36	0.87
참여성(Participative)	3.91	3.81	1.21
다원성(Pluralism)	3.77	3.76	0.41
수익성(Profitability)	3.71	3.91	-1.32
공익(Public Interest)	4.12	3.68	2.96**
신뢰성(Reliability)	3.64	3.59	0.73
대의성(Representative)	3.34	3.25	1.16
대응성(Responsiveness)	3.61	3.46	1.35
사익추구(Self-Interest)	3.37	3.18	1.64
유용성(Serviceability)	3.69	3.69	0.14
사회정의(Social Justice)	3.51	3.27	1.87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97	4.03	0.86
투명성(Transparency)	3.81	3.74	1.01

주) * $p < 0.05$, ** $p < 0.01$

(2)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은 전체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기본소양이나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가치인 책임성, 헌신, 포용성, 청렴성, 도덕심, 합법성, 명령복종, 조직이익, 공익, 사익추구의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이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공직을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혁신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익추구와 조직이익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일반직 공무원에서의 인식의 차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과는 업무는 비슷하나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가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공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이익과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섞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t-검증

행정가치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평균	무기계약직 평균	t 값
책임성(Accountability)	3.77	3.04	2.16*
인정(Benevolence)	3.63	3.45	1.24
동료애(collegiality)	3.70	3.62	0.56
용기(Courage)	3.25	3.09	1.24
헌신(Dedication)	3.86	3.33	2.48**
효과성(Effectiveness)	3.32	3.24	1.63
효율성(Efficiency)	4.09	3.96	0.34
전문성(Expertise)	3.67	3.62	0.52
정직(Honesty)	3.15	3.01	1.14
인간성(Humaneness)	3.73	3.55	1.31
공정성(Impartiality)	3.78	3.74	0.14
포용성(Inclusiveness)	3.64	3.26	2.72**
청렴성(Incrruptibility)	4.07	3.66	2.81*
혁신성(Innovativeness)	3.62	3.38	1.89
도덕심(Integrity)	3.80	3.41	2.95**
합법성(Lawfulness)	3.62	3.13	2.51**
명령복종(Obedience)	3.95	3.52	2.12*
조직이익(Organizational Interest)	3.61	3.36	2.29*
참여성(Participative)	3.93	3.81	1.16
다원성(Pluralism)	3.81	3.76	0.40
수익성(Profitability)	3.88	3.91	-0.52
공익(Public Interest)	3.96	3.68	2.66*
신뢰성(Reliability)	3.67	3.59	1.03
대의성(Representative)	3.34	3.25	1.16
대응성(Responsiveness)	3.61	3.46	1.35
사익추구(Self-Interest)	3.51	3.18	2.41*
유용성(Serviceability)	3.62	3.69	-0.24
사회정의(Social Justice)	3.31	3.27	0.3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80	4.03	-1.46
투명성(Transparency)	3.81	3.74	1.01

주) * p < 0.05, ** p < 0.01

(3)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인식 차이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동등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있는 두 집단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많은 행정가치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성, 헌신, 포용성, 청렴성, 도덕심, 합법성, 명령복종, 공익, 사회정의 등의 행정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값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보이는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공식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고, 더 좋은 대우를 제공받으며,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행정가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고용안정 보장과 함께 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등 공무원으로의 기본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과의 행정가치 t-검증

행정가치	기능직 공무원 평균	무기계약직 평균	t 값
책임성(Accountability)	3.97	3.04	2.51**
인정(Benevolence)	3.39	3.45	-0.63
동료애(collegiality)	3.66	3.62	0.56
용기(Courage)	3.15	3.09	1.01
헌신(Dedication)	4.02	3.33	3.24**
효과성(Effectiveness)	3.50	3.24	1.92
효율성(Efficiency)	3.89	3.96	-0.57
전문성(Expertise)	3.35	3.62	-0.98
정직(Honesty)	3.37	3.01	1.45
인간성(Humaneness)	3.49	3.55	-0.92
공정성(Impartiality)	3.62	3.74	-0.54
포용성(Inclusiveness)	3.84	3.26	3.17**
청렴성(Incrruptibility)	4.05	3.66	3.05*
혁신성(Innovativeness)	3.62	3.38	1.89
도덕심(Integrity)	3.80	3.41	2.95**
합법성(Lawfulness)	3.54	3.13	2.47**

행정가치	기능직 공무원 평균	무기계약직 평균	t 값
명령복종(Obedience)	3.93	3.52	2.04*
조직이익(Organizational Interest)	3.35	3.36	-0.17
참여성(Participative)	3.89	3.81	1.13
다원성(Pluralism)	3.73	3.76	-0.23
수익성(Profitability)	3.54	3.91	-1.89
공익(Public Interest)	4.28	3.68	3.46**
신뢰성(Reliability)	3.61	3.59	0.47
대의성(Representative)	3.34	3.25	0.97
대응성(Responsiveness)	3.61	3.46	1.35
사익추구(Self-Interest)	3.23	3.18	0.89
유용성(Serviceability)	3.76	3.69	0.74
사회정의(Social Justice)	3.71	3.27	3.19**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4.14	4.03	1.42
투명성(Transparency)	3.81	3.74	1.01

주) * $p < 0.05$, ** $p < 0.01$

5. 맺음말

새 정부의 큰 정책목표 중 하나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근로자들에게는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르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공무원과 출연기관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아직은 채용문제와 기존 정규직들과의 갈등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이다. 정규직 정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간의 인식의 차이는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행정가치들에 대한 인식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된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본 연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석결과만을 고려했을 때,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안정의 보장만으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가치를 내재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과 같은 추가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결과 통해 살펴봤듯이, 무기계약직 공무원 자신들은 일반직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공식적 권한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직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조직 이익 측면에서도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관관계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한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과 입장 차이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편견은 증가시킬 수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행정가치를 내재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직무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관련되는 권한을 배분하여 책임감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근로자가 아닌 공직에 있어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의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간의 행정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의 비슷한 행정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단위의 분석이 아닌 수원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힘들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창민, 2013, 「무기계약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13, 경인행정학회, 1-23쪽
- 강현호, 2012,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과 관련하여」, 『성균관법학』24,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85-114쪽
- 권인석, 2005, 「공공조직에 있어서 가치의 유형과 구조 : 논의의 제기」, 『한국조직학회보』2, 한국조직학회, 1-21쪽
- 김민희, 2014, 「지방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28, 한국자치행정학회, 149-171쪽
- 김우식, 2001, 「행정에서 가치와 윤리: 논의의 출발」, 『사회과학논총』23,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55-78쪽
- 김태현, 2017,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 『노동포럼』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3-107쪽
- 박육성·김상철, 2011, 「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현대행정예의 시사점」, 『한국정책연구』11, 경인행정학회, 151-182쪽
- 박형준·이명석·김근세·최상욱·임주영, 2013, 「관료의 행정가치 재고찰: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17, 한국정책과학학회, 163-187쪽
- 송진섭·유태용, 2005, 『개인과 조직간 가치부합이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18, 한국심리학회, 361-381쪽
- 신희영, 2007, 「공직가치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1-33쪽
- 윤애림, 2009,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의 실태와 쟁점」, 『산업노동연구』15, 한국산업노동학회, 23-60쪽
- , 2013, 「‘무기계약직’의 문제점과 대안-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5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51-180쪽
- 오석홍, 1995, 「行政과 價値」, 『행정논총』33,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1-38쪽
- 이승협, 2016,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직무특성 및 기관별 임금격차 분석: 중앙행정기관 사무보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22, 한국산업노동학회, 181-212쪽
- Anthony DeForest Molina & Cassandra L. McKeown, 2012, “The Heart of the Profession: Understanding Public Service Values”, *Journal of*

- Public Affairs Education*, Vol. 18 No. 2, pp.375-396
- Frederickson, H. Geoge, 1997,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 Francisco: Jessey-Bass Publishers
- Jorgensen Toben B. & Bozeman, Barry, 2007, Public Values: An Inventory, *Administration & Society*, Vol. 39. No. 3, pp.354-381
- Anthony DeForest Molina & Cassandra L. McKeown, 2012, "The Heart of the Profession: Understanding Public Service Values",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Vol. 18 No. 2, pp.375-396
- Urban, M. E., 1982, *The Ideology Administration: American and Soviet Case*,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Van der Wal, Z., & Hubers, L., 2008, *Value solidity: Differences, Similarities, and Conflicts Between the Organizational Values of Government and Business*, PhD Dissertation, VU University. Amsterdam

〈자 료〉

- 고용노동부, 2017(a), 『고용노동백서』
- , 2017(b),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ABSTRACT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values among civil servants and general civil servants

Focused on Suwon City Government Officials

Hyun, Dae-yong·Jeong, Do-hyo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administrative value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ontract workers, and civil servants. The analysis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employees by conducting a survey of 150 part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ilitary service workers have been largely similar to those perceived by GPAs as a matter of duty. However, the level of perceived administrative values related to the goals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 was considered low. The reason implies that the guarantee of employment safety alone can not imply that the same level of administrative value can be immobilized by the general public .Because of the limited responsibilities of the work, the responsibilities of responsibilities are limited to the responsibilities of responsibilities and organizations. Therefore, the prejudice of civil servants on arms contract may increase, and it can greatly undermine the organizational engagement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conclusion, in order to be reminded of the administrative value of civil servants in Suwon, Gyeonggi Provinc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the employee with the opportunity to provid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variou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allocate responsibilities to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es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of responsi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It should also be possible to motivate oneself to recognize himself as a member of a public office rather than a simple worker.

Key Words : Administrative Value, General Public Officer, Civil Service Public Officer, t-test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경관협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진정은** · 정수진***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장다리길 경관협정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경관협정 개선방안 도출 |
| 3) 선행연구 고찰 | 1) 분석의 틀 |
| 2. 이론적 고찰 | 2) 추진단계 및 참여주체에 따른 분석 |
| 1) 경관협정의 기본개념 | 5. 경관협정 제도개선방안 |
| 2) 경관협정 체결범위 | 1) 주요쟁점사항 |
| 3) 경관협정 추진절차 | 2) 제도개선방안 |
| 3. 수원시 경관협정 사례 | 6. 맺음말 |
| 1) 개요 | |
| 2)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 |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재생 및 도시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인 경관협정 제도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준비하기, 약속하기, 인가받기, 운영하기로 각 단계를 구분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5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수원시 경관협정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됨(SRI-2015-기본-10).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임(Assistant Manager, Urban Regeneration Center Seoul)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 센터장(Research Fellow, Urban Design Center,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i_scape@suwon.re.kr, 010-9108-6291)

하여 단계별 추진과정, 주민주체의 참여 형태 및 역할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협정 매뉴얼에서 제시한 단계와 비교·검토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경관협정은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상호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구축하며, 지역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상을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체결 및 인가단계가 중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준비 및 운영단계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관협정 준비 및 운영단계에서의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사례를 통해 기초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인적 각 부문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고, 연구결과는 향후 경관협정을 확대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참여와 지속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관협정, 주민참여, 추진과정, 수원시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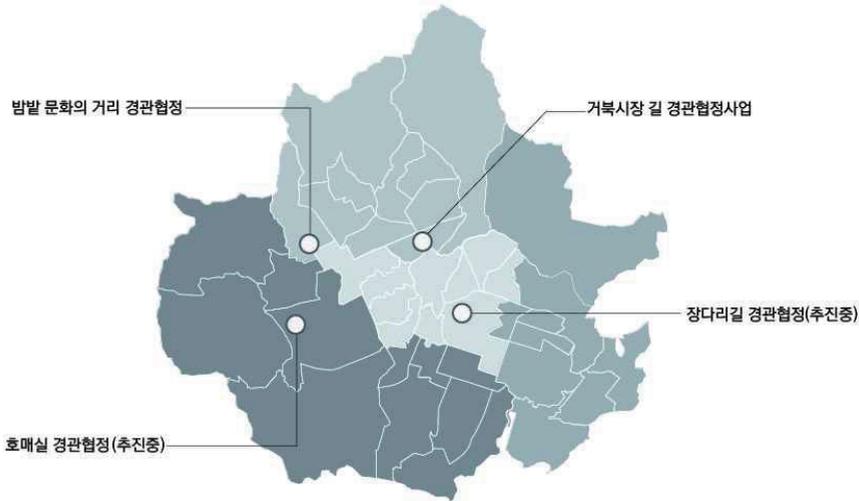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은 주민이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공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이 요구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은 다양한 참여 주체의 합의를 통한 자발적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 및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협정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관협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 협약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경관협정 사례가 드물고, 주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민이 경관협정을 쉽게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관협정이 대내외적으로 인지가 되는 시점은 경관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경관협정 인가시점 이후에 드러나게 되며,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나 각종 사업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체결 완료된 경관협정이 2건, 체결준비단계가 2건으로 경관협정의 각 추진단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추진단계별 세부 사항과 참여자 역할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와 분석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관협정 각 추진단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다 주민이 참여하기 용이한 경관협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협정 4개 지역 중에서 각 단계 별로 1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협정이 체결되고 사업이 추진 완료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경관협정은 체결되고, 협정지원 경관사업이 현재 추진단계에 있는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그리고 경관협정 준비단계인 ‘장다리길 경관협정’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호매실 경관협정’은 추진단계가 ‘장다리 길 경관협정’과 동일하여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림 1〉 수원시 경관사업 위치도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경관협정에 참여한 관계자 인터뷰 조사, 전문가 집중검토회의를 거쳐 분석체계와 기준을 설정하여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관협정에 대한 단계별 추진사항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 경관협정 매뉴얼의 추진과정과 비교하여 검토했다.

주민참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중검토회의¹⁾를 거쳐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중요요소를 추출했다. 경관협정의 주민참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추진단계별, 활동주체별 각각의 역할과 역할변화추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장다리길 경관협정의 준비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이전의 경관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경관협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경관협정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제도연구, 경관협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 경관협정과 타사업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연계사업 발굴연구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이창호 외(2011)²⁾과 박민정 외(2010)³⁾ 등의 경관협정 관련 제도연구에서는 경관계

1) 전문가 집중검토회의는 2015년 9월 1일, 경관, 건축, 디자인, 주민참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했다.

획 및 경관계획의 관리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협정 활용을 제안하거나, 유사 제도나 사례를 통해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써 경관협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지혜·신중진(2014)⁴⁾, 방성원·김한배(2012)⁵⁾, 신중진·장정화(2012)⁶⁾, 김미선 외(2010)⁷⁾등의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으로서의 경관협정의 효용성에 주목하는 한편, 경관협정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의의를 도출했다.

장정화 외(2010)⁸⁾, 변혜선(2009)⁹⁾의 연구에서는 경관협정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한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으며, 차주영 외(2014)¹⁰⁾는 실제 협정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경관협정을 경관계획의 실천방안, 또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측면에서의 효용성이나 연계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등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경관협정 사례가 많지 않고, 행정주도로 경관협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경관협정 사업 추진의 각 단계 별로 추진된 주제별 활동을 조사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2) 이창호·오준걸·정종대, 2011, 「경관협정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경관협정관련 유사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6호, 169-176쪽
- 3) 박민정·안현찬·박소현, 2010, 「노후주거지 개선방안으로서 경관협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 광진구 중곡4동 용마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7호, 183-192쪽
- 4) 정지혜·신중진, 2014, 「밤밭·성대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추진과정에서의 공동체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1호, 139-140쪽
- 5) 방성원·김한배, 2012, 「경관협정사업의 거주 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3-289쪽
- 6) 신중진·장정화, 2012, 「경관협정 활용에 의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의 방향연구-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3호, 187-198쪽
- 7) 김미선·김한배·김연금, 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고양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제2권 제1호, 1-16쪽
- 8) 장정화·양우혁·신중진, 2010, 「경관협정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린파크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신월2동 경관협정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제11권 제4호, 59-78쪽
- 9) 변혜선, 2009, 『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10) 국토교통부, 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표 1〉 경관협정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이창호, 오준걸, 정종대 (2011)	경관협정 제도검토 및 국내 경관협정 유사사례분석을 통한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박민정, 안현찬, 박소현 (2010)	현지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경관협정의 가능성을 고찰하여 경관계획, 주민주도형 진행 및 유지관리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정지혜, 신중진 (2014)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아닌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경관협정사업인 대상지를 통한 공동체 변화 연구
방성원, 김한배 (2012)	서울시 경관협정시범사례대상지 3개소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고 개선안 제안
신중진, 장정화 (2012)	서울시 경관협정시범사례 3개소를 대상으로 경관협정내용과 활용현황을 검토하고, 사업이후 대상지 주민 및 행정담당자, 전문가의견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 도출
김미선, 김한배, 김연금 (2010)	고양시 경관협정사업 중 아파트상가사례를 중심으로 추진주체와 추진과정에 따른 주민참여의 특징을 통해 주민참여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
장정화, 양우혁, 신중진 (2010)	경관협정의 지원사업과 그린파크사업과의 연계를 검토 후 연계의 방법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지속적 경관형성의 방향 제시
변혜선 (2009)	경관협정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시범대상지에 적용, 경관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경관협정과 연계하기 위한 방법과 기대효과 등을 제안
국도교통부 (2015)	경관협정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니터링하며, 경관협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관협정 매뉴얼 제작 제안

2. 이론적 고찰

1) 경관협정의 기본개념

경관협정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거주지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2007년 경

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개념으로 경관법에서 정의하는 경관협정의 개념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자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 협정을 체결한 주체들에게만 미친다. 또한,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관협정 체결이 가능하다.¹¹⁾

경관협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인 관리를 실현하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인 운영회를 조직하여 운영·관리를 통해 협정을 보완 및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경관협정은 주민이 스스로 체결한 협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¹²⁾

경관법에서는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및 협정내용 등을 제시하고, 경관협정의 인가, 변경, 폐지에 대한 사항과 협정의 준수, 승계에 대한 사항, 경관협정 지원방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서 경관협정의 승인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2) 경관협정 체결범위

경관협정은 주거지와 근린상업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다. 경관 관련 외부요소들은 경관협정 사항에 포함할 수 있으며, 경관개선계획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도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법 제 16조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협정의 범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협정의 범위와 내용은 개별건축물 외관에서부터 주차 공간, 해당 지역의 보행로, 안전에 대한 사항까지 지역 경관 전반에 걸쳐서 일반주거지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문화·역사지역에도 적용가능하며, 지역의 입지여건, 주민생활 방식, 주택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1) 경관법 제16조 제1항

12) 경관법은 일본의 경관법을 참고로 도입하여 제정되었다. 주민이 스스로 체결한 협정을 도시계획시스템에 반영하는 일본의 독특한 시민참여제도의 특성을 타고 있는 경관협정 제도가 경관법에 반영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그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및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관협정의 운용 측면에서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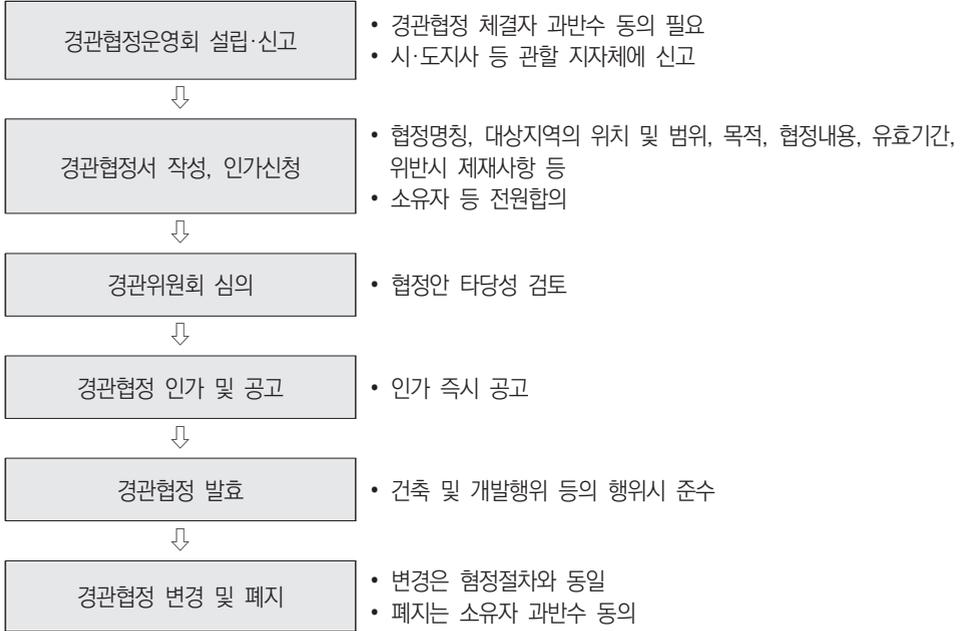
〈표 2〉 경관협정의 범위

기본항목(경관법)	세부항목	주요 내용
1.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입면디자인	주변과의 조화
	지붕 및 차양	지붕형태, 옥상녹화 등
	창문 및 쇼윈도	외부시설 정리 등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횡간판, 입간판 등
3.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외부설비 위치 및 은폐 등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시설	주차공간, 주차질서 등
	담장, 울타리, 대문	담장형태, 화단조성 등
	부지경계공간	경계부 마감, 포장재 등
5.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획지, 건축물의 규모	건물배치, 높이 등
	부지의 용도	주거지 상업시설 등
6.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경관배려, 유지관리 등
7. 기타사항	도로, 보행로	
	수변공간	
	야간경관 및 조명	

3) 경관협정 추진절차

경관법상 규정된 경관협정의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참여자 전원이 합의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인가를 신청한다. 인가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이를 경관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정 안이 경관계획이나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경관협정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가여부를 결정 하며, 위원회에서 인가된 경관협정 안을 인가한 즉시 관보에 게재하여 협정이 발효된 것을 공고하고,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발효 이후 실시되는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는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되며, 협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수립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변경하고, 폐지는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 시 폐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경관협정의 법적절차



3. 수원시 경관협정 사례

1) 개요

수원시는 주민참여 사업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발적 참여의 지가 높다. 경관법 제정 이후 체결된 경관협정은 2개이며, 추진 중에 있는 것도 2개에 이른다. 경관협정이 추진되는 지역은 구도심과 인접한 지역 가운데에서 주민의 참여의 지가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정체결 완료된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협정 체결 준비 중인 ‘장다리 길 경관협정’을 각각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공간적 범위 및 위치, 사업시간 등은 다음 〈표5〉와 같다.

〈표 4〉 사례조사 대상 및 현황

구 분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성대·밤발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장다리길 경관협정(가칭)
위 치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70번길 52(영화동)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290-3번지 일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9-1063
범 위	L=240m, W=15m (76개 점포)	L=650m, W=8m (107개 점포, 공공기관 3개소)	L=800m, W=24m (63개 점포, 공공건축 2개소)
협정인가일	2012. 06(체결기간10년)	2015. 02(체결기간10년)	준비단계
사업기간	2009~진행중	2012~진행중	2015~협정 추진중
추진계기	전문가 주도 제안	주민, 전문가 합의	경관협정시범사업(행정주도)
위 치 도			

2)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은 연구회의 전문가들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경관협정에 가능성을 갖고 거북시장 상인회를 설득해 시작된 사업이다. 아이디어 공유와 적극적 참여를 위해 마을학교 형식의 정기회의와 함께 선진사례 답사 등의 주민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관협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데 거북시장의 경우, 행정적 지원을 통해 경관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비를 확보했으며, 전문가와 상인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3)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은 2011년 상반기 성균관대와 울천동에서 실시한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교육’에서 열악한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 이후 울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균관대와 업무협약이 진행되어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추진위원회 설립, 성균관대와 울천동의 MOU체결, 워크숍, 사례답사,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르네상스사업 공모사업으로 파크데이 축제 및 밤밭·성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했다.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은 한 지역에 속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관협정을 선택했다.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으로 경관협정서 작성 보조사업 외에는 ‘마을르네상스’라는 수원시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자발적 힘으로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4) 장다리길 경관협정

장다리길 경관협정은 수원시가 경관협정제도의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15년 시범사업 공모 당선을 통해 시작되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던 지역 상인회는 수원시 관련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시범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사업 지원시 예비 총괄계획가의 참여와 주민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공모 당선 이후에는 추진협의회와 총괄계획가 중심의 회의와 현장답사, 주민 설명회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협정대상지의 기본계획(안)과 협정서 초안을 작성 완료하였다. 현재는 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16년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행정의 추진의지에 의한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이 협정은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협정내용 수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4. 경관협정 개선방안 도출

1) 분석의 틀

(1) 추진단계 구분

단계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단계를 경관협정 매뉴얼(국토교통부, 2015)에서 제시하는 준비하기, 약속하기, 인가받기, 운영하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 활동과 함께 협정 추진을 위한 주민활동을 분류했다. 준비하기 단계는 준비, 유도, 기획의 단계로 세분했다.

(2) 실행주체 구분

실행주체별 분석은 주민(지역주민, 상인회, 건물주 등), 전문가(어드바이저, 자문단, 코디네이터 등), 행정(해당 주민센터, 구청, 시청 관련부서), 세 부분의 주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역할 별로 수행한 활동을 통해 경관협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2) 추진단계 및 참여주체에 따른 분석

(1)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전문가 제안으로 시작된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의 경우 주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했다. 따라서 체결준비단계 중 준비단계의 기간이 10개월로 각각 5개월, 2개월이었던 다른 두 사례에 비해 길게 소요 되었고 주민교육 및 현장답사 등의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 졌다.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은 제도 도입 초반에 이루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와 관련한 논의와 주민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의 경우 준비, 유도, 기획단계를 포함한 체결준비단계가 총 43개월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지역에 속한 전문가와 주민의 합의가 선행된 상태에서 경관협정이 추진되어 준비 및 유도 단계가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짧았던 반면 기획단계 기간은 경관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해 주민 교육 및 계획방향 설정, 지원 사업 수행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성균관대가 중심이 된 전문가 집단이 주도적으로 주민워크숍, 디자인워크숍, 사례답사

등 주민들이 경관협정을 이해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기간에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의한 다양한 활동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장다리길 경관협정’은 체결유도단계의 소요 기간이 가장 짧았다. 경관협정 준비단계에서 시간이 단축되었던 것은 이미 사업효과를 체험한 거북시장 길 상인회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답사 및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 지원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¹³⁾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활동은 관련 지원 사업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수원 거북시장 길’과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지원 사업을 활용해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장다리길’의 경우 협정 추진의 계기 자체가 경관협정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준비 및 유도 단계의 활동이 초창기 협정지원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각각의 주도적인 주민단체의 역량, 전문가 집단의 지원, 행정의 지원가능성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표 5〉 협정 단계별 소요 기간

구 분		수원 거북시장 길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장다리길
준비 하기	준비	10개월	5개월	6개월
	유도	12개월	5개월	2개월
	기획	10개월	33개월	18개월
약속하기		1개월	2개월	-
인가받기		10개월	5개월	-
운영하기		2012. 06 ~	2015. 02~	-

13) 장다리길 상인회 회장단과 거북시장 길 상인회 회장단 간에는 지역 직능단체로 연결된 개인적 인적 관계가 토대가 되어 상호 정부교류가 수시로 가능한 상황이었다.

〈표 6〉 경관협정 각 단계별 주요 활동 비교

단 계	수원 거북시장 길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장다리길	
준비하기	준비	상인회-연구회 상견례 및 모임 정례화	추진주체 역량강화교육 (좋은마을만들기 수원마을학교)	상인회 주축 발전방향 토의
		주민사전교육 및 현장조사	주민-성균관대 업무협약식	수원시 관련 지원 사업 조사
		상인회-연구회 협약체결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련부서 면담
	유도	협정위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	경관협정 체결 발의 및 홍보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진(전문가) 검토회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설명회	예비 총괄계획가 선정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조직	추진위원회 조직	집중검토회의(2회)
	기획	협정서 작성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협정서 작성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주기적 회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주기적 회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주기적 회의
		사례답사 및 주민토론회	경관협정이해 (교육 및 사례답사)	경관협정이해 (설명회 및 사례답사)
		세미나, 토론회 및 집중검토회의 진행	전문가 사전기획 (경관협정 프로세스 및 전략 기획)	전문가 사전기획 및 자문
		현장조사 분석 및 주민의견 청취	기초현황 및 주민의견 조사·분석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국비 확정	마을의 공동과제 도출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및 계획(안) 제안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기본구상 및 계획(안) 제안 주민설명회 및 협정내용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경관협정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회의	협정 체결자 모임 조직 협정내용 구체화(디자인 워크숍)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국비 확정
	약속하기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서 동의 및 체결		경관협정서 동의 및 체결	경관협정서 동의 및 체결 진행 중	
인가받기	경관협정서 인가신청	경관협정서 인가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협정서 인가 및 공고·발효	경관협정서 인가 및 공고·발효		
운영하기	경관협정 연계 1차 사업 시행	경관협정 연계사업 시행		
	경관협정 연계 2차 사업 시행	개별사업 진행 예정		
	협정변경 및 운영	협정 운영		

(2) 경관협정 준비단계에서의 주민접촉

경관협정 준비단계에서의 주민접촉 방법을 살펴보면 주민교육, 설명회, 사례답사, 집중검토회의 및 세미나, 소식지 발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사례별로 이루어진 회수는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수원거북시장 길은 주민교육 및 설명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창기 경관협정에 대해서 고민한 전문가 및 주민집단에서 자체적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모임이 자주 개최되었다고 하며, 정기적으로 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결과로 여겨진다.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에서도 모든 유형의 주민접촉 활동이 이루어졌고, 특히 사례답사와 소식지 발간의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이루어 졌다. 전문가 집단이 대학교였고, 선도적 주민그룹의 업종 특성 등에 의해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것에 능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다리길’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와 참여를 엿볼 수 있는 교육과 소식지 발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설명회의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그룹이 경관협정을 통해서 지역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행정 및 시 산하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이 기획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장다리길 경관협정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부터 추진하고 있다.

<표 7> 체결준비단계의 주민접촉 비교

구 분	수원 거북시장 길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	장다리길
주민교육	9회	4회	-
설명회	8회	3회	4회
사례답사	7회	8회	2회
집중검토회의 및 세미나	6회	6회	2회
소식지 발간	2회	4회	-

(3) 경관협정 실행주체별 분석

경관협정의 실행주체는 주민, 전문가,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꼭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초기 주도 주체에 따라 각자 역할의 상관관계와 활동의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9> 참여주체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나, 초기 단계를 비교해보면 각 주체의 핵심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는 주로 교육 및 협정유도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 거북시장 길’과 ‘성대·밤밭 문화의 거리’의 경우, 초기에는 주민의식변화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지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의 미래발전상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장다리길’의 경우 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획단계에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여주체와 참여 전문가의 구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주민이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의견 공유와 조율을 통해 계획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주최하거나 의견을 중재,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 등과의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체결단계에서는 전문가는 협의내용과 함께 작성방법, 인가 등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지원과 인가 후 협정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연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은 각 추진 단계별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이행하며, 의견조율단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수원시의 경우, 행정적 지원 담당자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상당히 높아, 의견수렴 및 조정, 전문가 지원 등에 탁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다리 길 경관협정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사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 및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8〉 단계에 따른 주체별 주요 활동 및 참여도

단계	주체	수원 거북시장 길	성대·밤발 문화의 거리	장다리길	
준비하기	준비 및 유도	주민	- 상인회 중심 참여 - 의사결정 참여 시작 - 주민 간의 공감대 형성	◎ - 추진위원회 결성 - 경관협정 활동 중추적 역할 - 전문가 및 행정 지원 요청	● - 추진위원회 결성 - 상인회 중심 문제 인식 - 전문가 및 행정지원 요청
		전문가	- 상인회 및 지역주민 설득 - 활성화방안 연구지원 - 지역환경개선 연구지원 - 협정교육	● - 주민참여 활동 지원	○ -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지원 - 공모 신청 제안서 작성 자문 - 집중검토회의 주최
		행정	- 경관협정사업 홍보 - 지역에 대한 관심	○ - 경관협정사업 홍보 - 모임공간지원 - 관련사업 연계	◎ -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기획	주민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운영 - 거리축제 개발 및 운용 - 협정추진방향 설정	●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운영 - 협정추진방향 설정 - 체결자 모집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운영 - 협정추진방향 설정 - 지속적 홍보
		전문가	- 운영위원회 조직 - 집중검토회의, 토론회 주최 - 각 주체간의 의견조율 - 기본구상 및 계획 방향	● -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구상 - 행정 및 성균관대와의 협의	- 주민이해 및 자문 지원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구상 - 연계사업 제안
		행정	- 관련연계사업 제안 및 지원 - 경관협정 절차 자문	◎ - 경관협정을 위한 행정지원 - 경관협정 절차 자문	● - 경관협정을 위한 행정지원 - 경관협정 절차 자문
	약속하기	주민	- 경관협정 체결	◎ - 경관협정 체결	◎ - 이하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 경관협정 체결 조언	● - 경관협정 체결 조언	
		행정	- 경관협정 세부사항 검토	◎ - 경관협정 세부사항 검토	◎
인가받기	주민	- 경관협정서 제출	● - 경관협정서 제출	●	
	전문가	- 경관협정서 작성 및 조언	● - 경관협정서 작성 및 조언	●	
	행정	- 경관위원회 절차 추진	◎ - 경관위원회 절차 추진	◎	
운영하기	주민	- 협정유지를 위한 운영관리 - 환경개선 등 각종사업 추진 - 경관개선사업 추진	◎ - 협정유지를 위한 운영관리 - 경관개선사업 추진	◎	
	전문가	- 경관협정 유지관리 자문 - 경관협정시범사업 계획 지원 - 경관협정사업 추진 조언 - 경관사업 설계 및 시공 자문	◎ - 경관협정 유지관리 자문 - 경관협정사업 추진 조언	◎	
	행정	- 경관협정사업 지원 - 경관협정 이행 관련 지원	● - 경관협정사업 지원 - 경관협정 이행 관련 지원	●	

(○:소극적참여, ◎:명목적참여, ●:적극적참여 - 3단계로 구분)

(4) 분석종합

수원시에서 추진한 경관협정 추진 사례를 단계별 활동과 추진주체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협정 추진단계중 체결준비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 주민 역량을 다지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설명회, 집중검토회의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협정체결의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이다.

둘째, 협정 추진 계기에 따라 단계별 활동 및 적극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문가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은 유도단계에 주민교육이 중점으로 이루어졌고, 전문가와 주민 합의에 의해 시작된 사례에서는 기획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 추진에 의한 협정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기본계획수립이 중점이 되었다.

셋째, 관련 지원 사업이 중요한 순간에 협정추진의 원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각각 지원 시기는 달랐으나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힘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을 변모시켜 주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 적극적인 주민활동을 이끌어 내 협정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경관협정 제도개선방안

1) 주요쟁점사항

수원시 경관협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드러난다. 첫째, 경관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을 대상으로 각각 경관협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들이 경관협정체결에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운영단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 협정의 각 단계별로 각 주체별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추진목표를 단계적,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가와 체결단계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관협정의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주민이 작성한 마스터플랜에 대해 과도한 심의를 추진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관협정에 대한 단계별, 주체별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반드시 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관협정의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경관협정 인가 및 체계단계에서 필요한 지원과 이후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경관협정 체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경관협정 유도가 유효한 지원방안이나, 실제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관협정 체결이후에 이루어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따라서 경관협정에 대한 사업지원을 일반적인 경관사업이 아니라 협정과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추가로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협정인가 이후 운영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경관협정지원사업, 또는 경관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다.

2) 제도개선방안

경관협정 추진 단계에서 초기 준비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경관협정 체결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행정의 참여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경관협정 준비단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경관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별 경관센터의 설치 등을 이행하여 각 지역에서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관협정의 인가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협정체결서의 기본양식, 심의 주요내용, 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상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경관협정매뉴얼에 있어서도 경관협정 체결자가 아니라 행정 및 심의위원이 어떤 것을 심의하고 분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경관협정 및 협정체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관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시에서와 같이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지원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과 같은 주민활동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를 행정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관협정 절차와 추진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경관협정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관협정제도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주민 합의를 통한 지속적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가능성을 가진 경관협정의 추진 사례를 단계별 활동과 참여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위한 경관협정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경관협정은 전문가와 행정주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룬 경관협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수원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경관협정은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상호 소통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체결 및 인가단계가 중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준비 및 운영단계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관협정 준비 및 운영단계에서의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관협정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가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관리 등의 관점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수원시 사례를 통해 기초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인적 각 부문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결과는 향후 경관협정을 확대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 참여와 지속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7.09.14

심사일 2017.10.16.~10.27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김미선·김한배·김연금, 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고양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제2권 제1호, 1-16쪽
- 국토교통부, 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해양부, 2008, 『경관협정 수립매뉴얼』
- 박민정·안현찬·박소현, 2010, 「노후주거지 개선방안으로서 경관협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 광진구 중곡4동 용마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7호, 183-192쪽
- 방성원·김한배, 2012, 「경관협정사업의 거주 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3-289쪽
- 변혜선, 2009, 『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신중진·장정화, 2012, 「경관협정 활용에 의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의 방향연구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3호, 187-198쪽
- 이창호·오준걸·정종대, 2011, 「경관협정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경관협정관련 유사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6호, 169-176쪽
- 정지혜·신중진, 2014, 「밤밭·성대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 추진과정에서의 공동체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1호, 139-140쪽
- 장정화·양우혁·신중진, 2010, 「경관협정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린파킹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신월2동 경관협정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지 도시설계』 제11권 제4호, 59-78쪽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Agreement for Residents Participation

Jin, Jeong-eun·Chung, Soo-jin

The city of Suwon,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leading city. We divided the stages into preparation, promise, approval, and operation, and classified the types of participation and role of residents and analyzed them. We tri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by comparing with the steps presented in the landscape agreement manual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Landscape agreements should use various means at the preparatory stage to induce the mutual communication of the residents to establish local communities, and to create and share concrete futures for regional changes. Institutionally, signing and accreditation stages are important, but the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and operation stage is much greater for the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ly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in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support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institutional,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the promo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ase of Suwon city.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practice.

Key Words : Landscape Agreement, Residents Participation, Implementation Process, Suwon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 및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

송원경**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결과 및 고찰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
| 1) 연구범위 | 2)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 |
| 2) 연구방법 | 3)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 |
| | 4. 맺음말 |

요 약

본 연구는 자투리 공간을 유형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원시 전체의 약 19.2%가 서비스 소외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비스 소외지역인 권선구의 4개 동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고 50개 대상지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였다. 자투리 공간은 면적 10㎡~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로-건물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이 가장 많았으며 형상은 가장형과 삼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투리 공간 대부분이 현재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유형과는 크게 상관없이 획일적인 이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 대상지에 분포하고 있는 자투리 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투리 쉼터형, 텃밭형, 경관조성형, 비오톱조성형, 주차장조성형, 화단형 등 총 6개의 녹화유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투리땅, 공원 서비스, 주민참여, 녹화전략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됨(SRI-기본-2013-05).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E-mail: wksong@dankook.ac.kr, Tel: 041-550-3636

1. 머리말

수원시는 산림이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여 잠재적인 공원·녹지 서비스 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이다. 그러나 전체 면적대비 약 5%의 공원을 확보하고 도심에 다수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공원·녹지조성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생활권 공원의 개념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을 공급하는 정부 주도형 전략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시민참여를 고려한 민간 주도형 전략이 중요한 공원 관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미조성 문제는 실제로 도시계획상 제공되는 공원·녹지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도심과 같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공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원 녹지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원 이용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 등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현 등, 2015).¹⁾ 독일 베를린의 경우 주거지와 가까운 보행 500m 내에 최소 0.5ha 공원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SDUDE, 2006),²⁾ 호주 시드니는 보행 400m 이내에 지역단위 공원을 확보하여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NSW, 2010).³⁾ 국내에서도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접근성으로 파악하고 공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동현과 이경주(2010)⁴⁾는 도시공원 공급권역을 1,000m로 설정하여 부산시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성현찬과 이양주(2012)⁵⁾는 경기도내 신

1) 김현·김예성·이다솜·김지엽, 2015, 「도시공원 이용권 분석을 통한 수원시 공원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43(2), 114-124쪽

2) SDUDE, 2006, "Landschafts programmeinschließlich Artenschutzprogramm 1994",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3) NSW, 2010, "Recreation and Open Space Planning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New South Wales Government

4) 이동현·이경주, 2010, 「부산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13(1), 164-172쪽

5) 성현찬·이양주, 2012, 「신·구시가지의 도시공원 불균형 분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

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혼재된 도시를 대상으로 공원자원의 유치권을 500m, 1,000m로 설정하여 공원부족지역을 분석하였다. 공원 접근성에 대한 계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오규식과 정승현(2005)⁶⁾, Oh and Jeong(2007),⁷⁾ 손승우와 안동만(2013),⁸⁾ 김현 등(2015)은 네트워크 분석 방법, 김형준 등(2011)⁹⁾은 확률적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보행자가 실제 도시를 이동하는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김은정 등(2016a)¹⁰⁾은 Huff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공원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신규 도시공원 입지를 분석하였다(김은정 등, 2016b).¹¹⁾

도시 속의 모든 공간들은 도시계획 하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공간에 대한 방치와 방기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에서 방치와 방기가 만들어 낸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 하며 자투리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존재하고 있으나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 둘째, 활용되나 적합하지 않게 쓰이는 공간을 자투리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백나영, 2002; 김미나, 2008).¹²⁾ 이러한 자투리 공간은 현재라는 시대에서 바라볼 때 도시환경의 악화요인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간의 활용성에 있어 잠재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정지호, 2011).¹³⁾ 현재 이러한 자투리땅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는 내려진 바 없다. 다만,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인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18평)이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50㎡(60평)이하를 정효자 등(2002)은 자투리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가 도로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분할된 경우나 기존

복원녹화기술학회지』15(3), 1-15쪽

- 6) 오규식·정승현, 2005, 「GIS 분석에 의한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 『국토계획』40(3), 189-203쪽
- 7) Oh, K. and S. Jeong, 2007,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parks using GI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2(1-2), pp.25-32
- 8) 손승우·안동만, 2013, 「도시공원 서비스권역 내·외 이용인구 정밀 분석-대구광역시 근린공원, 주민등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41(5), 9-18쪽
- 9) 김형준·정성관·이우성, 2011, 「도시공원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을 통한 공급적정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39(4), 18-27쪽
- 10) 김은정·김동원·김지훈·강정은, 2016(a), 「Huff 모형을 활용한 도시공원의 공급 적정성 평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국토연구』90, 71-83쪽
- 11) 김은정·김지훈·김동원, 2016(b), 「공급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신규 도시공원 입지 분석: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19(3), 87-102쪽
- 12) 백나영, 2002, 「도시공간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나, 2008, 「경계 특성에 의한 자투리 공간의 디자인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정지호, 2011,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넓은 주택을 상업용의 건물로 신축하는 경우까지도 자투리땅의 개발이라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규에서 밝힌 자투리땅의 범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정효자 등, 2002).¹⁴⁾

최근 신규 공원 조성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자투리공간 활용이 중요한 공원 정책의 흐름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평공원, 도시 생생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 공원,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들은 주민과 기업, 행정, 시민단체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에 존재하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생활권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공원·녹화 조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여 공원·녹지 소외지역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투리 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녹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수원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심 구조 및 역사에 따라 자투리 공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으므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도심 자투리 공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현재 조성되어있거나 조성 중인 공원 및 자연녹지 등 공원·녹지공간을 확인하고 이들의 서비스권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자투리 공간을 파악하였다. 특히 중점 조사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 4개 구 40개 동을 대상으로 도시쇠퇴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과 연계하였다. 수원시 40개 동 가운데 낙후지역이라고 인식되는 서수원권 권선구 세류 1동, 세류2동, 세류 3동, 평동 총 4개의 동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원시는 2013년 6월 이후 방치된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을

14) 정효자정지석·최무혁, 2002, 「물리적 환경요인에 의한 자투리땅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22(1), 231-234쪽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제출된 조성자료를 대상으로 수원시 전체의 자투리땅 조사지역을 파악하고 이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중 공원·녹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투리 공간 녹화전략을 수립하였다.

2) 연구방법

공원과 녹지를 통합하여 서비스 권역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산림과 하천을 GIS에서 중첩하여 중복되는 지역을 처리하였다. 수원시의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GIS 버퍼분석을 활용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에서 실시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대상지 중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자투리 공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녹화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공원 크기별 유치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250m,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도보권 근린공원은 1,000m 등으로 규모에 따른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투리 공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보다 좁은 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치권의 관점에서 250m를 버퍼 거리로 설정하였다. 보행속도는 각 개인의 육체적 조건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보통 보행자의 평균속도를 1.2m/s로 보고 있다(박영춘과 권용석, 2003)¹⁵⁾. Oh and Jeong(2007)은 1m/s를 보행자 속도로 고려하였으며, 도심 횡단보도를 건널 때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여 실제 이동 속도를 계산하였다. 이처럼 보행속도는 보행밀도, 거리 상태, 이동 목적, 연령 및 보행자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1m/s를 보행속도라 가정할 경우 250m 거리는 약 4.2분이 소요되는 시간이지만, 도심의 경우 횡단보도가 다수 존재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감소하므로 이 거리를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임계 거리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투리 공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유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추진한 ‘자투리땅을 활용한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대상지 관리카드에 기재된 위치와 소유주, 추진 주체, 추진 내용과 정비 전후 사진을 사전조사로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

15) 박영춘·권용석, 2003, 「중심지역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113-126쪽

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요건 중 쇠퇴 지역에 포함되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지동초등학교 일대를 부근으로 자투리 공간들을 살펴보았다. 쇠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자투리 공간을 살펴봄을 통해 수원시 자투리 공간의 녹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2013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현장조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곳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차 조사에서부터 5차 조사까지 이어진 현장 조사에서는 권선구 세류 1동, 2동, 3동, 평동을 차례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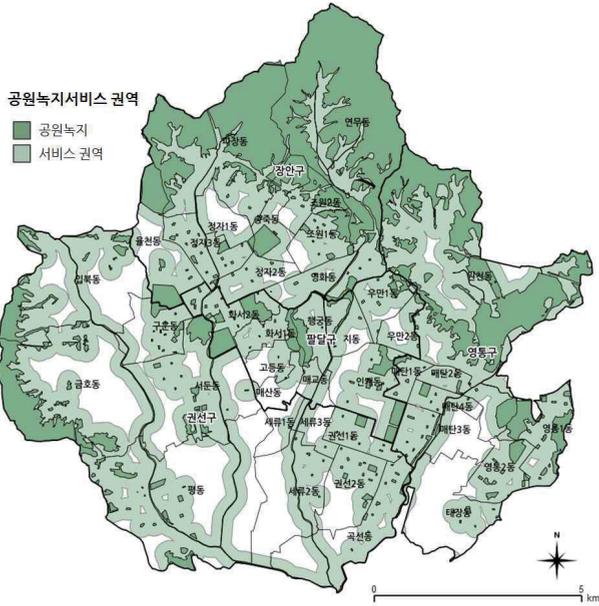
3. 결과 및 고찰

1)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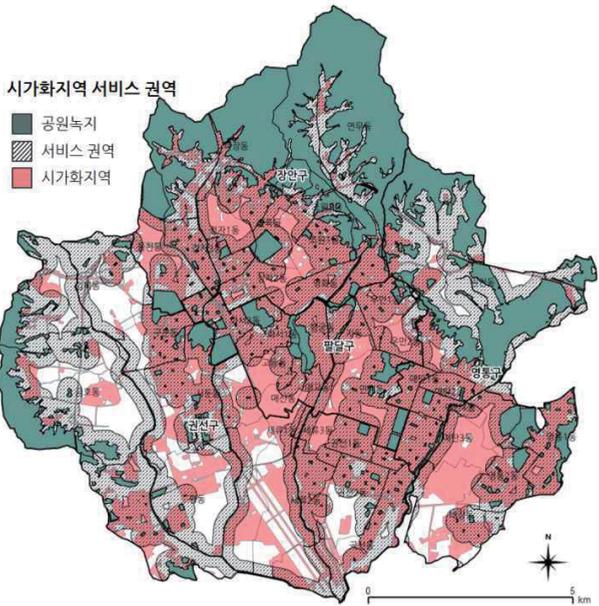
수원시는 화성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형 도시구조를 보유한 만큼 풍부한 역사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수원시에는 총 254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근린공원은 51개, 어린이공원은 184개가 조성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산림, 하천을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연무동이 광고산의 영향으로 전체 면적대비 77%의 공원·녹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원시에서 가장 공원·녹지가 풍부한 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파장동(64%), 원천동 및 송죽동(45%), 조원2동(40%), 화서2동(37%), 영통1동(34%), 율천동(32%) 등이 30% 이상의 공원·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동은 순서대로 세류1동, 정자2동, 태장동, 지동, 세류3동, 세류2동, 정자1동, 영화동, 매교동, 권선2동, 매탄3동, 곡선동 등으로서 이러한 동은 현재 수준에서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원·녹지 서비스 임계거리는 도보 5분 이내이자 어린이공원 조성기준인 250m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원시 전체의 약 80.8%가 서비스 가능한 권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원시에서 약 19.2% 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서비스 요구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역별로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비율을 살펴보면 광고산에 인접한 대부분의 동이 85% 이상의 공원·녹지 서비스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세류1동(33%), 태장동(34%), 매산동(41%), 정자1동(51%), 세류2동(52%), 고등동(58%), 세류3동(60%)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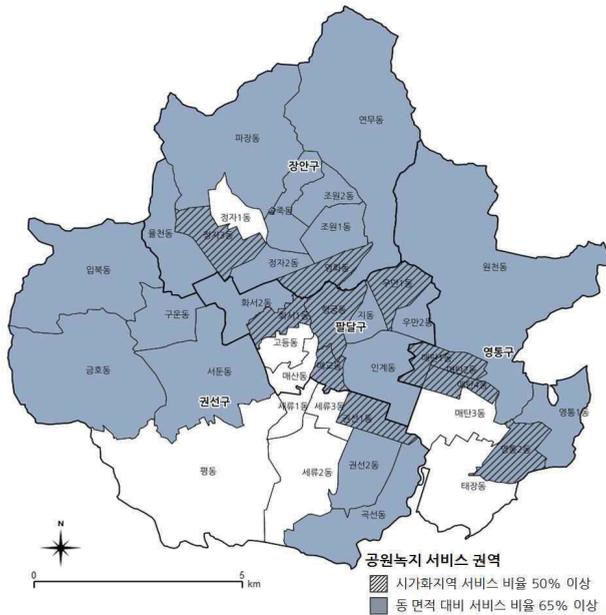


〈그림 1〉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분석 (250m 기준)



〈그림 2〉 시가화지역 중 서비스 권역 (250m 기준)

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가화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미서비스 지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11년) 기준으로 전체면적의 44.4%가 시가화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과 서수원지역 황구지천 인근의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심지역은 시가화지역이라 할 수 있다. 세류3동, 매탄3동, 매향동, 지동, 매탄1동, 매산동 등이 가장 시가화 비율이 높은 동으로 확인되었다.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계산했을 때, 매탄1동(94%), 매탄2동과 권선1동(90%)은 시가화지역에 대한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은 동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금호동(6%), 입북동(9%), 연무동(10%), 원천동(16%), 태장동(20%), 평동과 파장동(24%) 등은 가장 낮은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조원2동(31%), 세류1동(33%), 매산동(35%), 울천동(36%), 송죽동(39%), 권선2동(40%) 등이 40% 이하의 낮은 공원·녹지 서비스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금호동, 입북동, 연무동 등은 칠보산, 광교산 등 산림 비율이 높으나 주거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계획도시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공원 및 녹지가 배치되지 못하여 서비스 비율이 낮게 계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종합 (250m 기준)

서비스 면적 비율을 전체 행정구역 및 시가화지역 면적 대비 2/3로 설정했을 때 행정구역 비율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은 그림 3의 흰색 부분이며, 시가화지역 비율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은 빗금 이외의 지역이다. 두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상대적으로 팔달구는 고등동과 매산동을 제외하고는 공원·녹지 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별로 비교할 때 장안구는 정자1동 한 지역, 영통구는 매탄3동과 태장동 두 지역, 권선구는 세류1,2,3동과 평동 등 총 4지역이 공원·녹지 서비스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권선구가 공원·녹지 서비스에 취약한 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인프라에 의해 공원·녹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기준에서 근린공원 등과 같은 공원·녹지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간적인 제한,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단중기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두 번째,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 전략이 공원·녹지 서비스 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자투리 공간 유형 분석

권선구 4개 동을 조사하기 위해 면적과 지목, 용도지역, 소유 현황 등 장소의 기본적인 현황부터 지형의 고저, 필지형상, 도로접면을 살펴보았다. 세류 1동, 세류 2동, 세류 3동, 평동은 앞서 분석한 공원·녹지 서비스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서비스가 낮게 분석된 지역이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함께 가꾸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정비 전의 대상지는 모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이용/방치 상태였고 상당수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고 토양이 그대로 노출된 장소가 많았다. 인접 건축물의 필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나 현재 주거, 상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기존 자투리 공간을 주로 화단, 텃밭,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하였고 사업 직후에 바로 개선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쓰레기는 아직 방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상지가 대부분 가로화단인 경우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로 확인되었다.



〈그림 4〉 주민센터로 조성된 자투리땅 예시

대상지의 용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화단으로 이용되는 곳이 39곳, 텃밭은 6곳, 쉼터는 3곳, 기타는 2곳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이용되는 공간은 주로 복지관 내의 무대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지역이다. 현장조사 결과, 10㎡ 미만은 4곳, 10㎡~30㎡는 20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100㎡는 13곳, 400㎡ 이상은 3곳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면적에 따른 자투리 공간 이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면적 10㎡ 미만의 자투리 공간은 전체 대상지 100% 모두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면적 10~30㎡의 경우 전체 대상지 중 15곳(75%)이 화단, 2곳(10%)이 텃밭, 1곳이 쉼터, 나머지 2곳은 무대로 조성된 1곳, 폐기물 적치장 1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 30~100㎡의 경우 화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쉼터와 텃밭이 각각 한 곳씩 이용되고 있었다. 면적 100~200㎡의 경우 화단과 텃밭이 각각 3개씩 같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었고, 면적 200~400㎡의 경우 화단이 3곳, 쉼터가 1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적 400㎡ 이상인 지역은 2곳이 화단, 1곳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면적에 따른 자투리 공간의 이용 종류를 살펴보면 면적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화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좁은 면적일수록 소규모 화단으로 이용되는 곳이 많았으며, 100㎡ 이상의 넓이에서 텃밭 등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성된 공간이 개인이 조성한 텃밭이 아니라 관 주도로 조성된 마을 공동 텃밭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넓은 자투리 공간에서도 화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투리 공간이 단편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향후 다양한 자투리 공간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자투리땅의 위치를 보면, 도로와 접하는 곳에 생긴 자투리땅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도로와 건물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공간이 13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생긴 자투리땅과 인도와 인도, 인도와 도로(차도) 사이에 생긴 자투리땅은 각각 한 곳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위치에 따른 자투리 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건물에서 29곳(69%), 도로-건물에서 23곳(79%) 등 많은 지역이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로-도로의 3곳, 도로-건물의 2곳, 건물-건물의 1곳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제외한 모든 위치는 대부분 화단으로 이용되었고 도로-도로, 건물-건물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이용 형태가 발생되고 있었다.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해본 결과 가장형의 형태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삼각형, 사각형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형상으로는 원형의 화분의 경우가 있었다. 토지 형상에 따른 공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형의 91%, 삼각형의 77%, 부정형의 67%가 화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사각형의 경우는 화단이 3곳으로 기타 이용(폐기물 적치, 무대, 주차장)과 이용 빈도가 같았으며, 텃밭 1곳, 쉼터 1곳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이 화단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사각형 등과 같이 다양한 토지이용이 가능한 자투리 공간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자투리 공간 녹화 전략

자투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녹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투리땅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정효자 등(2002)은 대지의 형태와 인접도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여운상(2009)¹⁶⁾은 공공유 자투리땅의 공원 적합지 선정시 공원 유치권 중복율, 산림과의 거리 등의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등의 용이성, 접근성 등의 이용가능성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명과 최춘웅(2011)¹⁷⁾은 자투리땅의 소유형태와 생성배경, 공간활용현황을 중요한 인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투리 공간의 입지, 면적, 위치, 형태, 토지소유,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자투리 공간의 녹화 유형을 구분하였다. 자투리 공간 입지는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자투리 공간이 소공원의 형태 이하의 공원 형태로 조성될 수 있으므로 반경 250m를 기준으로 주변

16) 여운상, 2009, 「방치된 국공유 자투리땅, 공원으로」, 『BDI정책포커스』48, 부산발전연구원

17) 신명·최춘웅, 2011, 「도심 주거지역의 자투리땅(mini-lot) 발생 현황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서울 4곳 주거 전용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27(10), 147-154쪽

에 공원·녹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지, 면적, 위치, 형태, 경사, 주변토지이용,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자투리 쉼터형, 텃밭형, 경관조성형, 비오톱조성형, 주차장조성형, 화단형과 같이 6개 유형을 제시하였다(표 1).

〈표 1〉 자투리 공간 녹화를 위한 고려 요소

고려 요소	설명	유형 구분 참고사항
입지	반경 250m 이내 공원·녹지 존재여부	공원(쉼터) 조성 필요성
면적	대상지 면적(㎡)	공원(쉼터) 시설 도입 가능성
위치	도로, 인도, 건물과의 위치	휴식형, 경관형 공간 여부
형태	사각형, 삼각형, 부정형, 가장형 등	공원(쉼터) 시설 도입 가능성
경사	경사도(%)	공원(쉼터) 시설 도입 가능성
토지소유	국공유지, 사유지 여부	토지이용 계약 필요
주변토지이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자투리 공간 기능 설정
주민의견	지역주민 의견	선호하는 공간
기타	기타 참고사항	통행량, 관리문제 등

(1) 자투리 쉼터형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지 않고 대상지 면적이 10㎡ 이상 확보될 수 있으며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고 형태가 가장형이 아닌 원형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에는 자투리 쉼터형 녹화가 가능하다. 자투리 공원은 한뼘공원과 같이 주변에 공원이 충분하지 않은 도심에서 소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이용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주민의 커뮤니티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음이 가능하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벤치 등 공원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투리 쉼터는 공공공간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단순히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간 상호 소통하면서 직접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서동진과 임종훈, 2016).¹⁸⁾ 이러한 커뮤니티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이 공간은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즐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절별 초화류를 함께 식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자투리 쉼터형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입 시설과 공원의 기능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면적이 충분할 경우 필요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능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변에

18) 서동진·임종훈,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37, 89-99쪽

공원·녹지가 존재하더라도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투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자투리 텃밭형

자투리 텃밭은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에 공원·녹지가 존재하여 공원의 기능은 크게 필요치 않은 입지 조건으로서,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은 지역 중 특히 건물과 인접한 위치에 적합한 녹화전략이다. 면적이 넓을수록 조성에 유리하겠지만, 건물에 인접한 경우 해당 건물 거주자가 직접 자투리 텃밭을 관리하도록 하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투리 텃밭은 도시 농업의 하위 공간 규모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을 지칭하지만, 자투리 텃밭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유휴공간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심형 도시농업에 ‘건강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이 ‘여가활동형’ 라이프스타일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므로(이동관과 조세환, 2016),¹⁹⁾ 대상지와 같은 구도심에 자투리 텃밭 조성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대상지 형태가 가장형인 경우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채소류를 식재함으로써 화단과 같은 심미적 기능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계절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텃밭이 관리되지 못할 경우 미관상·환경상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자투리 경관조성형

대상 자투리 공간 면적을 30m²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며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어 있는 등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할 때 접근이 불량한 지역인 경우 자투리 경관조성형 녹화전략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지만 도로에 그대로 노출된 공간으로서 심미적인 경관녹지를 조성할 경우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교통섬 등 시각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 다층 식재하여 풍부한 녹색과 화려한 초화류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유형은 화단형과 달리 교목, 아교목, 관목 등의 식재를 병행하므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경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

(4) 자투리 비오톱조성형

자투리 비오톱은 도로와 도로로 고립되지 않고, 대상 자투리 공간 주변의 공원·녹지

19) 이동관·조세환, 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4(6), 40-50쪽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환경·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환경포텐셜(environmental potential)의 관점에서 주변에 산림, 하천 등 생태계 보존 상태가 우수한 지역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더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소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동성이 좋은 곤충류 및 조류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을 유도하기 위해 초화류 등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다층식재 소재로 열매가 열리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은 연못을 조성할 경우 비오톱의 생물종 다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자투리 비오톱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빗물의 토양 침투를 유도하고, 연못과 우수저장시설을 병행하여 비오톱의 관수에 인위적인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도록 환경교육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지 특징별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LID 기법을 적용할 경우 침투유량은 최대 8.3%, 총 유출량은 최대 6.2%까지 감소할 수 있으므로(이대희, 2017),²⁰⁾ 자투리 비오톱 조성을 통해 도심 침수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 보전 및 관리 효과는 환경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대상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할 경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체험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자투리 주차장조성형

자투리 주차장은 대상지 면적이 10㎡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사각형 공간으로서,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인 경우 제안되는 녹화형태이다. 단순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을 활용하여 우수침투를 유도하고 주차장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면적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녹음 제공이 가능한 교목을 함께 식재할 경우 경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주차장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이동형 벤치, 그늘막 등을 도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입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경우 주차장, 주민 쉼터 등이 공유하는 공간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김주희 등, 2015).²¹⁾

20) 이대희, 2017, 「보도 공간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기법 테스트베드의 특성 및 유출저감 효율 분석: 투수블록, 수직침투관, 빗물저류조를 대상으로」, 『한국수처리학회지』25(1), 79-89쪽

21) 김주희·맹지수·윤희수, 2015, 「도심 속 가설 주차 구조물을 이용한 컨테이너 모듈 형태의 운동, 놀이, 휴식의 공간 디자인 - 가설 구조물의 보와 기둥의 Grid를 활용한 공간 디자인 -」, 『숙명 디자인학연구』21, 92-99쪽

(6) 자투리 화단형

대상 자투리 공간이 도로와 인도, 도로와 건물, 인도와 건물에 접해 있을 경우 면적, 형태, 입지 등과 상관없이 자투리 화단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지역은 보차분리 시설로 플랜트 등을 이용한 자투리 화단 도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투리 공간에 화단이 많이 조성되는 상황이지만 자투리 공간의 위치에 따라 자투리 화단의 기능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은 보차분리가 가능한 물리적 경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에서는 화단을 가로수 등과 연계한 다층적 보행 경관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자투리 화단은 가장형으로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지역에 LID 기법을 적용하여 도심의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자투리 화단형 녹화는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심미적 기능을 고려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성 방법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도 쾌적하게 관리된 녹색 화단을 위해 다양한 식물 소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표 2〉 자투리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

고려 요소	شط터형	텃밭형	경관형	비오톱형	주차장형	화단형
입지 (250m)	내·외부	내·외부	내·외부	내·외부	내·외부	내·외부
면적	100㎡이상	100㎡이상	30~100㎡	30~100㎡	10㎡이상	~30㎡
위치	인도	인도	건물, 인도	도로, 건물	도로, 건물	건물, 인도
형태	사각형	삼각, 사각형	삼각, 가장형	부정, 가장형	사각형	삼각, 가장형
경사	평지	평지	평지, 완경사	평지, 급경사	평지	평지, 완경사
토지소유	사유지일 경우 관리 및 운영 협약 필요					
주변토지이용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 상업	녹지지역	주거지역	주거, 상업
주민의견	شط터	텃밭	녹지	녹지	주차장	녹지
기타		쓰레기적치	쓰레기적치	우수생태계		

4. 맺음말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 공간이며, 이 공간의 공원녹지로의 활용이 수원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평공원, 도시 생생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 공원, 서울시 한뼘 동네 공원, 휴메트로 커뮤니티 파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성당 등의 사례를 통해 최근 자투리 공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공원 정책의 흐름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과 기업, 행정,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화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소공원 조성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타 사업들이 겪었던 과정이라 판단되나, 수원시에서는 다양한 자투리 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녹화유형을 제시하였다.

향후 제안된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자투리 공간 녹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유형별 사업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수원시에서는 시민들과 진행할 수 있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투리 공간 활용 프로젝트”, “자투리 공간 공모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성은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은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사업, 마을계획단 등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만들기」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동일한 대상지를 공유하지만 사업 성격, 주체 등이 달라 계획, 관리 등에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결합하여 마을 내 존재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 초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내는 것부터, 발견된 자투리 공간을 계획, 시공, 관리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투고일 2017.09.01 심사일 2017.10.18~11.01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김미나, 2008, 「경제 특성에 의한 자투리 공간의 디자인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김동원·김지훈·강정은, 2016(a), 「Huff 모형을 활용한 도시공원의 공급 적정성 평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국토연구』90, 71-83쪽
- 김은정·김지훈·김동원, 2016(b), 「공급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신규 도시공원 입지 분석: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19(3), 87-102쪽
- 김주화·맹지수·윤희수, 2015, 「도심 속 가설 주차 구조물을 이용한 컨테이너 모듈 형태의 운동, 놀이, 휴식의 공간 디자인 - 가설 구조물의 보와 기둥의 Grid를 활용한 공간 디자인 -」, 『숙명디자인학연구』21, 92-99쪽
- 김현·김예성·이다솜·김지엽, 2015, 「도시공원 이용권 분석을 통한 수원시 공원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43(2), 114-124쪽
- 김형준·정성관·이우성, 2011, 「도시공원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을 통한 공급적정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39(4), 18-27쪽
- 박영춘·권용석, 2003, 「중심지역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15(2), 113-126쪽
- 백나영, 2002,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진·임종훈,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37, 89-99쪽
- 성현찬·이양주, 2012, 「신·구시가지의 도시공원 불균형 분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15(3), 1-15쪽
- 손승우·안동만, 2013, 「도시공원 서비스권역 내·외 이용인구 정밀 분석-대구광역시 근린공원, 주민등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41(5), 9-18쪽
- 신명·최춘웅, 2011, 「도심 주거지역의 자투리땅(mini-lot) 발생 현황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서울 4곳 주거 전용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27(10), 147-154쪽
- 여운상, 2009, 「방치된 국공유 자투리땅, 공원으로」, 『BDI정책포커스』48, 부산발전연구원
- 오규식·정승현, 2005, 「GIS 분석에 의한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 『국토계획』40(3), 189-203쪽

- 이대회, 2017, 「보도 공간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기법 테스트베드의 특성 및 유출저감 효율 분석, 투수블록, 수직침투관, 빗물저류조를 대상으로」, 『한국수처리학회지』25(1), 79-89쪽
- 이동관·조세환, 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도시농업 유형 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44(6), 40-50쪽
- 이동현·이경주, 2010, 「부산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13(1), 164-172쪽
- 정지호, 2011,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효자·정지석·최무혁, 2002, 「물리적 환경요인에 의한 자투리땅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22(1), 231-234쪽
- NSW, 2010, “*Recreation and Open Space Planning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New South Wales Government
- Oh, K. and S. Jeong, 2007,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parks using GI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2(1-2), pp.25-32
- SDUDE, 2006, “Landschafts programmeinschließlich Artenschutzprogramm 1994”,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ABSTRACT

Park and Greenery Services Analysis and mini-lot Greening Strategy in Suwon City

Song, Wonk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ark service in the city by making mini-lot, as small scale public plots, to type of parks and green spaces. We surveyed underserved areas of parks and greenery services in Suwon city, and studied the use of the spaces. The underserved areas in Suwon city are approximately 19.2%, especially 4 dong in Gwonseon-gu are the most vulnerable areas. 50 mini-lots in the non-serviced districts are average 10~30m². They are located between road and building and have long and triangular shaped in most. Currently, they are used in flower bed regardless of the type. we suggested 6 greenery strategies (park, vegetable garden, landscape, biotope, parking lot, and flower bed) that could be applied in Suwon city through case study of small scale public plots. It is important to link organically among the business, administrative and civil society for sustainable project.

Key Words : Mini-lot, Park service, Public participation, Greenery strategy

수원시민의 친환경교통 정책 수용에 대한 질적 연구

김규환* · 이석진**

목 차

- | | |
|-----------------------------|---------------------------------|
| 1. 머리말 | 2) 연구 결과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최종 코딩 프레임 |
| 2) 연구 방법 | (2) 빈도분석 결과 |
| (1)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 (3) 상관관계 분석결과 |
| (2) 분석방법 | (4) 트램 및 전기차 정책에 대한 시민
들의 반응 |
| 2. 본론 | (5)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
| 1)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교통
정책 | (6) 생태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
| (1)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 3. 맺음말 |
| (2) 수원시 친환경교통정책 | |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교통정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Urban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교신저자(E-mail: therute1@uos.ac.kr, Tel:010-4047-4851)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박사과정(A PhD candidate, College of Engineeri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시청 게시판에서 트램, 전기차, 자전거, 생태교통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남긴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하위코드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최종 코딩 프레임의 최상위 코드는 정책 수용, 정책 수용 불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이다. 교통수단별로 트램과 전기차는 공공의 활발한 외부활동이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 비효율적 조직구조는 시민들의 정책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전거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관계자 간 소통, 환경관련 활동에 참가할 경우 시민들이 정책을 수용하는 반면에 불편한 자전거 도로 환경은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으로 자전거 도로 위험요소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에서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 관계자 간의 소통,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반면에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 공공행정의 문제, 거주민 생활에 피해가 있었을 때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와 생태교통의 경우 초기에는 정책 수용 코드가 많은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수원시는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이 친환경교통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수원시, 친환경교통정책, 콘텐츠 분석, 질적내용분석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왔다. 유현준(2015)¹⁾은 도시의 진화를 생명의 진화에 빗대어 설명한다. 상하수도가 도시 곳곳에 공급이 되면서 순환계 역할을 하고, 그 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신경계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영장류 단계에 와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는 유기체 진화의 최종 단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소비관점에서 진화의 정도를 보면 아직도 고대 도시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데, 즉 현대 도시는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에너지 과소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UN기후변화협약의 주요 아젠다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가 언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지진에 의한 원전안전 등 에너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5년 12월 제21차 회의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당사국의 책임강조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장려하였다.²⁾ 즉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에 있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후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층적 관점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층적 관점은 사회 기술 환경(Socio-technical landscape), 레짐(Regime), 니치(Niche)로 구성된다. 여기서 환경은 일종의 메타포로 외부적 요인이다. 환경 아래 기존 레짐이 새로운 레짐으로 변화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전환에 있어 혁신을 일으키는 맹아가 바로 니치이며, 여기서 니치는 기술, 정책, 사업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급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장소로 레짐을 안정

1)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2) 이태화, 2016,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공간과 사회』55, 48-78쪽

적으로 유지하는 시장의 힘과 사회 문화적 규칙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³⁾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즉, 도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시민참여와 에너지 공동체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대표하는 사례로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 노원구 미니 태양광 사업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정책 혹은 사업이 도시 에너지 전환을 가져오는 니치로 간주하고, 니치가 레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니치의 성장에 있어 방해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⁴⁾ 이러한 시민참여의 형태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차원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니치로 보고 에너지 운동의 지역적 확산의 조건을 살펴본 연구도 있으며,⁵⁾ 파리 협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의 세부정책을 하나씩 살펴본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⁶⁾ 그 외 도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 Hargreaves et al(2013)은 영국의 지역에너지와 풀뿌리 혁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살펴봐왔으며, 그 결과 니치를 개발하고 견고히 하는데 있어 이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연결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니치에서 개발하는 활동과 정보공유를 도우면서, 후속 혁신 프로젝트 진행 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고재경·주정현(2014)은 네트워킹, 인적 물적 자본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와 외부 시스템 간, 커뮤니티 단체들 간 네트워킹 활용 능력, 재정이나 기술 등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조직이나 단체의 내부 외부 역량 형성을 위한 교육 훈련, 컨설팅, 기술적 지원, 인식 증진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대부분 도시 에너지 전환

3) 윤순진·심혜영, 201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51, 140-178쪽

4) 이정필·한재각, 2014, 「영국 에너지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18(1), 73-112쪽

윤순진·심혜영, 201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51, 140-178쪽

백종학·윤순진, 2015,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미니태양광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도시연구』16(3), 91-111쪽

5) 안정배·이태동, 2016,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20(1), 105-141쪽

6) 이태화, 2016, 앞의 논문, 48-78쪽

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 정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에 의한 햇빛발전소, 에너지자립 마을 만들기, 에코마일리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미니 태양광 산업이 서울의 에너지 기후정책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니치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향상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신 기후체제에서 도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여러 니치전략들이 시민들에 의해 강화된 다며,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거치며 새로운 도시 에너지 레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⁷⁾ 하지만 이를 통해 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대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니치로 간주되는 도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정책이나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조건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도시를 살아가는 여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도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수원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아래 자동차 위주의 교통에서 친환경 교통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근저에는 새로운 교통기술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수원시는 2013년부터 수원시민들과 함께 생태교통의 일환으로 차없는 거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트램, 전기차, 무인대여 자전거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 교통문화에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치 세계흐름의 변화 속에서 수원시가 생태교통 정책이나 새로운 교통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교통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도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사업, 기술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지자체의 관행을 볼 때 사업진행 여부가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경제적 분석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정책이나 세부 사업의 착수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 에너지 전환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7) 이태화, 2016, 앞의 논문, 48-78쪽

윤순진·심혜영, 2015, 앞의 논문, 140-178쪽

백종학·윤순진, 2015, 앞의 논문, 91-111쪽

고재경·주정현, 2014, 「유럽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 연구」, 『환경정책』22(2), 101-135쪽

고려가 이루어 질 때 트램, 전기차, 생태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 정책이 시민의 삶에 제대로 정착되어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 친환경 교통정책 현황과 함께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트램, 전기차, 생태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체화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움직임을 가로막는 방해요인과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생태교통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연구의 주요자료는 수원시 열린시장실 시민과의 소통의 ‘시장님 보세요’와 ‘칭찬합시다’의 텍스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장님 보세요’는 시의 정책에 대한 민원이며, ‘칭찬합시다’는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칭찬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 자료는 수원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직접 경험하며 나타나는 사고 및 행동의 변화, 학습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교통 정책 및 기술 활용과 시민들 체감사이의 간격이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QCA(Qualitative content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수원시의 민원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내용분석은 정량적 내용분석(QNCA)과 정성적 내용분석(QLCA)로 나눌 수 있는데, 정량적 내용분석이란 텍스트 특성을 체계적, 객관적,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 정성적 내용분석은 텍스트 의미를 체계적, 맥락적으로 해석 또는 개념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는 핵심어와 같은 단순 특성 기술이 아닌 의미와 해석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정성적 내용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인터뷰, 구술, 영상, 문헌자료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원시의 친환경교통정책 관련 민원 및 칭찬하는 텍스트는 문헌자료에 속한다.

정성적 내용분석에는 두 가지 코딩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론기반 코딩이다. 이는

상위코드가 이미 주어져 자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하위코드를 찾아내고, 하위코드와 상위코드를 다듬어 가는 작업이다. 상위코드는 이론, 선행 작업, 상식, 논리에 의해 정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딩프레임은 기존 코드 간 관계에 대해 가설 검증에 사용되거나, 기존 코드에 새로운 정의를 찾아내는 수준에서 섬세화를 하는데 활용되거나, 기존 코드의 하위 코드들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자료기반 코딩이다. 자료기반 코딩은 미리 주어진 상위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기반 코딩과 차이점이 있다. 자료를 기반으로 하위코드들을 생성하고 이 하위코드들로부터 개념화, 추상화 과정을 통해 상위코드를 구성한다.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정리하며 연구의 질문을 설정하였다.

둘째, 전체 자료 중 11개의 텍스트를 랜덤하게 추출하였다. 그 후 이에 대하여 2명의 연구자가 코딩단위를 설정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코딩단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셋째, 11개의 텍스트에 대하여 파일럿 코딩을 수행하였으며, 오픈코딩 방식을 활용하였다. 코딩 후 두 연구자의 코드들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예비적 코딩프레임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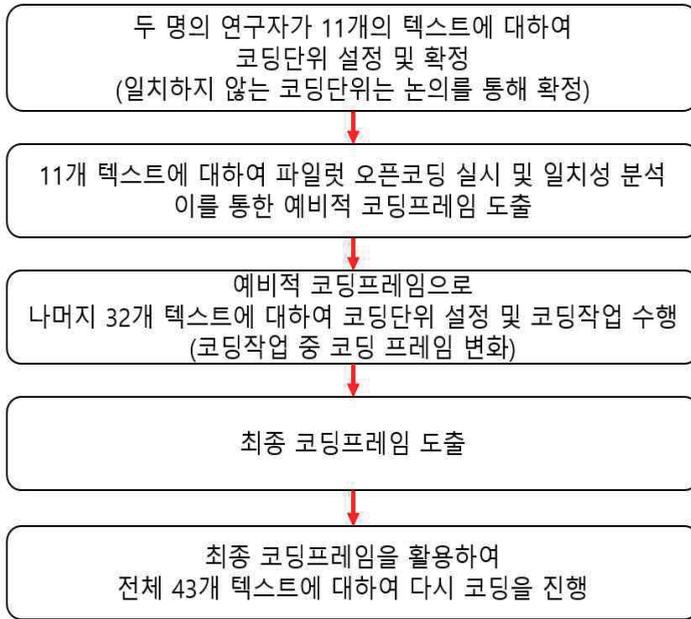
넷째, 예비적 코딩프레임을 활용하여 나머지 32개 텍스트에 대하여 코딩단위 설정 및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 예비적 코딩프레임에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적 코딩프레임은 변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종 코딩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최종 코딩프레임을 가지고 전체 43개의 텍스트에 대하여 다시 코딩작업을 수행하여 도출된 코딩 프레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엑셀과 STATA를 활용하여 코드별 빈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8) Schreier, M, 201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Publications"



〈그림 1〉 콘텐츠 분석 수행 절차

2. 본론

1)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교통정책

(1)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수원시는 과거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지리적 환경문제를 배태하였으며, 이를 크게 자연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에너지 등의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⁹⁾ 특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도시의 생활방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 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와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고도성장에 초점을 맞춘 도시 관리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민선 5기 수원시장(염태영)이 취임 후 수원시를 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3대 목표(기후변

9) 수원시, 2014, 『2014 수원시 환경백서』

화에 대응하는 도시, 생태적인 녹색환경도시,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 도시)를 세워 추진하였다.¹⁰⁾

국제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감축의무 부과에 대응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를 수립하여 각 지자체 수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시범 기초지자체에 해당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¹¹⁾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교통수단 도입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¹²⁾

2015년에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선진국에게만 적용되었던 기존의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195개국 전체 국가로 구속력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는 변화하는 국제적 여건에 대처하여 중장기 계획인 <수원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환경보전계획을 마련하여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양·지하수환경, 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보전관리, 에너지 관리(기후변화)의 8개의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¹³⁾

비전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도시 수원		
	▲		
목표	자연친화적인 환경도시	기후변화에 안전한 저탄소 녹색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도시
추진전략	-자원순환체계 구축 -탄소흡수원 확충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확충 -녹색교통체계구축 -에너지자립추진	-시민참여기반구축 -환경교육기반조성 -녹색생활 실천활성화

〈그림 2〉 수원시 환경보전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출처: 수원시 홈페이지, 2017)

- 10) 허태욱, 2012, 「수원시 환경수도 (저탄소녹색도시) 로의 전환과 환경 거버넌스」, 『아세아연구』 55(1), 67-98쪽
- 11) 안윤정·강영은·박창석·김호걸, 201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특성 및 개선 방향」, 『환경영향평가』25(4), 296-306쪽
- 12) 허태욱, 2012, 앞의 논문, 67-98쪽
- 13) 수원시, 2016, 『수원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수원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녹지 확충, 녹색교통체계 구축, 에너지 자립의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에 접근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도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유료충전 사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 등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¹⁴⁾

(2) 수원시 친환경교통정책

저탄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의 한 축인 ‘녹색교통체계 구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친환경교통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녹색교통¹⁵⁾은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 “매우 적은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의 형태”를 뜻하며, 그 예로 도보, 자전거, 녹색 차량, 태양, 전기, 수소 등을 사용한 교통수단 및 체계를 들 수 있다.¹⁶⁾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교통 정책을 분류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린카, 지능형 교통시스템, 철도 등 교통효율 개선, 그린웨이(자전거 인프라 구축), 대기환경 개선의 5가지 정책이 추가 되고 있다.¹⁷⁾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녹색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표 1〉 녹색교통 정책 내용 및 시행 여부(이재준, 2011 수정)

	주요 정책 내용	정책 시행 여부		
		정부 차원	경기	수원
녹색교통	그린카(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	◎		◎
	지능형 교통시스템		◎	
	철도 등 교통효율 개선	◎	◎	◎
	그린웨이(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	◎
	대기 환경 개선			◎

14) 수원시, 2016, 앞의 책

15) 녹색교통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가능 교통과 일치한다는 견해(한상진, 2011), 녹색교통이 지속가능발전에 내포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한중학, 2010) 등 광의의 녹색교통 개념도 존재한다.

16) 이원규·김만경·장영환, 2012,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녹색교통 정책 추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1~13쪽

17) 이재준·이원호·김도영, 201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45(2), 295-308쪽

수원시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복지 및 안전 향상’,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교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정하였다.¹⁸⁾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카셰어링제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¹⁹⁾ 생태교통환경 조성, 경유자동차 저탄소화, 대중교통 활성화, 공용자전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²⁰⁾

〈표 2〉 수원시 친환경 교통 정책 방향과 사업예시

분류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정책 방향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복지 및 안전 향상
사업 예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카셰어링제 운영	철도망 확충
	경유자동차 저탄소화 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저탄소차량 이용 확대	어린이·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그동안 수원시가 추진해온 녹색교통 정책을 정리해보면 수원시의 녹색교통의 전략 및 정책 방향은 탄소발생 감소 및 무탄소 교통수단과 관련된 ‘친환경 기술 분야’와 대중교통체계 편리성 증진 및 교통 복지와 관련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수원시 녹색교통 정책은 협의의 녹색교통 개념에 친환경 대중교통 개편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경제적 개념을 추가한 광의의 녹색교통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연계와 관련된 사업위주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의 녹색교통 개념에 가까워졌다.

본 연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원시 정책에 반영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수원시의 도입 추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가 있다. 천연가스 버스는 기존보다 연비가 개선된 CNG하이브리드(전기+CNG)버스를

18) 박래헌, 2013, 「수원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면전차 도입현황」 『철도저널』16(5), 16-19쪽

19) 수원시, 2014, 앞의 책

20) 수원시, 2016, 앞의 책

경기도 소속 지자체 중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시작 단계로 민간에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수원시, 2016).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노면 위에 설립한 궤도를 운행하는 도시철도 교통수단으로 수원시는 수원역과 광교산을 잇는 노선으로 트램 건설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²¹⁾ 수원시에 도입 예정인 트램은 무가선 트램²²⁾으로 전기선이 필요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신교통수단이며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²³⁾ 트램은 대중교통의 확장이라는 측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기선이 없이 배터리로만 운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전거는 무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 수원시는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공영자전거 제도를 운영, 자전거 도로 조성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술(IoT)와 GPS를 적용한 공영자전거 대여 및 반납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3세대 공공자전거로 칭하며, 파손·분실·도난 등의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의 공공자전거는 환경 및 기후변화정책의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²⁴⁾

2) 연구 결과

(1) 최종 코딩 프레임

총 43개의 텍스트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텍스트 추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청 홈페이지의 '시장님 보세요'와 '칭찬합시다'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올라온 게시물을 사용하였다. 검색방법은 전기차, 트램, 자전거, 생태교통의 4개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으로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후 비록 키워드는 포함되었지만,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텍스트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43개의 텍스트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선택되었다. 질적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되어야 하지만, 본

21) 안정화, 2017, 「신교통수단 (트램) 과 도시교통 정책방향」, 『국토』428, 20-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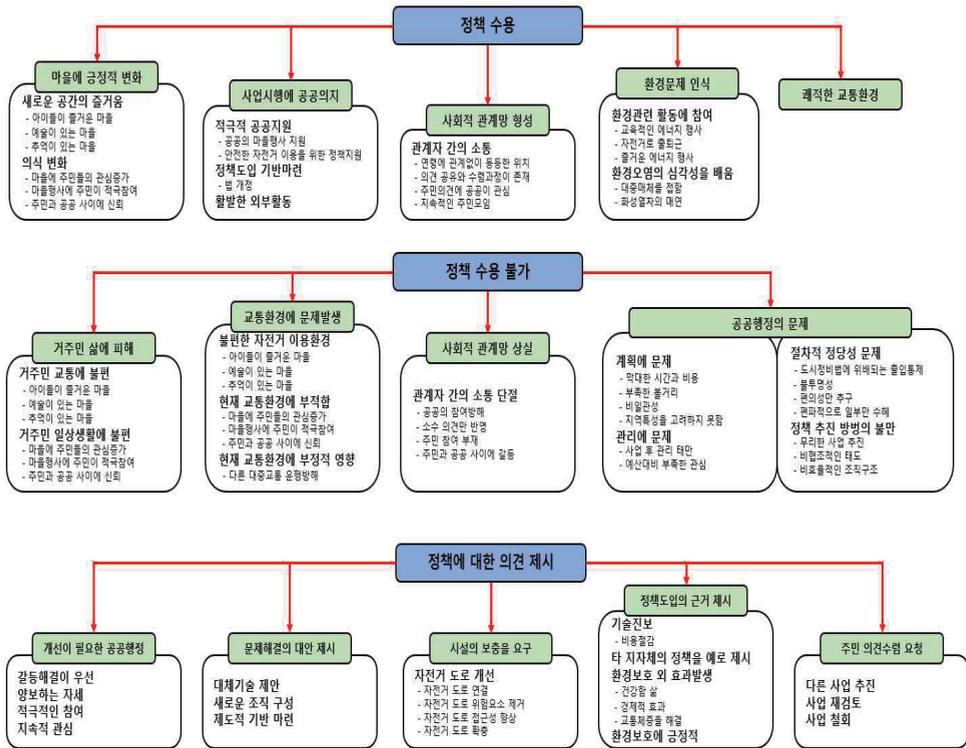
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현대로템, 코캠 등의 기관이 참여한 국가 R&D 프로그램을 통해 무가선 저장트램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3) 교통과학연구원, 2017, 『무가선 저장트램 국내·외 추진사례』

24) 신상범, 2016, 「한국 지방 도시 공공자전거 정책의 도입과 지속 요인」, 『대한지리학회지』 51(1), 89-108쪽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도출된 최종 코딩 프레임을 살펴보면, 코드의 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4단계 코드가 최상위 코드이며, 3단계 코드는 상위 코드, 2단계 코드는 중위 코드, 1단계 코드는 하위 코드이다. 콘텐츠 분석 결과 정책 수용, 정책 수용 불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가 4단계 코드로 나타났다. 정책 수용의 3단계 코드로는 마을에 긍정적 변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환경문제 인식, 쾌적한 교통환경이 나타났다. 정책 수용 불가의 3단계 코드로는 거주민 삶에 피해,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사회적 관계망 상실, 공공행정의 문제가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의 3단계 코드로는 개선이 필요한 공공환경,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시설의 보충을 요구, 정책수용의 근거 제시, 주민 의견수렴 요청으로 나타났다. 각 3단계의 코드들도 2단계와 1단계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최종 코딩 프레임

(2) 빈도분석 결과

엑세스(ACCESS) 2016을 활용하여 코딩한 결과물에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코드의 횟수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케이스와 교통수단별로 분류하여 코드별 횟수를 살펴보았다.²⁵⁾ <표 3>을 보면 4단계 코드 중 가장 많이 나온 코드는 ‘정책 수용 불가’로 총 87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수용’이 62번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는 총 51번으로 나타났다.

<표 3> 4단계 코드 빈도분석

4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수용	62
정책 수용 불가	87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51

<표 4>를 보면 전체 3단계 코드 중 ‘공공행정의 문제’가 3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4단계 코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수용’에서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가 총 25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책 수용 불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행정의 문제’가 3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환경에 문제발생’과 거의 유사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구성하는 상위 코드들은 그 빈도수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 3단계 코드 빈도분석

4단계 코드	3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수용	마을에 긍정적 변화	13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25
	사회적 관계망 형성	18
	쾌적한 교통환경	1
	환경문제 인식	5

25) 1단계 코드는 부록으로 정리

4단계 코드	3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수용 불가	거주민 삶에 피해	10
	공공행정의 문제	33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32
	사회적 관계망 상실	12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11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13
	시설의 보충을 요구	10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	12
	주민 의견수렴 요청	5

〈표 5〉를 보면 전체 2단계 코드 중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24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3단계 코드와 함께 생각해보면 앞서 ‘정책 수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사업시행에 공공의지’에서는 ‘적극적 공공지원’이 18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수용 불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공공행정의 문제’에서는 ‘정책 추진 방법에 불만’이 1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통환경에 문제발생’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2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에서는 ‘새로운 조직 구성’이 5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정책 수용’과 ‘정책 수용 불가’ 모두 사업시행에 있어 공공행정과 관련된 코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이에 대한 개선으로 ‘공공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갈등해결’, ‘양보하는 자세’ 등 다양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표 5〉 2단계 코드 빈도분석

4단계 코드	3단계 코드	2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수용	마을에 긍정적 변화	의식 변화	9
		새로운 공간의 즐거움	4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적극적 공공지원	18
		활발한 외부활동	6
		정책도입 기반마련	1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계자 간의 소통	18
	쾌적한 교통환경	쾌적한 교통환경	1
	환경문제 인식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	3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배움	2
	정책 수용 불가	거주민 삶에 피해	거주민 교통에 불편
거주민 일상생활에 불편			5
공공행정의 문제		정책 추진 방법의 불만	13
		계획에 문제	9
		절차적 정당성 문제	8
		관리에 문제	3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	24
		현재 교통환경에 부적합	7
		현재 교통환경에 부정적 영향	1
사회적 관계망 상실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	12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적극적 참여	6
		갈등해결이 우선	2
		지속적 관심	2
		양보하는 자세	1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새로운 조직 구성	5
		대체 기술 제안	4
		제도적 기반 마련	4
	시설의 보충을 요구	자전거 도로 개선	10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	4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	4
		기술진보	3
		환경보호에 긍정적	1
	주민 의견수렴 요청	다른 사업 추진	2
		사업 재검토	2
		사업 철회	1

교통정책 수단별로 구분한 <표 6>을 살펴보면 트램과 전기차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가 주로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시행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에 수원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램의 경우 '정책 수용'보다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원 시민들이 트램과 관련된 교통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와 생태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초기연도에서 정책 수용 불가보다 정책 수용 코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수용보다 정책 불가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초반에는 수원시 자전거 및 생태교통 정책에 기대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자전거의 경우 초기에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도입을 칭찬하는 글이 많았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거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교통 정책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마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관심 부재, 관리 태만, 주민 삶의 피해 등을 호소하는 글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친환경교통 정책의 수단별 케이스 및 빈도수

연도	교통수단	케이스	정책수용불가 빈도수	정책수용 빈도수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빈도수
2015	트램	2번	10	.	7
2015		8번	.	4	1
2016		3번	5	.	4
2016		33번	4	.	2
2017		1번	.	1	.
2016	전기차	38번	.	1	5
2017		7번	.	.	6
2012	자전거	30번	.	2	1
2012		31번	.	1	1
2012		32번	.	1	.
2013		42번	.	2	.
2014		29번	.	2	.
2014		39번	3	1	1

연도	교통수단	케이스	정책수용불가 빈도수	정책수용 빈도수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빈도수
2015		24번	3	.	1
2015		25번	3	.	1
2015		26번	4	.	2
2015		27번	4	.	4
2015		28번	.	2	.
2016		23번	2	.	2
2017		19번	.	.	1
2017		20번	.	.	1
2017		21번	3	.	1
2017		22번	3	.	2
2012		생태교통	18번	.	2
2013	10번		.	3	.
2013	11번		.	4	.
2013	12번		.	3	.
2013	16번		.	3	.
2013	17번		.	1	.
2013	40번		1	9	2
2013	41번		4	.	.
2014	15번		.	4	.
2015	5번		4	.	.
2015	14번		.	6	.
2015	35번		5	.	1
2015	36번		8	.	.
2015	37번		4	.	2
2016	4번		3	.	1
2016	6번		6	.	1
2016	9번		.	4	.
2016	34번		8	.	1
2017	13번		.	4	.
2017	43번		.	2	.

(3) 상관관계 분석결과

4단계와 3단계 코드만을 대상으로 코드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²⁶⁾

유의미한 값을 가진 결과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책 수용 불가는 '마을에 긍정적 변화'와 '사업시행에 공공의지'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수용 불가의 하위 변수인 3단계 코드들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수용 불가는 '문제해결의 대안제시'와 '주민의견 수렴요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수용'은 '공공행정의 문제'와 '교통환경에 문제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정책 수용의 하위 코드와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수용과 '시설의 보충을 요구'하는 코드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용 불가의 하위 코드인 '공공행정의 문제'와 '교통환경에 문제발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구성하는 하위코드와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단계 코드 중 서로 다른 성격의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시행에 공공의지'는 '공공행정의 문제'와 '교통환경에 문제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민 삶에 피해'와 '주민의견 수렴요청(철회, 재검토, 다른 사업 추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행정의 문제'는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환경에 문제발생'은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및 '시설의 보충을 요구'하는 코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상실'은 '주민의견 수렴요청'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26) 상관관계 표는 부록에 제시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코드명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정책 수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거주민 삶의 피해, 공공행정의 문제,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사회적 관계망 상실 •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주민의견 수렴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긍정적 변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정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긍정적 변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공공행정의 문제,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 시설의 보충을 요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의 문제,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정책도입의 근거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마을에 긍정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의 문제,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거주민 삶에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요청 	
공공행정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상실 •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 시설의 보충을 요구 	
사회적 관계망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요청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도입의 근거제시 	

(4) 트램 및 전기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트램과 전기차 정책 수용의 〈표 8〉를 보면 1단계 코드로 화성열차의 매연이 1건으로 나타났다. 2단계 코드에서 활발한 외부활동이 3건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3단계 코드인 사업시행에 공공의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곧 수원시가 트램 및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 공공의 의지가 있을 때 시민들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번 케이스에서는 트램 도입을 위한 수원시의 활발한 정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 환경요

염을 직접 경험했을 때 정책 수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번의 케이스에서는 부모가 아이들과 화성열차를 탈 때 열차의 매연을 경험한 후 전기차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수원시 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책 수용의 코드와 빈도(트램 및 전기차)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6)	사업시행에 공공의지(4)	정책도입 기반마련(1)	법 개정(1)
		활발한 외부활동(3)	
	환경문제인식(1)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배움(1)	화성열차의 매연(1)
	쾌적한 교통환경(1)		

* ()는 빈도수

정책 수용 불가의 〈표 9〉를 보면 2단계 코드로 공공행정의 문제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책 수용의 사업시행에 공공의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업시행에 공공의지와 공공행정의 문제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업시행에 공공의지가 있을 때 공공행정의 문제가 줄어들어 시민들은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공행정의 문제의 1단계 코드를 보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3건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조직구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즉 트램과 전기차 도입에 있어 수원 시민들이 수원시가 보유한 시간, 인력, 예산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직 적절한 대응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수용 불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단계 코드 중 현재 교통환경에 부적합에서 기존 교통체계 정비의 어려움이 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수원시민 중 일부는 트램과 전기차 도입이 현재 수원시가 보유한 교통 인프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또한 정책 수용 불가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와 빈도(트램 및 전기차)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불가 (19)	공공행정의 문제(11)	계획에 문제(5)	막대한 시간과 비용(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함(2)
	교통환경에 문제발생(8)	현재 교통환경에 부적합(7)	비협조적인 태도(1)
			비효율적인 조직구조(5)
	현재 교통환경에 부정적 영향(1)	기존 교통체계 정비 필요(2)	
		기존 교통체계 정비의 어려움(5)	
		다른 대중교통 운행방해(1)	

* ()는 빈도수

정책 수용과 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트램과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공의 활발한 외부활동 등이 정책 수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조직구조와 기존 교통체계 정비의 어려움 등이 정책 수용 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수용 불가에 해당하는 시민 중 몇 명은 트램 도입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희망하는 사례도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표 10〉을 보면 3단계 코드로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적극적 참여가 6번으로 나타났다며, 그 외에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체 기술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조직 구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하위 코드로 나타났다.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의 하위 코드로 기술진보,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드는 경우,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시의 시민들이 트램과 전기차 도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책 도입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수집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코드와 빈도(트램 및 전기차)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25)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6)	적극적 참여(6)	
	문제해결의 대안제시(12)	대체 기술 제안(4)	
		새로운 조직 구성(5)	
		제도적 기반 마련(3)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7)	기술진보(3)	비용절감(1)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2)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2)		경제적 효과(1)	

* ()는 빈도수

(5)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자전거에서도 트램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표 11〉을 보면 사업시행에 공공의지가 정책 수용의 3단계 코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것의 하위 1단계 코드인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이 5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42번의 케이스에서는 아이들과 에너지 행사에 참여 후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원시 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의 정책지원 및 관심 그리고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때 수원시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정책 수용의 코드와 빈도(자전거)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11)	사업시행에 공공의지(6)	적극적 공공지원(6)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5)
	사회적 관계망 형성(2)	관계자 간의 소통(2)	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2)
	환경문제 인식(3)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3)	교육적인 에너지 행사(1)
			자전거로 출퇴근(1)
			즐거워 에너지 행사(1)

* ()는 빈도수

정책 수용 불가의 <표 12>를 보면 2단계 코드인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24건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끊어지거나 부족하거나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자전거 반납시설의 부족 등의 코드들이 빈번히 나타났다. 즉 수원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코드들이 자전거 이용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1번 케이스에서 자전거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구경시켜주고 싶지만 자전거 반납 시설이 부족하여 원래 장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불편함과 22번 케이스에서는 끊어진 자전거 도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이용에 위험이 많다는 사례도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자전거 도로 이용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도시에만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어 기존 구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에 대한 차별을 느끼는 사례도 1건으로 나타났다.

<표 12>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와 빈도(자전거)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불가 (25)	공공행정의 문제(1)	절차적 정당성 문제(1)	편파적으로 일부만 수혜(1)
	교통환경에 문제발생(24)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24)	끊어진 자전거 도로(5)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전거 도로(2)
			도난에 취약한 자전거 주차장(2)
			부족한 자전거 도로(4)
			부족한 자전거 반납시설(3)
		위험요소가 많은 자전거 도로(8)	

* ()는 빈도수

정책 수용과 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관계자 간 소통, 환경관련 활동이 정책 수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끊어진 자전거 도로, 위험요소가 많은 자전거 도로 등의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정책 수용 불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으로 <표 13>을 보면 자전거 도로 연결, 위험요소 제거 등의 상위 코드인 자전거 도로 개선 코드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통환경에 문제

발생이 문제해결의 대안 및 시설의 보충을 요구하는 코드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공공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2건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책도입의 근거제시로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드는 경우가 2건, 환경보호에 긍정적이 1건,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으로 건강 및 교통체증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도별 <표-6>에서 초기에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도입의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속적인 공공의 관심을 요구하거나, 시설의 보충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나타났다.

<표 13>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코드와 빈도(자전거)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18)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2)	지속적 관심(2)		
	문제해결의 대안제시(1)	제도적 기반 마련(1)		
	시설의 보충을 요구(10)	자전거 도로 개선(10)	자전거 도로 연결(4)	
			자전거 도로 위험요소 제거(2)	
			자전거 도로 접근성 향상(1)	
			자전거 도로 확충(3)	
	정책도입의 근거제시(5)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2)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2)	건강한 삶(1)
			환경보호에 긍정적(1)	교통체증을 해결(1)

* ()는 빈도수

(6) 생태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생태교통 마을조성에 대한 정책 수용을 보여주는 <표 14>의 1단계 코드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로 등장하는 코드를 위주로 살펴보면, 공공의 마을행사 지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이 7건, 의견 공유와 수렴과정이 존재가 6건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의 지원 및 의견 공유와 수렴과정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생태교통 마을조성 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주민과 공공 사이에 신뢰형성이라는 코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9번, 10번, 11번 사례에서 마을에 대한 공공지원 및 주민과 주민 또는 주민과 공공 사이에 소통을 위한 관계망 형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마을에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혹은 기존 공간의 성격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시민들이 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3번, 14번, 43번 사례를 통해 마을이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추억이 있는 마을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정책 수용의 코드와 빈도(생태교통)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45)	마을에 긍정적 변화(11)	새로운 공간의 즐거움(3)	아이들이 즐거운 마을(1)
			예술이 있는 마을(1)
			추억이 있는 마을(1)
		의식 변화(8)	마을에 주민들의 관심증가(3)
			마을행사에 주민이 적극참여(4)
			주민과 공공 사이에 신뢰(1)
	사업시행에 공공의지(15)	적극적 공공지원(12)	공공의 마을행사 지원(12)
		활발한 외부활동(3)	
	사회적 관계망 형성(16)	관계자 간의 소통(16)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위치(1)
			의견 공유와 수렴과정의 존재(6)
			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7)
			지속적인 주민모임(2)
환경문제 인식(1)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배움(1)	대중매체를 접함(1)	

* ()는 빈도수

정책 수용 불가를 보여주는 〈표 15〉의 1단계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들이 다양하고 빈도도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 부재가 8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것의 상위 개념인 관계자 간의 소통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정책 수용으로 연결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생태교통 마을은 자전거, 트램, 전기차와 달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정책 수용 혹은 불가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적 관계망 상실이 공공행정의 문제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교통의 정책 수용 불가에서도 공공행정의 문제가 21건으로 정책 수용 불가의 3단계 코드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단계 코드를 기준으로 계획에 문제가 4건, 관리에 문제가 3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7건, 정책 추진 방법의 불만이 7건으로 나타나 생태교통 마을조성의 사업진행 방식에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정책과 달리 시민들의 저항이 더 거세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는 행정이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의견이 3건, 정책 추진 방법의 불만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3건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불만사항 중 사업추진에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 마을조성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교통 정책과 달리 거주민의 교통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것도 35번과 37번의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5〉 정책 수용의 코드와 빈도(생태교통)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 수용 불가 (43)	거주민 삶에 피해(10)	거주민 교통에 불편(5)	보행에 비좁은 도로(2)
			부족한 주차공간(2)
			비좁은 주차공간(1)
		거주민 일상생활에 불편(5)	거주민 일상생활에 불편(1)
			관광으로 일상생활 침해(2)
			주민 삶의 희생을 요구(2)
	공공행정의 문제(21)	계획에 문제(4)	부족한 볼거리(1)
			비일관성(1)
		관리에 문제(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함(2)
			사업 후 관리 태만(2)
		절차적 정당성 문제(7)	예산대비 부족한 관심(1)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 출입통제(1)
			불투명성(2)
			편의성만 추구(3)
		정책 추진 방법의 불만(7)	편파적으로 일부만 수혜(1)
			무리한 사업 추진(3)
	비협조적인 태도(2)		
	사회적 관계망 상실(12)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12)	해결되지 않는 민원(2)
			공공의 참여방해(1)
			소수 의견만 반영(2)
			주민 참여 부재(8)
주민과 공공 사이에 갈등(1)			

* ()는 빈도수

정책 수용과 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생태교통 마을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공의 적극적 지원과 관계자 간의 소통 및 마을의 변화가 정책 수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 공공의 계획·관리·절차의 문제, 거주민의 교통과 생활에 피해가 정책 수용 불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으로 <표 16>을 보면 주민 의견수렴 요청이 5건으로 나타났고, 다른 정책과 달리 사업 철회 혹은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갈등해결과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거주민 삶에 피해, 공공해정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 사실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철회, 재검토 및 다른 사업 추진의 의견으로 나타나며, 갈등해결과 양보를 위해서 관계자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코드와 빈도(생태교통)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8)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3)	갈등해결이 우선(2)	-
		양보하는 자세(1)	-
	주민 의견수렴 요청(5)	다른 사업 추진(2)	-
		사업 재검토(2)	-
		사업 철회(1)	-

* ()는 빈도수

3. 맺음말

본 연구는 수원시 친환경교통 정책인 트램, 전기차, 자전거, 생태교통을 대상으로 수원시에 접수된 민원과 칭찬합시다의 게시글을 활용하여 QCA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43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자료기반의 QCA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43개의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코딩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최상위 코드인 4단계 코드는 정책 수용, 정책 수용 불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로 분류되었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 코드인 3단계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정책 수용은 마을에 긍정적 변화,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환경문제 인식, 쾌적한 교통환경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용 불가의 3단계 코드를 살펴보면 거주민 삶에 피해,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사회적 관계망 상실, 공공행정의 문제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의

견제시의 3단계 코드로는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시설의 보충을 요구,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 주민의견 수렴요청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별 빈도분석 결과 트램과 전기차에서는 정책 수용보다 정책 수용 불가의 빈도 수가 더 많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글을 작성한 수원시민들이 트램과 전기차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친환경교통정책으로 트램과 전기차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걱정과 함께 관심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와 생태교통의 경우 자료를 기준으로 초기에는 정책 수용에 대한 코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 수용보다는 정책 수용 불가의 코드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수단별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텍스트를 활용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트램과 전기차에서는 공공의 활발한 외부활동이 시민들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시가 보유한 역량, 적합하지 않은 교통 인프라, 조직 간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시민들이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트램과 전기차에 대한 정책 수용 불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기 보다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 제도적 기반 마련, 대체 기술 등을 제안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관계자 간 소통, 환경관련 활동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끊어지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불편한 자전거 도로 환경이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으로 불편한 자전거 도로의 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도입으로 정책 수용코드가 많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 수용 불가 코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수원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자전거 이용이 환경과 그 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례도 나타났다.

생태교통에서는 공공의 적극적 지원, 관계자 간의 소통,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 공공행정의 문제, 거주민 교통과 일상생활에 피해가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정책과 달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른 정책과 달리 사업의 철회 재검토 등으로 나타나거나, 갈등해결 및 양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수용과 불가에 있어 관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수원시는 사업 추진 시 여러 주민과의 소통 통로를 조성하여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정책을 직접 경험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수원시 친환경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글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텍스트의 자료가 포화가 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수원시 친환경교통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고일 2017.08.30

심사일 2017.10.23.~10.31

게재확정일 2017.11.14

참고문헌

- 고재경·주정현, 2014, 「유럽 에너지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특징 연구」, 『환경정책』22(2), 101-135쪽
- 박래현·2013, 「수원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면전차 도입현황」, 『철도저널』16(5), 16-19쪽
- 백종학·윤순진, 2015,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미니태양광 사업과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서울도시연구』16(3), 91-111쪽
- 신상범, 2016, 「한국 지방 도시 공공자전거 정책의 도입과 지속 요인」, 『대한지리학회지』51(1), 89-108쪽
- 안정배·이태동, 2016,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20(1), 105-141쪽
- 안정화, 2017, 「신교통수단 (트램) 과 도시교통 정책방향」, 『국토』428, 20-26쪽
- 안윤정·강영은·박창석·김호걸, 201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특성 및 개선 방향」, 『환경영향평가』25(4), 296-306쪽
-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 윤순진·심혜영, 201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51, 140-178쪽
- 이재준·이원호·김도영, 201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45(2), 295-308쪽
- 이정필·한재각, 2014, 「영국 에너지전환에서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18(1), 73-112쪽
- 이원규·김만경·장영환, 2012,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녹색교통 정책 추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1-13쪽
- 이태화, 2016,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공간과 사회』55, 48-78쪽
- 허태욱, 2012, 「수원시 환경수도 (저탄소녹색도시) 로의 전환과 환경 거버넌스」, 『아세아연구』55(1), 67-98쪽
- 교통과학연구원, 2017, 『무가선 저상트램 국내·외 추진사례』
- Hargreaves, T., Hielscher, S., Seyfang, G., & Smith, A., 2013, “Grassroots innovations in community energy: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niche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5), pp.868-880

Schreier, M., 201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Publications

수원시, 2014, 『2014 수원시 환경백서』

수원시, 2015, 『수원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수원시, 2016, 『수원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81638201&code=620109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82398.html>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ation Policy in Suwon City

Kim Gyu-Hwan · Lee Seok-Jin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e research on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ation policy in Suwon when it comes to time for local governments facing to respond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There are many important factors in implementing and enforcing policies, but it is also important how the citizen accept policies. For these reasons, the texts written by citizen in relation to trams, electric vehicles, bicycles, and ecological traffic on the bulletin board of Suwon City Hall was analyzed using QCA methodology. Based on the analysis, the sub-codes were derived and the resultant top coding of the coding frame is showing acceptance of policy, unacceptance of policy and opinion for policy.

By considering public transportation, local government's strong drive for policy make it possible to gain citizen's support, while enormous time and expense and ineffici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introducing them prevent citizens from accepting policies in trams and electric vehicles. The improvement on bicycle road conditions,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ctivities make citizens to accept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or conditions on bike lane prevent citizens from accepting policies. This suggests that citizen need to eliminate the potential risk factors of bicycle roads.

Finally, active support of 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 among the concerned groups and positive changes of the villages make the citizens to accept the policy in ecological transportation. On the contrary,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make citizens cannot accept the policy, which are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 problem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amage on residential lives. It is needed to find the way for Suwon city to find the solutions making citizens to accept the eco-friendly transportation policy.

〈부 록〉

1) 1단계 코드의 빈도수

4단계 코드	3단계 코드	2단계 코드	1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수용	마을에 긍정적 변화	새로운 공간의 즐거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을	2
			예술이 있는 마을	1
			추억이 있는 마을	1
		의식 변화	마을에 주민들의 관심증가	4
			마을행사에 주민이 적극참여	4
			주민과 공공 사이에 신뢰	1
	사업시행에 공공의지	적극적 공공지원	공공의 마을행사 지원	12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5
		정책도입 기반마련	적극적 공공지원	1
			법 개정	1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계자 간의 소통	활발한 외부활동	6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위치	1
			의견 공유와 수렴과정이 존재	6
			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	9
	쾌적한 교통환경	쾌적한 교통환경	지속적인 주민모임	2
			쾌적한 교통환경	1
	환경문제 인식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	교육적인 에너지 행사	1
			자전거로 출퇴근	1
			즐거운 에너지 행사	1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배움	대중매체를 접함	1
화성열차의 매연			1	
정책 수용 불가	거주민 삶에 피해	거주민 교통에 불편	보행에 비좁은 도로	2
			부족한 주차공간	2
			비좁은 주차공간	1
		거주민 일상생활에 불편	거주민 일상생활에 불편	1
			관광으로 일상생활 침해	2
			주민 삶의 희생을 요구	2
	공공행정의 문제	계획에 문제	막대한 시간과 비용	3
			부족한 불거리	1
			비밀관성	1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4
		관리에 문제	사업 후 관리태만	2
			예산대비 부족한 관심	1
		절차적 정당성 문제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 출입통제	1
			불투명성	2
편의성만 추구	3			
편파적으로 일부만 수혜	2			

4단계 코드	3단계 코드	2단계 코드	1단계 코드	빈도수	
		정책 추진 방법의 불만	무리한 사업 추진	3	
			비협조적인 태도	3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5	
			해결되지 않는 민원	2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불편한 자전거 이용환경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전거 도로	끊어진 자전거 도로	5
				도난에 취약한 자전거 주차장	2
				부족한 자전거 도로	4
				부족한 자전거 반납시설	3
			현재 교통환경에 부적합	위험요소가 많은 자전거 도로	8
				기존 교통체계 정비 필요	2
				기존 교통체계 정비의 어려움	5
				현재 교통환경에 부정적 영향	다른 대중교통 운행방해
	사회적 관계망 상실	관계자 간의 소통 단절	공공의 참여방해	1	
			소수 의견만 반영	2	
			주민 참여 부재	8	
			주민과 공공 사이에 갈등	1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갈등해결이 우선	갈등해결이 우선	2
			양보하는 자세	양보하는 자세	1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6
			지속적 관심	지속적 관심	2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체 기술 제안	대체 기술 제안	4
			새로운 조직 구성	새로운 조직 구성	5
			자전거 등록제 실시	자전거 등록제 실시	1
			제도적 기반 마련	제도적 기반 마련	3
시설의 보충을 요구		자전거 도로 개선	자전거 도로 연결	자전거 도로 연결	4
			자전거 도로 위험요소 제거	자전거 도로 위험요소 제거	2
			자전거 도로 접근성 향상	자전거 도로 접근성 향상	1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 확충	3
정책도입의 근거 제시		기술진보	기술진보	기술진보	2
			비용절감	비용절감	1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	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	4
			건강한 삶	건강한 삶	1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1
			교통체증을 해결	교통체증을 해결	1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		환경보호 외 효과발생	1		
환경보호에 긍정적		환경보호에 긍정적	1		
주민 의견수렴 요청	\사업 철회	다른 사업 추진	다른 사업 추진	2	
		사업 재검토	사업 재검토	2	
		사업 철회	사업 철회	1	

2)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	1															
B	-0.5166 (0.0004)	1														
C	0.3908 (0.0096)	-0.3045 (0.0471)	1													
D	-0.2617 (0.0901)	0.7079 (0.2865)	-0.1663 (0.2865)	1												
E	-0.4388 (0.0032)	0.5524 (0.0001)	-0.2911 (0.0583)	0.1996 (0.1993)	1											
F	-0.2443 (0.1144)	0.7473 (0.375)	-0.1387 (0.375)	0.3979 (0.0082)	0.0329 (0.8339)	1										
G	-0.1196 (0.2449)	-0.0348 (0.4449)	-0.1102 (0.4816)	-0.0588 (0.708)	-0.0949 (0.5452)	-0.0574 (0.7146)	1									
H	-0.2333 (0.1322)	0.0551 (0.7257)	-0.0337 (0.83)	-0.1147 (0.464)	-0.1214 (0.4382)	-0.0464 (0.7674)	-0.0464 (0.7674)	1								
I	0.274 (0.0754)	-0.0834 (0.5951)	0.0207 (0.8954)	-0.0009 (0.9955)	-0.1532 (0.3267)	0.0214 (0.8918)	-0.0464 (0.7674)	-0.0906 (0.5635)	1							
J	0.8052 (0)	-0.3448 (0.0235)	0.255 (0.0988)	-0.1783 (0.2527)	-0.2876 (0.0614)	-0.1709 (0.2731)	-0.0722 (0.6454)	-0.1408 (0.3677)	0.1528 (0.3281)	1						
K	0.4728 (0.0014)	-0.3665 (0.0156)	0.451 (0.0024)	-0.2027 (0.1925)	-0.2742 (0.0752)	-0.1943 (0.2119)	-0.0821 (0.6009)	-0.1601 (0.3052)	-0.1601 (0.3052)	0.0653 (0.6775)	1					
L	0.4281 (0.0042)	-0.2115 (0.1904)	-0.0466 (0.0008)	-0.1094 (0.4851)	-0.1764 (0.2577)	-0.1048 (0.5034)	-0.0443 (0.7779)	-0.0864 (0.5818)	-0.0864 (0.5818)	0.2594 (0.0829)	-0.1527 (0.3284)	1				
M	0.5189 (0.0004)	-0.2005 (0.1972)	0.6 (0)	0.1205 (0.4413)	0.0985 (0.5298)	0.1684 (0.2805)	-0.0607 (0.699)	0.0667 (0.6707)	-0.0258 (0.8694)	-0.1841 (0.2374)	-0.2092 (0.1782)	-0.0026 (0.987)	1			
N	0.1227 (0.4331)	-0.2828 (0.0661)	0.1774 (0.2952)	-0.1571 (0.3143)	-0.2099 (0.1767)	-0.1506 (0.3349)	-0.0636 (0.5259)	-0.1241 (0.6852)	-0.1241 (0.4278)	-0.1678 (0.0001)	0.5764 (0.0033)	-0.1184 (0.4497)	-0.107 (0.2987)	1		
O	0.0082 (0.9586)	-0.2159 (0.1643)	0.7076 (0)	-0.1351 (0.3878)	-0.2179 (0.1604)	-0.1295 (0.4079)	-0.0547 (0.7276)	0.1227 (0.4332)	-0.1067 (0.4959)	-0.0218 (0.8897)	0.1704 (0.2747)	-0.1017 (0.5162)	0.5419 (0.0002)	0.0631 (0.6878)	0.011 (0.9444)	1
Q	0.3893 (0.0099)	-0.2218 (0.1529)	0.0388 (0.805)	-0.1147 (0.464)	-0.1185 (0.2349)	-0.1099 (0.4828)	-0.0464 (0.7674)	-0.0906 (0.5635)	0.7663 (0)	0.1528 (0.3281)	-0.1601 (0.3052)	0.4089 (0.0065)	-0.1184 (0.4496)	-0.0819 (0.6016)	-0.1241 (0.4278)	-0.1067 (0.4959)

*(): 유의확률

*코드명

- 4단계 코드 = A: 정책수용불가 / B: 정책수용 / C: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정책 수용의 3단계 코드 = D: 마을에 긍정적 변화 / E: 사업시행에 공의지 / F: 사회적 관계망 형성 / G: 쾌적한 교통환경 / H: 환경문제인식

- 정책 수용 불가의 3단계 코드 = I: 거주민 삶에 피해 / J: 공공행정의 문제 / K: 교통환경에 문제발생 / L: 사회적 관계망 상실

-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의 3단계 코드 = M: 개선이 필요한 공공행정 / N: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 O: 시설의 보충을 요구 / P: 정책도입의 근거제시 / Q: 주민의견 수렴요청

3) 시민 의견

(1) 트랜 및 전기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① 정책 수용

1번: “평소 덕영대로는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상당히 심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야말로 트램이나 지하철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쾌적한 교통환경)

8번: “수원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수원시 도시철도 1호선"인 "노면전차(트램)"추진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장과 팀장이 직접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활발한 외부활동) (...) “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법 개정)

38번: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이랑 시간을 내서 즐겁게 화성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10여 분간 매연을 계속 마시며 타는데 속이 매스꺼워졌습니다. 왕복으로 탔으니 약 30분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강남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기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둘러보는데 이렇게 많은 매연을 마셔야하다니...”(화성열차의 매연)

② 정책 수용 불가

3번: “그것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본인은 행정조직의 구축과 운영에서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비효율적인 조직구조)

2번: “우리나라는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로의 수축과 팽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이러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일으킬 염려”(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가 트램도입에 의지가 없다”는 점 과 관련법규가 없다는 점이 맹점입니다.“(비협조적인 태도)

33번: “이러한 수원시 구도심 4차선 도로의 환경으로 인해 교통신호 체계 및 횡단보도 조정을 위하여 경찰청과의 협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야 합니다.”(막대한 시간과 비용) “지금 구도심 4차 선로에 있는 촘촘하다고까지 느껴지는 횡단보도들과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으로 인하여 일반 시내버스들의 운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쉽사리 없앨 수도 없습니다.”(기존 교통체계 정비의 어려움) “있는 수많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줄여야 트램 운행에 정시성과 표정운행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기존 교통체계 정비가 필요) “일반 시내 버스들의 운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영향을 받습니다.”(다른 대중교통 운행 방해)

③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번: “저는 그 대안으로 바이트램모달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바이트램모달을 도입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대체 기술 제안) “그런데 문제는 트램 설치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입니다.”(제도적 기반 마련)

3번: “안전교통국과 첨단교통과를 통합하여 대중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새로운 조직 구성)

7번: “서울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륜 전기차의 보조금도 책정 하여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마당에”(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 “저희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실 것 을 건의 합니다.(...)저희 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적극적 참여)

38번: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사용하는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시스템 등으로 사용하면 내리막길에선 배터리를 충전하므로 연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비용절감)

(2)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① 정책 수용

29번: “작년과 올해 본교 자전거 거치대 문제로 몇 차례 만나 뵈었을 때. 오래전과 다름없이 늘 웃으시며 안내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은”(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

30번: “전국 도처에서 자전거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의 자전거 보험 가입 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42번: “어제 행궁에서 에너지절약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8살 딸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에 식구들이 모두 행사장으로 갔습니다.(...)딸아이는 서있기만 해도 움직이는 전동라이더가 신기해하면서 이런 것과 자전거를 이용해야 지구가 건

② 정책 수용 불가

21번: “연무대에서 출발해서 화성행궁까지 자전거타고 돌면서 관광안내를 해주고 싶은데. 연무대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죠.”(부족한 자전거 반납시설)

22번: “자전거 도로의 연결이 중간 중간 끊기는 곳 또한 많습니다.”(끊어진 자전거 도로) “ 시내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같이 사용하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좁은 인도에 어저지로 끼워 넣은 자전거 도로도 많습니다.”(위험요소가 많은 자전거 도로)

24번: “대중교통(특히, 자전거 운반이 가능한 지하철)을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전거 도로)

25번: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면, 인도에 불법주차 된 차를 때문에 불편해서 화가 납니다.”(위험요소가 많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난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 편히 탈 수가 없습니다.”(도난에 취약한 자전거 주차장)

26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탈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수원은 자전거 도로도 매우 짧고”(부족한 자전거 도로)

27번: “광교만 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편파적으로 일부만 수혜)

③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1번: “서울처럼 어플 따릉이나 자전거카드를 대중화시켜서 버스 외 교통수단처럼 사용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좋더라고요.”(타 지자체의 정책을 예로 제시)

22번: “파장저수지 부근과 광교산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서 시민들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시내 여행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자전거 도로 연결)

- 23번: “인도 보도블럭의 턱을 좀 더 까던지 주차장 입구부분의 주차는 제제를 하던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전거 도로 위험요소 제거)
- 24번: “내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의 광고역을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접근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자전거 도로 접근성 향상)
- 25번: “수원시 자체적으로 자전거 등록제 혹은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 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자전거 등록제 실시)
- 27번: “차선을 하나 줄여서라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도로는 외국이나 국내에서나 친환경, 체력단련, 교통체증 해결 등의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환경보호에 긍정적, 건강한 삶, 교통체증해결)
- 31번: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항목에 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데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년에도”(지속적 관심)

(3) 생태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① 정책 수용

- 9번: “2013 생태교통 축제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했던 그날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며 좀 더 지속하고자 하는 바램들과 안타까움에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들의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지속적인 주민모임) “자칫 시민이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어려워하며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다 귀담아 주시는 모습에서 저희들도 힘을 내며 어렵지만 함께 가자라는 의지를 약속했습니다.”(주민의견에 공공이 관심)
- 10번: “동네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생각하니”(마을행사에 주민이 적극참여)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공무원들을 칭찬합니다.”(공공의 마을행사 지원)
- 11번: “축제가 끝나고 앞으로 생태교통 마을의 미래를 위해 모이고 토론하는 모습이 참으로 신선했습니다.”(지속적인 주민모임)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300인의 원탁회의도 주민의 소통의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탁마다 나이 환경 직업이 각기 다른 분들의 열띤 토론에 박수를 보냅니다.”(의견

공유와 수렴과정이 존재) “주민이 정하면 행정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부시장님 말씀도 신뢰가 가고”(공공의 마을행사 지원)

13번: “발표자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 보완하고 외부의 공연단보단 못하든 잘하든 지역 내 주민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마을에 주민들의 관심증가)

14번: “서울과 인천 또 가까운 경기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행궁동에 오시면서 너무도 좋은 감명과 친근함을 느꼈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추억이 있는 마을)

43번: “생태교통마을임을 알리는 곳에 세워진 에어바운스엔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서 기뻐어요.”(아이들이 즐거운 마을) “즐거운 공방무료체험도 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쁘고 감사하네요.”(예술훈이 있는 마을)

② 정책 수용 불가

4번: “특정 1인의 의견만 반영 되어 사업승인 요청까지 진행 되었다 들었습니다.”(소수 의견만 반영) “무엇보다 마을 조성 사업만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제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주민 참여 부재)

6번: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수원시의 해당부서(교통정책과)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진행 계획에 대한 지역 추진주체들과 협의 없이 수원시의 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불투명성) 이 문제가 부각되자 이의제기한 지역 개별 조직 및 주민들에게 이미 의도한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분과를 만들어 참여하라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편의성만 추구)

35번: “행궁동 관련 수원시 정책이 중구 난방인거 같습니다.”(비일관성) “2014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으로 생태교통을 만든다는 허무맹랑한 구호아래 행궁동 도로를 정비를 하며 도로를 좁게 만들고 (보행에 비좁은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너무 비좁습니다.”(비좁은 주차공간)

37번: “자전거 택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민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주민 삶의 희생을 요구) “안 그래도 비좁고 동네가 낙후가 되어있는데 골목 사이사이로 자전거택시를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 관광객이 돌아다니면 거기 거

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사는 곳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관광으로 일상생활 침해)

③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번: “특정 단체와 모든 협의나 사업 진행이 된다면 갈등의 여지가 충분하오니 수원시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이 반영 된 주민 협의체 구성을 요청 드립니다.”(갈등해결이 우선)

34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사업 재검토)

35번: “생태교통마을 지정 철회 요청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 드립니다.”(사업 철회)

37번: “화성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려면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원시 차원에서 행궁동내 개발을 통한 (한옥마을 같은) 인프라 구축을 먼저 고려 부탁드립니다.”(다른 사업 추진)

40번: “행궁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양보하는 자세) 제가 낸 의견도 마을주민 분들의 갈등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지군요.”(갈등해결이 우선)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 편집위원과 해외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2. 논문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
4. 기타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3장 학술지 발간

제7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논문 공모)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원고료 지급) 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1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최초 심사 혹은 재심사 결과 '계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계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 격		탈 락	
계재	수정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 ⑥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⑦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⑧ 논문의 최종계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⑨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계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계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계재' 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7조(윤리규칙) ①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08.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학술지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고자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 윤리 준수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 준수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제9조(타당성)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4장 저자 윤리 준수

제11조(저자의 의무)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② 투고 및 게재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

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자기 표절)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 투고 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 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제19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① 투고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2017.08.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 상의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 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흑백으로 작성하고,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제목 표기

1. 국문논문

- 1)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1) 저자가 1인인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uwon Research Institute),
E-mail: suwonology@suwon.re.kr, Tel: 031-234-5678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suwonology@suwon.re.kr, Tel: 031-234-5678)

-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uwon Research Institute)
-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uw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
(E-mail: Urban@ suwon.re.kr, Tel: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 글로 쓴다.
-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2) 왼쪽 여백만 2칼럼 둔다.
-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주 및 참고 문헌 표기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V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V1998, V「의적의 개념」, V『의적연구』1, V활빈학회, V100-101쪽(쪽
까지만 표시할 때에는 ‘.’(마침표)를 넣지 않는다. 참조라고 명기할 경우에는
'참조.'으로 표기한다)
 - ② 홍길동, V1960, V「의적연구」, V『의적학보』1V; V1998V『의적의 사회사』, V
활빈출판사V재수록, V100쪽
 - ③ 홍길동, V1997, V앞의 논문(앞의 책), V100쪽
홍길동, V1988(a), V앞의 논문, V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⑤ A. V.R. VZolberg, V1972, V“Moment of Madness”V*Politics and Society*
VVol. V2. VNo. V2, Vpp. 183-207
 - ⑥ 조한욱V유희김, V1996, V『고양이 대학살』, V문학과 지성사(Robert V
Darnton, V1984V*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V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
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V百官1V贊成事V“(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원문 이용은 “ ”로 표시)
 - 『세종실록』 권9, V세종V6년V5월V1일(경자)V“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V『壽齋遺稿』「書啓」(소장처, V도서번호)

2. 참고 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편집위원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서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수자 (시인)
정연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성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해외편집위원

임금화 (연변대학교 건축과 교수)

편집간사

이동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12

발행인 | 이재은

편집인 | 박 환

발행일 |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주소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홈페이지 www.suwon.re.kr

전화 031-220-8058 | 팩스 031-220-8060

E-mail suwonology@hanmail.net

인쇄 | (주)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